



2008 선거방송토론백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발간등록번호

34-9760504-080024-14

www.debates.go.kr

2008 선거방송토론백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발간사



2008년은 제17대 대통령선거가 끝난데 이어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치른 해였습니다. 위원회는 그동안 각종 선거방송토론회를 주관해 오면서 공정성 유지와 함께 우리 현실에 적합한 토론진행방식을 꾸준히 개발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유능한 사회자의 확보 및 관심 있는 토론주제의 선정 등 유권자 중심의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사회의 건전하고 올바른 토론문화 정착을 위하여 대학생토론회 등을 주관해 왔으며 각종 선거방송토론 관련 세미나 등 다양한 학회 및 단체 활동을 통하여 선거방송토론의 방법과 중요성을 알리고자 힘써왔습니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서는 전국적으로 380여회의 후보자 토론회가 큰 무리없이 개최되었으며 미디어 시대에 핵심적인 선거운동방식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중계방송 시간대가 방송국 사정에 의하여 유권자가 쉽게 시청이 가능한 시간대에 방영되지 못한 점, 그리고 일부 후보자가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들어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토론회가 되도록 제도적 장치의 개선과 함께 행정적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2008년 선거방송토론 백서는 우리 위원회가 한 해동안 추진하였던 사업을 비롯하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물론, 정책토론회 등의 녹취록 등 많은 정보를 수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백서가 선거방송토론 제도 발전과 토론문화의 확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연구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그동안 백서 발간에 큰 역할을 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12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이 성 춘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설명회 개최 (2008. 2. 21, 국회의원회관)



1차 토론회 (2008. 1. 31, MBC, 원내대표)



2차 토론회 (2008. 2. 29, KBS, 정책위의장)



3차 토론회 (2008. 3. 13, MBC, 당대표)

정당정책토론회



설명회 (2008. 11. 20, 국회)



전문위원회의 (2008. 11. 21, 위원회의실)



1차 토론회 (2008. 6. 27, KBS, 정책위의장 등)



2차 토론회 (2008. 11. 28, KBS, 정책위의장 등)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설명회 개최 (2008. 3. 29, 위원회의실)



제1차 후보자토론회 (2008. 3. 31, MBC)



후보자 토론회 (2008. 4. 1, MBC)



제2차 후보자토론회 (2008. 4. 4, KBS)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등



(2008. 4. 4, 서울 강동구)



(2008. 4. 1, 부산 해운대구 · 기장군갑)



(2008. 4. 5, 광주 남구)



(2008. 4. 7, 대전 대덕구)



(2008. 4. 1, 울산 남구)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등



(2008. 4. 2, 경기 부천시 원미구)



(2008. 4. 2, 강원 동해시·삼척시)



(2008. 3. 31, 충북 제천시)



(2008. 4. 1, 충남 부여군 · 청양군)



(2008. 4. 4, 전남 무안군 · 신안군)



(2008. 3. 28, 경북 상주시)

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2008. 10. 21, 울산 울주군)



(2008. 5. 30, 경남 거창군)

교육감선거 후보자토론회



(2008. 7. 25, 서울)



(2008. 7. 16, 전북)

위원회의 개최



위원회의 (2008. 1. 9, 중앙)



위원회의 (2008. 3. 21, 서울 중구)

설명회 개최 및 토론회 홍보



설명회 (2008. 3. 26, 전북 전주완산구갑)



토론회 개최홍보 (2008. 3. 27, 부산 해운대구)

워크숍 개최



위원워크숍 (2008. 4. 17~18, 대명비발디)



시·도 사무국장 워크숍 (2008. 4. 23~24, 청풍리조트)

선거방송토론 전문인 토론대회



1차 대회 (2008. 9. 18~19, 충무마리나리조트)



2차 대회 (2008. 10. 1~2, 단양대명콘도)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결승전 (2008. 11. 1, 송실대학교)



수상자 기념사진 (2008. 11. 1, 송실대학교)

목 차

Contents



제1장 | 2008년 선거방송토론 개관

제 1 절 일반현황	33
제 2 절 목표 및 중점과제	38

제2장 | 2008년 선거방송토론 주요성과

제 1 절 정책토론회 관리

1. 개요	41
2. 주요 추진실적	42
가.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관리	42
나. 정당정책토론회 관리	64
다. 정당관계자 및 방송관계자 업무협의회 개최	82

제 2 절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관리

1. 개요	83
2. 주요 추진실적	84
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관리	84
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등 관리	100
다. 위원 워크숍 개최	114
라. 시·도 사무국장 워크숍 개최	115

목 차

제 3 절 선거방송토론의 원활한 주관·진행

1. 개 요 117
2. 주요 추진실적 117
 - 가. 각급 토론위원회 조직 정비 117
 - 나. 여론조사 공표 자료 수집 118
 - 다. 여론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주제 수집 및 지원 120
 - 라. 진행방식 개발 및 지역별 토론의제 발굴·조사 142
 - 마.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신설 144

제 4 절 선거방송토론의 실무연수·연구·평가

1. 개 요 146
2. 주요 추진실적 146
 - 가. 토론 실무관계자 위탁 연수 146
 - 나. 선거방송토론 전문인 토론대회 개최 149
 - 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토론 효과분석 연구 150
 - 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토론 주제·진행방식 발간 154
 - 마. 각종 선거방송토론 관련 세미나 개최 후원 154

제 5 절 바람직한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1. 개 요 156
2. 주요 추진실적 156
 - 가. 대학생 토론대회를 위한 체험학습 156
 - 나. 제4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개최 157

제 6 절 재·보궐선거 및 교육감선거 토론회 등 관리

1. 개 요 160
2. 주요 추진실적 160
 - 가. 상·하반기 재·보궐선거 토론회 등 관리 160
 - 나. 교육감선거 토론회 관리 163

Contents



부 록

제18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결과 167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결과 193

정책토론회 큐시트

-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197

-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198

-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199

-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200

-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201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큐시트

- 제1차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205

- 제2차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206

- 비초청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207

정책토론회 녹취록

-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211

-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247

-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282

-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315

-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354

목 차

Contents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녹취록

- 제1차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395
- 제2차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436
- 비초청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476

선거방송토론 관련 법규

- 공직선거법 515
- 정당법 520
-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521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운영규정 533

그림목차

Contents



[그림 1] 관심있는 현안 분야	70
[그림 2] 경제/노동분야 TV토론 과제	70
[그림 3] 교육/환경분야 TV토론 과제	71
[그림 4] 사회/여성/복지분야 TV토론 과제	71
[그림 5] 경제분야 TV토론 과제	73
[그림 6] 유권자들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91
[그림 7] 정치 분야	92
[그림 8] 교육 분야	92
[그림 9] 경제 분야	93
[그림 10] 복지 분야	93
[그림 11] 정치분야 현안(서울특별시)	121
[그림 12] 행정분야 현안(서울특별시)	122
[그림 13] 경제분야 현안(서울특별시)	122
[그림 14] 복지분야 현안(서울특별시)	123
[그림 15] 일반사회분야(서울특별시)	123
[그림 16] 국회의원선거 정책의제 현안(대구광역시)	126
[그림 17] 교육분야 현안(대전광역시)	127
[그림 18] 지역 현안(대전광역시)	128
[그림 19] 경제/노동/복지/과학 분야(강릉시)	129
[그림 20] 지역현안의 TV토론 과제(동해·삼척시)	131
[그림 21] 사회/교육/문화/여성 분야의 TV토론 과제(속초시·고성군·양양군)	132
[그림 22]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의 TV토론 과제(원주시)	133
[그림 23] 지역현안의 TV토론 과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135
[그림 24] 경제/노동/복지/과학 분야(춘천시)	136
[그림 25]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의 TV토론 과제(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137
[그림 26] 사회/교육/문화/여성 분야의 TV토론 과제(홍천군·횡성군)	138
[그림 27] 교육분야(충청남도)	139
[그림 28] 방송토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영역(경상남도)	140
[그림 29] 방송토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영역(경상남도)	141
[그림 30] 지역의제 수집현황	144

표목차

[표 1-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현황	35
[표 1-2] 위원명단(중앙)	36
[표 1-3] 선거방송토론의 종류 및 개최횟수	37
[표 2-1]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현황	42
[표 2-2]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참석 토론자 현황	44
[표 2-3]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준비소위원회 구성 현황	45
[표 2-4]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사회자 선정현황	46
[표 2-5]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의제선정 조사 개요	47
[표 2-6]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의제선정 정량조사 결과	48
[표 2-7]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의제선정 조사 개요	49
[표 2-8] 정량조사 결과	50
[표 2-9]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의제선정 조사 개요	51
[표 2-10]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의제선정 정량조사 결과	52
[표 2-11]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	55
[표 2-12]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	57
[표 2-13]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	58
[표 2-14]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설명회 개최현황	59
[표 2-15]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시청률	63
[표 2-16] 정당정책토론회 개최현황	64
[표 2-17] 정당정책토론회 참석 토론자 현황	66
[표 2-18] 정당정책토론회 준비소위원회 구성 현황	67
[표 2-19] 정당정책토론회 사회자 선정현황	68
[표 2-20]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의제선정 조사 개요	69
[표 2-21]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의제선정 조사 개요	72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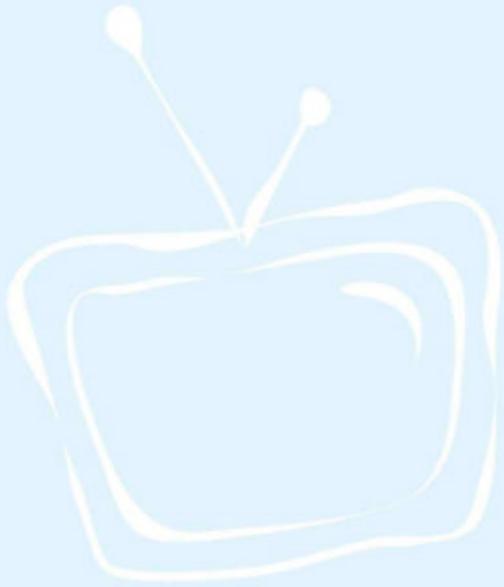
[표 2-22]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토론 주제 및 진행방식	76
[표 2-23]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토론 주제 및 진행방식	77
[표 2-24] 정당정책토론회 설명회 개최현황	78
[표 2-25] 정당정책토론회 시청률	81
[표 2-26] 선거별 개최횟수 및 초청대상자	84
[표 2-27] 법 제82조의2제4항의 규정(초청요건 해당)에 따른 토론회 개최현황	85
[표 2-28] 법 제82조의2제5항의 규정(초청요건 비해당)에 따른 토론회 개최현황	85
[표 2-29] 후보자토론회 준비소위원회 구성 현황	87
[표 2-30]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수 현황	87
[표 2-31] 정당별 직전 대통령선거 득표율 현황	88
[표 2-32] 정당별 직전 선거의 득표율 현황	88
[표 2-33] 제18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의제선정 조사 개요	90
[표 2-34]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주제 및 진행방식(초청대상)	95
[표 2-35]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주제 및 진행방식(비초청대상)	96
[표 2-36] 후보자토론회 시청률	99
[표 2-37] 선거방송토론 개최 현황	101
[표 2-38] 합동방송연설회 개최 사유별 현황	102
[표 2-39] 일자별 개최 현황	104
[표 2-40] 중계방송시간대별 개최 현황	105
[표 2-41] 방송사별 중계현황	106
[표 2-42] 중계방법 현황	107
[표 2-43] 선거방송토론 참석지역 후보자수 현황	108
[표 2-44] 참석 후보자수별 대담·토론회 개최현황	109
[표 2-45] 불참후보자가 있었던 토론회 등 개최 현황	110

표목차

Contents



[표 2-46] 각 정당별 불참자 현황	110
[표 2-47] 토론회 불참 사유 현황	111
[표 2-48] 사회자 선정 현황	111
[표 2-49] 토론회 진행방식 사용 내역	113
[표 2-50] 공약을 포함한 토론회 수	113
[표 2-51] 위원회별 전국단위 언론기관 배정내역	119
[표 2-52] 시·도별 여론조사 현황	121
[표 2-53] 후보자에게 가장 질문하고 싶은 내용(부산광역시)	124
[표 2-54]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현안문제(부산광역시)	125
[표 2-55] 토론의제 수집 방법	142
[표 2-56] 토론의제 분야별 현황	143
[표 2-57] 신설위원회 현황	145
[표 2-58] 집합연수 교육기간	147
[표 2-59] 집합연수 교육과정 편성표	148
[표 2-60] 선거방송토론 전문인 토론대회 개최 개요	149
[표 2-61] 대진표 및 주제	150
[표 2-62] 선거방송토론 효과분석 조사개요	151
[표 2-63] 제4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결승전 토론요지	158
[표 2-64] 제4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수상내역	159
[표 2-65] 선거방송토론 개최 현황	160
[표 2-66]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방송토론 개최 현황	161
[표 2-67]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방송토론 개최 현황	162
[표 2-68] 교육감선거 선거방송토론 개최 현황	163



제1장

2008년 선거방송토론 개관

제 1 절 일반현황

제 2 절 목표 및 중점과제



제 1 장

2008년 선거방송토론 개관



2008년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자로 하여금 방송을 통하여 자신의 정책·공약을 널리 알리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유권자들에게는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을 TV를 통해 비교·검증하여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하도록 돕기 위하여, 지난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토론회 등을 주관·진행한데 이어 곧바로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등의 개최를 하였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08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등의 공정하고 완벽한 주관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하였다.

첫째, 사전에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중계방송사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토론회 일정을 적정하게 분산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둘째, 초청대상요건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회자후보군 관련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여 초청대상 후보자 및 사회자를 엄정하게 선정하도록 하였다.

셋째, 여론조사 등을 통한 다양한 의제를 수집하고 의제의 성격 등에 부합되는 토론방식을 적절하게 채택하고 토론진행표 및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검토하여 작성하도록 하는 등 토론의제 및 진행방식 결정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다.

넷째, 중계방송사와 유기적으로 제작을 협의하고 세트 제작·토론진행·방송화면 구성 등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발언시간을 엄정하게 통제하며 사건·사고 예방 대비

책을 강구하여 차질없는 토론회를 중계하도록 하였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정강·정책과 국정현안 등에 대해 상호 비교할 수 있는 3차례의 공직선거정책토론회와 선거운동기간중 국회의원후보자의 소신·철학과 정견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총 383회의 후보자토론회 등을 주관하였다.

특히,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이후에는 각종 선거에서의 대담·토론회 등의 원활한 주관·진행을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7(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근거하여 지역구 국회의원선거구단위로 65개의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신설하였다.

또한, 국고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을 초청하여 국민에게 각 정당의 정강·정책과 국정현안 등에 대하여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차례의 정당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상·하반기 재·보궐선거 및 교육감선거의 각종 방송토론을 차질없이 준비·관리하였다.

선거방송토론 담당자들의 실질적인 방송토론실무를 위하여 위탁연수 기회를 마련하여 선거방송토론 실무능력을 배양하였고, 2008년 처음으로 선거방송토론 전문인 토론대회를 개최하여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 실무자들의 실제 토론능력 제고를 위해 힘썼다.

아울러, 대학생들의 올바른 토론관 확립하고 토론문화 저변을 확산하며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민주시민 토론문화 육성사업인 대학생토론대회 체험학습 및 제4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제 1 절 일반현황

1. 설치목적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와 「공직선거법」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정책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제외)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2. 직 무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올바른 선거토론문화의 정착을 위해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의 관리, 민주시민 토론문화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연수, 토론회 기법 연구 및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등 관리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자 대담·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후보자의 정견, 공약 및 능력, 자질을 상호 비교 할 수 있는 기회를 유권자들에게 마련하는 동시에 후보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의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대담·토론회 및 교육감선거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고,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정책토론회 개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해 주요 정당을 초청하여 정당의 정강, 정책 및 국정현안에 대한 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 자당의 정강, 정책 및 국정현안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알릴 있는 정당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다. 민주시민 토론문화 육성 등을 위한 교육, 연수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민주시민토론문화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교육, 연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전국대학생토론대회 및 토론캠프 등을 개최하여 대학생들의 선거방송토론에 관한 관심제고 및 올바른 토론관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토론위원회 실무자들의 교육, 연수를 통해 보다 나은 토론회 운영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라. 토론회 등의 기법 연구 및 개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토론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기법연구, 개발을 위해 유관 학회 및 단체들과의 다양한 교류, 협력 및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세미나 개최 및 후원, 각종 연구용역 등을 주관함으로써 지속적인 토론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각종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조 직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04년 3월 12일 법의 개정에 따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1개),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16개),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181개)가 구성·설치되었으며,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법 제8조의7의 근거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별로 각각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전국적으로 65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추가로 신설되어 2008년말 현재 총 266개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설치되어있다.

[표 1-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현황

(2008. 12. 31 현재)

구 분	위원회수	지 역 별															
		전 국															
중 앙	1																
시·도	16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구·시·군	249	25	16	8	10	5	5	5	44	18	13	17	15	22	24	20	2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및 공영방송사가 추천하는 자 각 1인과 방송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한 자를 포함하여 9인(중앙은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임기는 3년이다.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정당의 당원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고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표 1-2] 위원명단(중앙)

(2008. 12. 31 현재)

직 위	성 명	현 직	추 천 기 관
위원장	이 성 춘	언 론 인	자 체
상임위원	김 현 태	공 무 원(정치학 박사)	자 체
위 원	홍 진 표	(사)시대정신 이사	한 나 라 당
	박 동 영	KBS 이사	민 주 당
	김 찬 태	KBS 시사보도팀 PD	K B S
	성 경 섭	MBC 논설위원실 부국장	M B C
	임 동 훈	방 송 인	방 송 위 원 회 1)
	최 항 순	교 수	학 계
	윤 상 일	변 호 사	대 한 변 협

사무기구로는 중앙과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고 있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8. 2. 29 시행)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기관이 방송위원회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변경되었다.

4. 선거방송토론의 종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공직선거정책토론회와 정당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교육감선거에서 후보자 대담·토론회를,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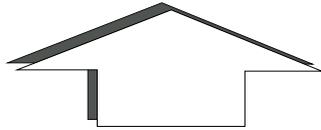
[표 1-3] 선거방송토론의 종류 및 개최횟수

주 관	종 류	선 거 별	개 최 시 기	횟 수	근 거 법 률
중 앙	후 보 자 초 청 대 담 · 토 론 회	대 통 령 선 거	선 거 운 동 기 간 중	3회 이상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비 려 대 표 국 회의 원 선 거	"	2회 이상	
	공 직 선 거 정 책 토 론 회	임기만료선거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일까지	월1회 이상	「공직선거법」 제82조의3
	정 당 정 책 토 론 회	-	연 중 (단,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제외)	연2회 이상	「정당법」 제39조
시 · 도	후 보 자 초 청 대 담 · 토 론 회	시·도지사선거, 비례대표시·도 의 원 선 거	선 거 운 동 기 간 중	1회 이상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교육감선거			「지방교육자치 에 관한 법률」
구·시·군	대 담 · 토 론 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 장 선 거	"	1회 이상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 2 절 목표 및 중점과제

목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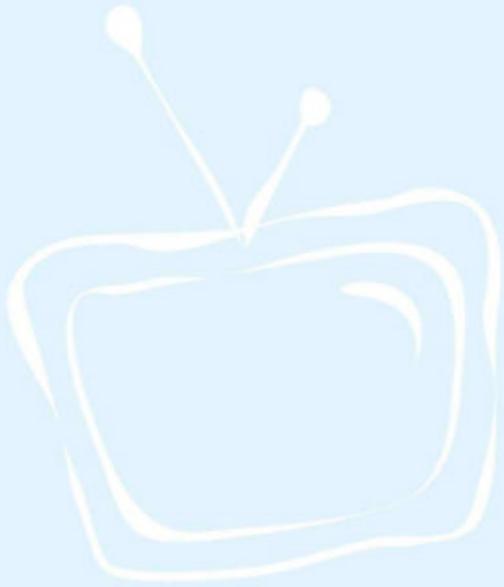
정책중심의 올바른 선거방송토론문화 정착



중점과제

- 정견 · 정책 중심의 선거방송토론 관리
- 방송토론의 효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연구
- 정당의 정책을 바로 알리기 위한 정당정책토론회 관리
- 민주시민 토론문화 확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08년 목표를 【정책중심의 올바른 선거방송토론 문화 정착】으로 삼고 ▲ 정견·정책중심의 선거방송토론 관리 ▲ 방송토론의 효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연구 ▲ 정당의 정책을 바로 알리기 위한 정당정책토론회 관리 ▲ 민주시민 토론문화 확산을 중점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였다.



제2장 2008년 선거방송토론 주요성과

- 제 1 절 정책토론회 관리
- 제 2 절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관리
- 제 3 절 선거방송토론의 원활한 주관·진행
- 제 4 절 선거방송토론의 실무연수·연구·평가
- 제 5 절 바람직한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 제 6 절 재·보궐선거 및 교육감선거 토론회 등 관리



제 2 장 2008년 선거방송토론 주요성과



제 1 절 정책토론회 관리

1. 개 요

공직선거정책토론회는 법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규정에 의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90일(2008. 1. 10)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2008. 3. 24)까지의 기간 중 월 1회씩 총 3회를 개최하였다. 참여대상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과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며 정당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토론자로 하였다.

정당정책토론회는 「정당법」 제39조(정당정책토론회)의 규정에 의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90일(2008. 1. 10)부터 선거일(2008. 4. 9)까지를 제외한 기간 중 2회를 개최하였다. 참여대상은 국고보조금을 배분받는 정당으로 중앙당의 대표자와 중앙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를 토론자로 하였다.

2. 주요 추진실적

가.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관리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의 대표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초청하여 선거와 관련한 정책·공약의 상호 비교·검증을 위한 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월 1회씩 총 3회를 개최하였다.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현황은 [표2-1]과 같다.

[표 2-1]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현황

구 분	제 1 차	제 2 차	제 3 차
개최일시	2008. 1. 31(목) 10:00~12:00(120분)	2008. 2. 29(금) 10:00~12:00(120분)	2008. 3. 13(목) 23:20~ 3. 14(금) 01:20(120분)
개최장소	MBC A 스튜디오	KBS TS-4 스튜디오	MBC D 스튜디오
토론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대표자
토론분야	정 치	경 제	선 거
사회자	신 울(명지대 교수)	엄길청(경기대 교수)	박선영(동국대 교수)
중계주관방송사	MBC	KBS	MBC
중계방송	KBS, MBC 동시생중계		

토론회 준비를 위해 직원별 사무분장을 철저히 하고 긴급현안 등에 대하여는 전 직원 집중지원체제로 운영하면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동시에 구축하였으며, 사회자 선정 등 토론회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완벽하게 준비하도록 추진하였다.

1) 개최일시·장소 등 결정

토론회의 개최일시·장소 등 결정은 공영방송사(KBS, MBC) 편성부서 및 토론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자 및 시간대 등을 협의하였으며 중계방송시설명 등을 접수받아 위원회의에서 결정하였다. 중계방송은 공영방

송사(KBS, MBC)가 동시에 생중계하였다.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의 개최일정 등은 제17대 대통령선거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실시 간격이 짧아 개최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개최시기와 토론주제가 잘 조합되어 적절한 시기에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개최장소도 방송국 스튜디오를 활용함으로써 중계주관방송사의 편의를 증대시켰다.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는 1. 31(목) 10:00 ~ 12:00 MBC A 스튜디오에서 개최하였으나 중계방송시간대가 오전으로 결정되어 많은 국민들이 시청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의 개최일정 등은 각 정당에서 총선을 준비하는 등 체제 정비 기간에 토론회가 개최되는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의 개최일시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계방송사와 사전 결정하였다.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는 2. 29(금) 10:00 ~ 12:00 KBS TS-4 스튜디오에서 개최하였으나 주관방송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외부개최를 위한 장소 발굴·예약 및 취소 등의 과정은 아쉬운 점으로 평가된다.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의 개최일정 등은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와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준비일정의 중간 기간이었으나 후보자토론회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3. 13(목) 23:20 ~ 3. 14(금) 01:20 MBC D 스튜디오에서 개최하였다.

2) 초청대상 정당(토론자) 선정

초청대상 정당은 법 제82조의3제1항의 근거하여 중앙선관위로부터 정당별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득표율과 국회로부터는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수를 통보받았다.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는 제17대 대통령선거이후 각 정당별로 체제 정비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초청 토론자를 원내대표로 하고 각 정당의 협조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토론회 개최에 임박하여 '창조한국당'이 불참 통보를 하고, '한나라당'은 토론자의 변경을 통보하여 토



론회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다.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는 토론주제가 경제분야인만큼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기여한다는 취지에 맞추어 각 정당의 정책위의장을 토론자로 하고 각 정당의 협조를 이끌어냈다.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공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에 정당의 대표자를 초청하여 관련 의제를 토론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언론과 유권자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또한, 각 정당의 당대표가 모두 참석하여 선거방송토론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 현황은 [표2-2]와 같다.

[표 2-2]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참석 토론자 현황

구 분	소 속 정 당	직 위	성 명
제1차	대통합민주신당	원 내 대 표	김 효 석
	한 나 라 당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	김 형 오
	민 주 노 동 당	원 내 대 표	천 영 세
	민 주 당	원 내 대 표	최 인 기
제2차	통 합 민 주 당	정 책 조 정 위 원 장	우 제 창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의 장	이 한 구
	민 주 노 동 당	정 책 위 의 장 (서 리)	이 영 순
	자 유 선 진 당	정 책 위 의 장	권 선 택
	창 조 한 국 당	정 책 위 의 장	강 재 규
제3차	통 합 민 주 당	당 대 표	손 학 규
	한 나 라 당	대 표 최 고 위 원	강 재 섭
	민 주 노 동 당	당 대 표	천 영 세
	자 유 선 진 당	총 재	이 회 창
	창 조 한 국 당	당 대 표	문 국 현

3) 소위원회 구성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준비소위원회는 토론회의 주제 및 진행방식의 작성과 검토를 위하여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을 포함한 방송사 추천 위원 등 총 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준비소위원회 구성 현황은 [표2-3]과 같다.

[표 2-3]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준비소위원회 구성 현황

구 성 위 원	운 영 기 간	직 무
상임위원, 김찬태, 성경섭, 최항순, 정영환	의결후 ~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종료시까지	· 진행방식(안) 작성 · 토론주제(안)작성 · 질문사항(안) 작성

운영기간은 의결한 날로부터 3차례의 공직선거정책토론회가 종료되는 날까지였으며 공직선거정책토론회의 진행방식 및 주제의 결정, 질문사항 선정에 이르기까지 안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지는 등 활발하게 운영되었다.

4) 사회자 선정

토론회 사회자는 위원으로부터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자를 위원회의에서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회자에게는 토론자 발언시간, 타이머 표시 방법, 토론방향 등을 요약·정리하여 별도 자료로 제공하고 토론주제와 진행방식에 대하여 안내하는 등 무리없는 토론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사회자도 각 정당에 대한 질문사항을 제출하고 질문사항 선정을 위한 준비소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사회자는 사회자 역할이 강조되는 토론진행방식을 활용함에 따라 그동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등을 다수 진행한 경험을 갖고 있는 신율(명지대) 교수를 선정하여 토론 진행에 안정성을 높였다. 다만, 선호추천방식의 사회자 선정방법은



사회자 후보군에 대한 심도 있는 자질 판단과 새로운 인물의 진입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사회자는 경제 분야의 전문성과 방송 진행 경험이 많은 엄길청(경기대) 교수를 선정하였으며,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는 토론회의 다양한 진행 방법을 모색하고 국민들에게 토론회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키는 새로운 토론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여성 진행자인 박선영(동국대) 교수를 선정하였다.

다만,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의 경우 여성 사회자의 선정은 시청자의 관심을 유발시키고 토론회 분위기를 새롭게 만드는 측면에서는 추진할 만한 시도였다고 평가되었으나, 사회자가 토론회를 진행함에 있어大本상의 주요 문장을 생략하거나 사회자의 사견을 발언하는 경우와 발언시간 초과시 이를 제지하지 못하는 등의 진행상의 문제점이 생긴 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특히, 일부 토론회 사회자가 토론회 진행 직후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사회자 선정현황은 [표2-4]와 같다.

[표2-4]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사회자 선정현황

구분	토론분야	사회자	
		성명	전공
제1차	정치	신 울(명지대 교수)	정치학
제2차	경제	엄길청(경기대 교수)	경제학
제3차	선거	박선영(동국대 교수)	법학

5) 주제 선정

토론주제는 의제분과 전문위원과 준비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 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3회에 걸쳐 개최되는 것을 고려하여 분야별 심층토론을 유도하기 위해 제1차 토론회는 정치 분야, 제2차 토론회는 경제 분야, 제3차 토

론회는 선거 분야로 구분하였다.

주제를 선정하기에 앞서 국내 유명 리서치 회사에 토론분야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의뢰하여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경제단체 및 노동단체 등 각 분야의 다양한 관심사 및 이슈에 대한 조사로 여론을 충실히 수렴하는 등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서 활용할 의제 선정을 위한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각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통해 정책토론회에 적합한 주제를 선정하였고 정성조사에서 파악된 주요 현안들에 대한 정량조사를 통해 중요도를 측정하여 의제 선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①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전국의 정치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정치분야에 대한 심층면접조사(정성조사) 및 전화면접조사(정량조사) 등을 [표2-5]와 같이 실시하였다.

[표 2-5]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의제선정 조사 개요

구분	정성조사	정량조사
조사대상	정치 관련 전문가	정치 관련 전문가
조사지역	전국	전국
조사방법	심층면접(Depth Interview)	전화면접조사 및 팩스/이메일 조사
유효표본	35명	100명
조사기간	2008년 1월 7일 ~ 1월 16일	

정성조사 결과, 정치·행정 분야 정책 현안으로는 ‘의회정치 정상화 방안’,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의견’, ‘대통령 임기, 권력구조 등 개헌에 대한 입장’,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방안’,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견해’가 추천되었다.

외교·안보분야 정책 현안으로는 '주변 강대국과의 외교정책 방향', '북한 핵문제 해결 방안', '국가보안법에 대한 의견', '대북정책 방향',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견해'가 추천되었다.

지방자치 분야 정책 현안으로는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견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근절 방안',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방안', '주민참여권(주민소환, 주민발안 등) 확대 방안'이 추천되었다.

정량조사[표2-6] 결과, 정치 분야의 세부 현안에 대한 중요도를 살펴보면, '주변 강대국과의 외교정책 방향'이 8.09점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방안'(8.07점),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의견'(7.71점),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견해'(7.70점), '의회정치 정상화 방안'(7.67점) 등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방자치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그 중에서는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7.01점)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표 2-6]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의제선정 정량조사 결과

토론분야	정책현안별 세부 의제	중요도(점)
정치·행정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의견	7.71
	의회정치 정상화 방안	7.67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견해	7.22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방안	7.03
	대통령 임기, 권력구조 등 개헌에 대한 입장	6.86
외교·안보	주변 강대국과의 외교정책 방향	8.09
	북한 핵문제 해결방안	8.07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견해	7.70
	대북정책 방향	7.63
	국가보안법에 대한 의견	5.80
지방자치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7.01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방안	6.8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근절 방안	6.78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견해	6.72
	주민 참여권(주민소환, 주민발안 등) 확대 방안	6.40

②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전국의 경제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경제분야에 대한 심층면접조사(정성조사) 및 전화면접조사(정량조사) 등을 [표2-7]과 같이 실시하였다.

[표 2-7]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의제선정 조사 개요

구분	정성조사	정량조사
조사대상	경제 관련 전문가	경제 관련 전문가
조사지역	전국	전국
조사방법	심층면접(Depth Interview)	전화면접조사 및 팩스/이메일 조사
유효표본	33명	105명
조사기간	2008년 1월 14일 ~ 2월 11일	

정성조사 결과, 새 정부 경제비전에 대한 정책 현안으로는 '7%대 경제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경제의 양극화 문제 해소 방안',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경제 정책',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향후 정책 방향', '동북아 경제공동체 발전을 위한 전략',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새로운 정부의 신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및 국제금융시장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지역 발전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방안', '지역경제 침체 해결 방안 및 국내경기 활성화 방안' 등이 추천되었다.

고용·기업·부동산 분야에 대한 정책 현안으로는 '공기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방안', '기업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견해', '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평가', '비정규직 법안 개정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 '신성장동력 사업 육성 및 발굴 방안', '실업자문제 해소를 위한 고용 창출 방안', '중소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차세대성장산업으로써 금융산업 육성을 위

한 정책 방향' 등이 추천되었다.

정량조사[표2-8] 결과, 경제 현안에 대한 주요 토론 의제로 '경제의 양극화 문제 해소 방안'(7.66점)에 대한 논의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7.51점)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경제 정책'(7.30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및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하기 위한 방안'(7.21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동북아 경제공동체 발전을 위한 전략'(5.88점),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향후 정책 방향'(6.11점) 등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게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의제분야별로는 경제 현안으로 새 정부의 경제비전을 핵심의제(Core)로 설정하여 "실업자문제 해소를 위한 고용 창출 방안"과 "경제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질문하고, 더불어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같은 일반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2-8] 정량조사 결과

토론 분야	정책현안별 세부 의제	중요도(점)
새 정부의 경제비전	경제의 양극화 문제 해소 방안	7.66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7.51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경제 정책	7.30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및 국제금융시장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7.21
	새로운 정부의 신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7.16
	지역경제 침체 해결 방안 및 국내경기 활성화 방안	7.10
	FTA에 대한 향후 계획 및 이에 따른 국내 산업보호 전략	7.09
	7%대 경제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6.82
	한반도 대운하사업의 경제적 효과	6.71
	지역 발전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방안	6.65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향후 정책 방향	6.11
	동북아 경제공동체 발전을 위한 전략	5.88

고용·기업·부동산	실업자문제 해소를 위한 고용 창출 방안	7.71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	7.46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평가	7.40
	신성장동력 사업 육성 및 발굴 방안	7.35
	기업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견해	7.31
	중소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7.11
	공기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방안	6.89
	비정규직 법안 개정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	6.87
	차세대성장산업으로써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6.84
	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6.58

③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전국의 선거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선거분야에 대한 심층면접조사(정성조사) 및 전화면접조사(정량조사) 등을 [표2-9]와 같이 실시하였다.

[표 2-9]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의제선정 조사 개요

구분	정성조사	정량조사
조사대상	선거 관련 전문가	선거 관련 전문가
조사지역	전국	전국
조사방법	심층면접(Depth Interview)	전화면접조사 및 팩스/이메일 조사
유효표본	30명	100명
조사기간	2008년 2월 12일 ~ 2월 27일	

정성조사 결과, 정치·선거 제도 관련 정책 의제로는 ‘공천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방안’, ‘정치자금 투명성 확대 방안’,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방안’, ‘사회적 약자의 정치 참여 확대 방안’, ‘선거공영제도 정착 및 확대 방안’ 등이 추천되었다.

선거운동 관련 정책 의제로는 ‘후보자 검증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 ‘매니페스토 활성화 방안’, ‘유권자 참여 확대 방안’,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전 차단 방안’, ‘새로운 정당과 후보자에게 공정한 선거운동 기회보장 방안’ 등이 추천되었다.

세부 현안에 대한 중요도를 살펴보면, 정치·선거제도 중 ‘공천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중요도가 8.2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정치·선거제도 중 ‘정치자금 투명성 확대 방안’(7.79점), 선거운동 중 ‘후보자 검증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7.65점), 정치·선거제도 중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방안’(7.52점)과 ‘사회적 약자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7.22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10]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의제선정 정량조사 결과

토론 분야	정책현안별 세부 의제	중요도(점)
정치·선거제도	공천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방안	8.29
	정치자금 투명성 확대 방안	7.79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방안	7.52
	사회적 약자의 정치 참여 확대 방안	7.22
	선거공영제도 정착 및 확대 방안	7.10
	대통령 임기 및 권력구조에 대한 견해	6.82
	국회의원 의석수에 대한 견해	6.62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견해	6.58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한 견해	6.08
선거운동	후보자 검증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	7.65
	매니페스토 활성화 방안	7.06
	유권자 참여 확대 방안	7.05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전 차단 방안	7.03
	새로운 정당과 후보자에게 공정한 선거운동기회보장 방안	6.97
	바람직한 정치 후원회 운영 방안	6.60
	UCC 등 사이버 선거운동의 올바른 방향	6.29
	낙천, 낙선운동의 합리화 방안	5.83

선거 현안으로 투명한 선거를 핵심의제로 설정하여 ‘공천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방안’과 ‘정치자금 투명성 확대 방안’을 우선적으로 질문하고, 더불어 ‘후보자 검증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과 같은 일반 국민이 후보를 선택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앞선 결과를 바탕으로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의 주제로 “정부조직 개편의 쟁점”으로 선정, 토론회 당시 국민적 관심사인 정부조직 개편문제를 다루어 이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과 견해차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주요 쟁점에 따른 “경제 기능, 통일·안보 기능, 교육등 기타”의 소주제를 지정·활용하여 일관된 흐름에 따라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다만,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문제에 대한 각 정당의 정책방향과 철학에 대한 논쟁보다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안에 대한 비판 및 평가가 주를 이루어 균형 있는 토론이 되지 못하였고, 대주제와 소주제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나, 본래의 기획취지와는 달리 주제간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토론내용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었던 점은 아쉬웠다는 평가가 있었다.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의 주제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정책 방향”을 대주제로 “대기업 정책”, “중소기업 정책”을 소주제로 하여 선정하였다. 이 토론회에서는 ‘기업 정책 방향’에 대한 각 정당의 정책을 비교할 기회를 제공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책으로 세분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기획하였다.

특히, 주요 정당별로 찬반이 분명한 쟁점토론이 가능하여 토론회 목적에 부응하는 주제였다는 평가가 있었다. 다만, 기업정책의 큰 방향에 관한 토론보다는 민생문제를 언급하는 등 토론의 초점이 다소 흐려지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토론내용 중 「금산분리」 등은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이어서 관심을 끌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그 토론범위가 넓어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의 주제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정치적 의미와 정책선거의 실현”을 대주제로, “정책선거의 실현 방안, 깨끗한 선거의 실현 방안”을 소주제로 선정하여 제18대 국회와 관련한 ‘안정론’과 ‘견제론’이라는 뚜렷한 쟁점을 가지고 토론함으로써 위원회가 의도한 바가 달성된 토론회였다는 평가가 있었다.

특히, ‘네거티브 선거 방지법’ 추진, ‘정책선거 토론회 확대’ 등 깨끗한 선거와 정책선거 실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된 점은 토론의 질을 높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소주제 간의 상호 연관성이 있어 쟁점이 부각되지 않는 점은 아쉬웠다는 평가가 있었다.

6) 진행방식 결정

진행방식은 토론의 성격과 참석 토론자 수를 고려하여 진행방식의 공정성·적합성 등을 진행방식분과 전문위원회의 및 준비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의에서 결정하였다.

공직선거정책토론회의 진행방식은 전형적인 토론 진행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각계 의견을 반영, 제한적 시간총량제 토론방식(자유토론형)을 새롭게 도입·활용함으로써 토론회의 유연성과 역동성을 높일 수 있었다. 이러한 토론 진행방식은 3차례의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 모두 도입·활용하였다.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진행방식은 토론주제에 대한 총론과 각론(소주제 3개)으로 나누어 총 4라운드로 진행하였다. 총론 토론에서는 사회자의 공통질문에 모든 토론자가 1분씩 답변한 후 토론순서에 의한 토론자부터 주제에 대한 발언을 시작하였으며, 첫 토론자의 발언 종료 즈음 발언하고자 하는 토론자는 사회자에게 발언권을 요청하게 하였다. 각 소주제 토론에서도 사회자의 주제설명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토론자당 2분의 맺음말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토론 시간이 남는 경우 예비질문을 활용하지 않고 맺음말 시간을 조정하여 사용토록 하였다.



세부적인 규칙으로는 모든 토론자에게 매 라운드당 30초씩 10회의 발언권을 부여하되, 각 토론자는 연속하여 3회(1분30초) 사용 가능하나, 연속 4회(2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모든 토론자는 다른 토론자의 발언중에는 발언할 수 없으며 토

론자의 발언시간이 30초를 경과하면 연속 2회(발언시간이 60초를 경과하면 연속 3회)로 간주하였다. 특히, 토론자가 본인의 발언횟수(총 10회)를 확인할 수 있는 계측판을 세트 앞면에 설치하고, 전임 직원이 직접 발언횟수를 계측하였다.

[표 2-11]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

토론주제	정부조직 개편의 쟁점	
진 행 방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질문(30초) ➔ 김형오/최인기/김효석/천영세 토론자 답변(각 1분) • 최인기 토론자부터 자유토론식으로 발언 ※ 토론자당 총 5분내(발언권은 30초씩 총 10회)에서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 	
	소주제1	경제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주제 설명(30초) ➔ 김효석 토론자부터 발언 ※ 토론자당 총 5분내(발언권은 30초씩 총 10회)에서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 	
	소주제2	통일·안보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주제 설명(30초) ➔ 천영세 토론자부터 발언 ※ 토론자당 총 5분내(발언권은 30초씩 총 10회)에서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 	
	소주제3	교육등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주제 설명(30초) ➔ 김형오 토론자부터 발언 ※ 토론자당 총 5분내(발언권은 30초씩 총 10회)에서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 ※ 자유토론시 발언권은 3회 연속 사용(1분30초) 가능하나, 4회 연속 사용 불가능 ※ 미리 사회자에게 신호를 보내 발언권을 얻으며, 발언 신청자가 없을 경우 사회자가 발언시간을 많이 가진 토론자 중에서 적절히 지명 		
소요시간	86분	
맺음말	• 최인기/김효석/천영세/김형오 토론자(각 2분)	
소요시간	8분	

제한적 시간총량제의 도입·활용은 토론의 유연성과 역동성을 높일 수 있었으나 1회 발언시간을 30초 단위로 지정함에 따라 마지막 30초 남은 발언 기회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발언시간 초과에 사회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였다. 또한, 토론자가 진행방식에 대한 적응이 어려워 당초 의도와는 달리 좌석순서에 따라 발언하여 내용에 대한 교차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쉬웠다.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진행방식은 토론주제에 대한 총론과 각론(소주제 2개)으로 나누어 총 3라운드로 진행하였다. 총론 토론에서는 사회자의 공통질문에 모든 토론자가 1분30초씩 답변한 후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된 토론순서에 의한 토론자부터 주제에 대한 발언을 시작하였으며, 첫 토론자의 발언 종료 즈음 발언하고자 하는 토론자는 사회자에게 발언권을 요청하게 하였다. 각 소주제 토론에서도 사회자의 주제설명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토론자당 2분의 맺음말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토론 시간이 남는 경우 예비질문을 활용하지 않고 맺음말 시간을 조정하여 사용토록 하였다.



세부적인 규칙으로는 모든 토론자에게 매 라운드당 1분씩 5회의 발언권을 부여하되, 각 토론자는 연속하여 2회(2분) 사용은 가능하나, 연속 3회(3분)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모든 토론자는 다른 토론자의 발언중에는 발언할 수 없으며 토론자의 발언 시간이 1분을 경과하면 연속 2회 발언으로 간주하였다. 특히, 토론자가 본인의 발언횟수(총 5회)를 확인할 수 있는 계측판을 세트 앞면에 설치하고, 직원이 발언 횟수를 계측하였다.

또한,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서 도입했던 제한적 시간총량제를 보완하여 활용하였으며 1회 발언시간을 1분 단위로 지정함에 따라 1차 토론회시 30초 적용에 비하여 안정감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화면분할, 반응샷 또는 폴샷 등의 기법으로 다양한 화면을 제공하고 주제 및 토론자를 자막으로 소개하는 등 시청자가 토론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다만, 토론자가 선거운동성 발언을 하거나 진행방식을 숙지하지 못하고 사회자에

게 되묻는 등 설명회에서 안내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예정된 방송 종료시간보다 조기에 토론이 종료될 상황에서 특정 정당의 토론자에게만 논쟁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한 답변 기회를 부여하여 다른 정당으로부터 편파 진행이라는 오해가 발생한 점은 개선해야 한다는 평가가 있었다.

[표 2-12]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

토론주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정책 방향	
진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질문(30초) → 권선택/이한구/강재규/우제창/이영순 토론자 답변(각 1분30초) • 이한구 토론자부터 자유토론식으로 발언 ※ 토론자당 총 5분내(발언권은 1분씩 총 5회)에서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 	
	소주제1	대기업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주제 설명(30초) → 강재규 토론자부터 발언 ※ 토론자당 총 5분내(발언권은 1분씩 총 5회)에서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 	
	소주제2	중소기업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주제 설명(30초) → 우제창 토론자부터 발언 ※ 토론자당 총 5분내(발언권은 1분씩 총 5회)에서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 	
소요시간	83분	
맺음말	• 이영순/권선택/이한구/강재규/우제창 토론자(각 2분)	
소요시간	10분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진행방식은 각 정당의 대표자가 토론자로 참석하는 점을 고려하여 토론자당 1분30초씩의 기조연설 기회를 부여하고,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와 동일하게 토론주제에 대한 총론과 각론(소주제 2개)으로 나누어 총 3라운드로 진행하였다. 총론 토론에서는 사회자의 공통질문에 모든 토론자가 1분30초씩 답변한 후 토론순서에 의한 토론자부터 주제에 대한 발언을 시작하였으며, 첫 토론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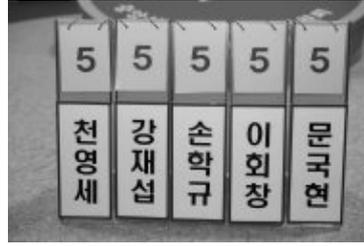
발언 종료 즈음 발언하고자 하는 토론자는 사회자에게 발언권을 요청하게 하였다. 각 소주제 토론에서도 사회자의 주제설명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토론자당 2분의 맺음말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토론 시간이 남는 경우 예비질문을 활용하지 않고 맺음말 시간을 조정하여 사용토록 하였다.

[표 2-13]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

기조연설	• 문국현/이회창/손학규/강재섭/천영세 토론자(각 1분30초)	
소요시간	7분30초	
토론주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정치적 의미와 정책선거의 실현	
진행방식	• 사회자 질문(30초) → 이회창/손학규/강재섭/천영세/문국현 토론자 답변(각 1분30초)	
	• 손학규 토론자부터 자유토론식으로 발언 ※ 토론자당 총 5분내(발언권은 1분씩 총 5회)에서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	
	소주제1	정책선거의 실현 방안
	• 사회자 주제 설명(30초) → 강재섭 토론자부터 발언 ※ 토론자당 총 5분내(발언권은 1분씩 총 5회)에서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	
	소주제2	깨끗한 선거의 실현 방안
소요시간	• 사회자 주제 설명(30초) → 천영세 토론자부터 발언 ※ 토론자당 총 5분내(발언권은 1분씩 총 5회)에서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	
	82분30초	
맺음말	• 문국현/이회창/손학규/강재섭/천영세 토론자(각 1분)	
소요시간	5분	

세부적인 규칙으로는 모든 토론자에게 매 라운드당 1분씩 5회의 발언권을 부여하되, 각 토론자는 연속하여 2회(2분) 사용은 가능하나, 연속 3회(3분)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모든 토론자는 다른 토론자의 발언중에는 발언할 수 없으며 토론자의 발언시간이 1분을 경과하면 연속 2회 발언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토

론자가 본인의 발언횟수(총 5회)를 확인할 수 있는 계측판을 세트 앞면에 설치하고, 위원회 직원이 발언횟수를 계측하였다. 특히, 사회자와 토론자에게 토론자 발언시간, 타이머 표시 방법, 토론방향 등을 요약·정리하여 별도 자료로 제공하여 무리없이 토론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7) 설명회 개최

운영규정 제10조(대담·토론회의 공표 등)에 의거 토론회 공표후 지체없이 토론회에 참석할 토론자를 대상으로 토론회 개최 및 중계방송 일정,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 토론자의 준수사항 안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에는 토론자 대리인 등이 참석하여 토론 주제·진행방법, 토론회 진행시 유의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하고 토론자의 좌석 및 발언 순서를 추첨하였으며, 토론자의 좌석 및 발언순서 추첨은 소속 정당의 국회 다수 의석 순에 따라 추첨 순서를 추첨하고 그 추첨순서에 따라 토론자별 좌석과 발언 순서를 동시에 추첨하여 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명회 개최현황은 [표 2-14]와 같다.

[표 2-14]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설명회 개최현황

구 분	일 시	장 소
제 1 차	2008. 1. 23(수) 16:00	3층 위원회의실
제 2 차	2008. 2. 21(목) 16:30	국회 의원회관
제 3 차	2008. 3. 6(목) 11:30	국회 귀빈식당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의 설명회는 2008. 1. 23(수)에 각 토론자의 대리인 4인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설명회에서는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참석 토론자의 좌석 및 발언순서를 추첨하여 A: 한나라당 안상수, B: 민주당 최

인기, C: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D: 민주노동당 천영세로 결정하였다.

발언순서 결정에 따라 토론진행방식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토론회 당일 일정과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였다.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의 설명회는 2008. 2. 21(목)에 각 토론자의 대리인 5인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 125호에서 개최하였



다. 설명회에서는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참석 토론자의 좌석 및 발언순서를 추첨하여 A: 자유선진당 권선택, B: 한나라당 이한구, C: 창조한국당 강재규, D: 통합민주당 최인기, E: 민주노동당 이영순으로 결정하였다. 설명회 개최후 정당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토론회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의 설명회는 2008. 3. 6(목) 각 토론자의 대리인 5인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하였다.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토론자의 좌석 및 발언순서를 추첨하여 A: 창조한국당 문국현, B: 자유선진당 이회창, C: 통합민주당 손학규, D: 한나라당 강재섭, E: 민주노동당 천영세로 결정하였다. 특히, 제18대 국회의원선거가 한달여 남짓 남아있는 상황에서 선거운동기간중에 개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 개최일시 협의 상황 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8) 토론회 개최 홍보

위원회, 중앙선관위 및 각 시·도선관위 홈페이지에 팝업 파일을 게시하여 네티즌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여론주도층에 대한 이메일 발송 등 다양한 방법과 계기를 이용하였다. 또한, 토론회 개최를 공표한 즉시 중앙선관위 공보담당관실을 통하여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중계방송사에 토론회 개최일시·장소 등을 광고 또는

자막방송을 협조 요청하였다.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 전에 주요 언론사 보도국장, 국회 사진기자단과 방송기자단에 취재를 안내하여 중앙언론(KBS-라디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과 연합뉴스, 인터넷 매체 등에 보도되었고, 개최 후에 방송(KBS, YTN)과 신문(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내일신문) 및 연합뉴스 등에 토론장면 사진과 토론내용 등이 보도된 것은 적극적인 업무추진의 결과로 평가되었다.

9) 질문사항 선정

토론회의 질문사항은 여론조사 등 자료를 근거로 질문사항의 객관성·공정성·형평성 등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질문사항을 검토하고 소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으며, 사회자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작성된 질문사항은 토론회 개최일 전일에 전체 위원회의에서 의결로 결정하였다.

10) 토론회 장소 설비

토론회 개최장소는 주관방송사 스튜디오를 활용함에 따라 방송사측과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는 등 개최 장소가 품격 있게 설비 될 수 있도록 협의하였다.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의 장소 설비는 사회자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형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안정감과 균형감을 부여하였고, 세트 배경으로 검은 장막 대신 목재를 이용하여 품격 있게 제작함으로써 토론회의 분위기를 살렸다. 다만, 진행방식 특성상 각 토론자별 발언횟수 및 시간관리가 중요함에도 수기방식의 관리에 그쳤는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 시스템 도입 등으로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의 장소 설비는 산뜻한 세트 배경과 사회자를 토론자들의 끝에 배치하여 토론회장에 입체감과 안정감을 주었다. 다만, 정당 관계자 또는 방송사 직원들의 토론회장 출입이 잦아 토론회장이 다소 산만하였다는 평가가 있었다.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의 장소 설비는 세트 배경을 녹색 계통으로 처리하여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시원한 느낌을 갖도록 한 점은 새로운 시도였다는 평가가 있었으며, 참석한 토론자에게 기념볼펜을 제공하고 실내화 비치 및 큐시트 및 진행개요를 좌석에 비치하는 등 토론자의 편의를 배려함으로써 참석자들에게 편안한 자리가 되도록 하였다.



11) 토론회 진행

토론회 개최시각 40분전까지 토론자의 토론회장 도착을 안내하였으며, 중계주관방송사 제작프로듀서 주관 하에 개최시각 20분전에 최종 예행연습을 실시하였다. 토론회 진행은 토론진행표 및 대본에 의하여 진행하되 발언시간을 표시하는 기기 등을 적절히 설치하여 활용하고 방송화면은 중계방송사가 모든 토론자에게 공평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토론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토론회에 참석하는 정당관계자에게 출입증을 발급하였고 중계주관방송사 안전관리팀에 출입자 관리 등 질서유지에 관한 협조를 구하였다.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시 자유토론의 발언단위를 1분으로 적용함으로써 1차 때의 30초 적용에 비하여 안정감 있게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사회자 매뉴얼'을 별도로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사전 준비 및 기획의도에 따른 진행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화면분할, 반응·폴샷 등의 기법으로 다양한 화면을 제공하고 주제 및 토론자를 자막으로 소개하여 시청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다만, 토론자가 선거운동성 발언을 하거나 진행방식을 숙지하지 못하고 사회자에게 묻는 등 설명회에서 안내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토론자가 토론회장에 지연 도착하거나 분장 인원의 부족으로 토론회장 입장이 늦어지고 리허설이 지연된 점은 아쉬웠다. 또한, 예정된 방송종료 시간보다 조기에 토론이 종료될 상황에서 특정 정당의 토론자에게만 논쟁이 예상되는 내용(대운하)에 대한 답변기회를 부여(3분)하여 다른 정당으로부터 편파 진행이라는 오해가 발생하였다.

12) 토론회 시청률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 직후 공영방송사(KBS, MBC)의 협조로 시청률 조사기관인 AGB닐슨미디어리서치와 TNS미디어코리아의 토론회 관련 시청률을 파악하였다.

[표 2-15]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시청률

조사기관	1차 토론회		2차 토론회		3차 토론회	
	KBS 1	MBC	KBS 1	MBC	KBS 1	MBC
AGB닐슨 미디어리서치	3.2%	1.4%	2.3%	1.2%	2.9%	2.1%
TNS 미디어코리아	2.0%	2.3%	1.6%	1.2%	2.7%	2.1%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시청률은 2007년도에 개최된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총시청률(AGB : 3.8%, TNS : 2.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선거기간 중 개최되는 후보자토론회보다 관심도와 시청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보다 적극적인 언론보도 추진과 퀴즈 경품 제공 등 시청률 제고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의 시청률은 토론자의 낮은 인지도, 오전 시간 개최 등으로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총시청률(AGB : 4.6%, TNS : 4.3%)보다 낮게 나타났다.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의 시청률은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총 시청률(AGB : 3.5%, TNS : 2.8%)보다는 높게 조사되었다. 중앙언론사가 선거방송토론 내용을 보도하는 등 다른 토론회와 달리 관심을 보인 점을 보면, 선거를 앞두고 당대표가 참석한 토론회로서 어느 정도 성공적인 개최였는 평가가 있었다.

나. 정당정책토론회 관리

정책토론을 통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요 정당의 정책위원장을 초청, 각 정당의 정책 등을 상호 비교·검증을 위한 정당정책토론회를 총 2회 개최하였다. 정당정책토론회 개최 현황은 [표2-16]과 같다.

[표 2-16] 정당정책토론회 개최현황

구 분	제 1 차	제 2 차
개최일시	2008. 6. 27(금) 10:00~12:00(120분)	2008. 11. 28(금) 10:00~12:00(120분)
개최장소	KBS TS-4 스튜디오	KBS TS-4 스튜디오
토 론 자	정책위의장	정책위의장 등
토론분야	경 제	경 제
사 회 자	엄 길 청(경기대 교수)	엄 길 청(경기대 교수)
중계주관방송사	KBS	
중계방송	KBS, MBC 동시생중계	

토론회 준비를 위해 직원별 사무분장을 통한 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하고 공영방송사 편성·제작관계자 및 각 정당의 토론회 실무관계자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토론회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완벽하게 준비하도록 추진하였다.

1) 개최일시·장소 등 선정

토론회의 개최일시·장소 등 결정은 공영방송사(KBS, MBC) 편성부서 및 토론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자 및 시간대 등을 협의하였으며 중계방송시설명 등을 접수받아 위원회의에서 결정하였다.

정당정책토론회는 3차례의 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곧바로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하반기 중에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나 하반기 중 2차례의 토론회 개최는 정기국회 일정상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상반기 중 제1차 토론회와 하반기 중 제2차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 정당의 국정현안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는 조기에 중계방송사와 개최일정을 협의할 수 있었고 협의 결과에 따라 정당에도 준비를 안내하여 6. 27(금) 10:00 ~ 12:00 KBS TS-4 스튜디오에서 개최하였으며 중계방송은 공영방송사(KBS, MBC)가 동시에 생중계하였다. 그러나 중계방송시간이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로 결정되어 많은 국민들이 시청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었다.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는 KBS 가을 정기 프로그램 개편에 따라 다소 늦게 중계방송사와 개최일정을 확정하였으나 협의 결과에 따라 정당에도 준비를 안내하여 11. 28(금) 10:00 ~ 12:00 KBS TS-4 스튜디오에서 개최하였으며 중계방송은 공영방송사(KBS, MBC)가 동시에 생중계하였다.

제18대 국회 정기회 및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를 11. 28(금)에 개최한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금융위기 속에서 실물경제 침체 등 경제 전반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시기에 정당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국민과 정치권과의 의사소통이 필요한 적절한 시기였다고 보아진다.

2) 토론자(참석대상 정당) 선정

참석대상 정당은 토론회 개최일로부터 기산하여 가장 최근에 경상보조금이 지급내역을 확인하고 위원회의에서 결정하였다. 결정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해당 정당에 통지하고 참석승낙서를 접수하였다.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는 토론자를 선정함에 있어 정당관계자 간담회를 별도로 개최하여 토론회를 상반기에 추진하는 배경 등을 안내하고 '토론자 참석승낙서'를 조기에 제출받아 결정하였다.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는 한국 경제에 대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정책위의장이나 대표가 지정한 전문가 등이 토론자로 선정됨으로써 토론의 완성도를 더 높일 수 있었으며 특히, 그동안 위원회가 토론자를 지정(대표자, 정책위의장 등) 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로 토론자의 범위를 확대함으

로써 토론의 전문화 내지 특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2차례의 정당정책 토론회 참석 토론자 현황은 [표2-17]과 같다.

[표 2-17] 정당정책토론회 참석 토론자 현황

구 분	소 속 정 당	직 위	성 명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의 장	임 태 희
	통 합 민 주 당	정 책 위 의 장	최 인 기
	자 유 선 진 당	정 책 위 의 장	류 근 찬
	친 박 연 대	정책담당최고위원	엄 호 성
	민 주 노 동 당	정 책 위 의 장 서 리	이 정 희
	창 조 한 국 당	정 책 위 의 장	강 재 규
	진 보 신 당	정 책 위 부 의 장	윤 영 상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한 나 라 당	수석정조위원장	최 경 환
	민 주 당	정 책 위 의 장	박 병 석
	자 유 선 진 당	정 책 위 부 의 장	임 영 호
	친 박 연 대	정 책 위 의 장	엄 호 성
	민 주 노 동 당	정 책 위 의 장	이 정 희
	창 조 한 국 당	정 책 위 의 장	이 용 경
	진 보 신 당	정 책 위 의 장	노 중 기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는 전체적으로 참석 토론자 수가 많아 깊이 있는 토론에 한계가 있었고, 일부 정당의 경우는 '정책위의장'이 공식 또는 출장으로 정책담당 최고위원(친박연대), 정책위의장 서리(민주노동당), 정책위부의장(진보신당)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아쉬웠다는 평가가 있었다.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는 토론참가자를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로 변경함에 따라 토론의 전문화는 이를 수 있었지만 시청자의 관심을 끌지 못할 우려도 있으므로 전문성과 인지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관리가 요구되었다.

3) 소위원회 구성

정당정책토론회 준비소위원회는 토론회의 주제 및 진행방식의 작성과 검토를 위하여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을 포함한 방송사 추천 위원 등 총 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준비소위원회 구성 현황은 [표2-18]과 같다.

[표 2-18] 정당정책토론회 준비소위원회 구성 현황

구 성 위 원	운 영 기 간	직 무
상임위원, 김찬태, 성경섭, 최항순, 정영환	의결후 ~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종료시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방식(안) 작성 · 토론주제(안)작성 · 질문사항(안) 작성
상임위원, 김찬태, 성경섭, 최항순, 윤상일	의결후 ~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종료시까지	

운영기간은 의결한 날로부터 2차례의 정당정책토론회가 종료되는 날까지였으며 정당정책토론회의 진행방식 및 주제의 결정, 질문사항 선정에 이르기까지 안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지는 등 활발하게 운영되었다.

4) 사회자 선정

각종 토론회의 사회 경험이 있는 인물을 대상으로 사회자 후보군 발굴계획을 수립하여 추가로 구성하고, 위원들에게 동영상 등을 확보·제공하는 등 새로운 사회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으로부터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자를 위원회의에서 선정하였다.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와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사회 자로는 정책토론회 진행 경험이 많고 경제 전문가인 엄길청(경기대) 교수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회자에게는 '사회자 매뉴얼'을 제공하여 준비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시간총량제 등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토론회가 안정감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하였다. 정당정책토론회 사회자 선정현황은 [표2-19]와 같다.

[표2-19] 정당정책토론회 사회자 선정현황

구분	토론분야	사회자	
		성명	전공
제1차	경제	엄길청(경기대 교수)	경제학
제2차	경제		

사회자 선정 후 사회자에게는 토론자 발언시간, 타이머 표시 방법, 토론방향 등을 요약·정리하여 별도 자료로 제공하고 토론주제와 진행방식에 대하여 안내하는 등 무리없는 토론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사회자도 주제 선정을 위한 준비소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질문사항을 별도로 제출하였다.

5) 주제 선정

토론회의 주제는 먼저, 국내 유명 리서치 회사에 토론분야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의뢰하여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경제단체 및 노동단체 등 각 분야의 다양한 관심사 및 이슈에 대한 조사와 함께 각종 단체 등에 주제 추천 요청을 하는 등 의제 선정을 위한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제분과 전문위원과 준비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 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하였다.

전문가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각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통해 정책토론회에 적합한 주제를 선정하였고 정성조사에서 파악된 주요 현안들에 대한 정량조사를 통해 중요도를 측정하여 의제 선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①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경제·교육·복지분야 등에 대한 전문가 의제 추천을 통한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표 2-20]과 같이 실시하였다.

[표 2-20]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의제선정 조사 개요

구분	전문가 의제 추천	일반국민 여론조사
조사대상	교육, 경제, 복지 등의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 단체	전국의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표본크기	47개	500명
표집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4.4%
조사방법	사전 E-mail 발송 후, 전화 접촉 조사	전화면접조사
응답률	-	11.6%
조사기간	2008년 5월 27일 ~ 6월 3일	2008년 6월 4일 ~ 5일

전문가 의제 추천 조사 내용은 경제·복지·교육·기타 분야에서 다루어야 할 추천 주제 및 질문사항이며, 일반국민 여론조사의 조사 내용은 가장 관심있는 현안 분야와 경제·노동분야, 교육·환경분야, 사회·여성·복지분야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 및 기타 과제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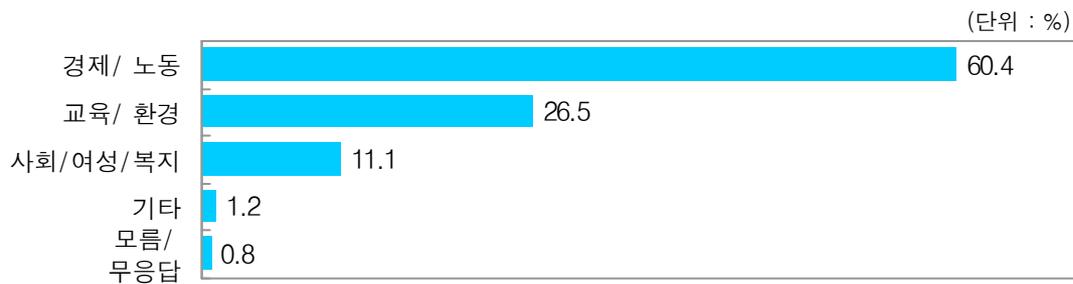
전문가 의제 추천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경제분야 주제는 ‘고유가 대책’, ‘공기업 민영화’, ‘FTA 추진’, ‘일자리 창출’, ‘환율 안정’, ‘미국 쇠고기 협상’, ‘경제 생산성 향상’, ‘대운하 사업’, ‘물가 안정’, ‘중소기업 육성’, ‘부동산 가격안정’을 경제분야 주제로 추천하였으며, 이 밖에 ‘경제정책’, ‘동북아 공동시장’ 등을 경제분야 주제로 추천하였다.

다음으로 교육분야 주제는 ‘고교 자율화’, 사교육비 경감, ‘영어 공교육 강화’, ‘대입 자율화’, ‘공교육 강화’, ‘대입제도 개선’이 교육분야 주제로 추천하였으며, 이 밖에 ‘교원 문제’, ‘기초학문 진흥’,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등을 교육분야 주제로 추천하였다.

복지분야 주제는 ‘저소득층 지원’, ‘고령화 대책’, ‘의료보험 민영화’, ‘장애인 생활 지원’, ‘연금제도 개선’, ‘정부차원의 복지 확대’, ‘사회양극화 해소’가 복지분야 주제로 추천하였으며, 이 밖에 ‘문화 복지’,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 인프라 확충’ 등을 복지분야 주제로 추천하였다. 그 외 기타 분야 주제는 ‘환경산업 육성’,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문화재 보존 대책’ 등이 추천되었다.

일반국민 여론조사는 전국의 만19세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4.4%이다. 응답자들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그림 1]로 '경제/노동분야'라는 응답이 60.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육/환경분야(26.5%)', '사회/복지/여성분야(11.1%)' 순이었다.

[그림 1] 관심있는 현안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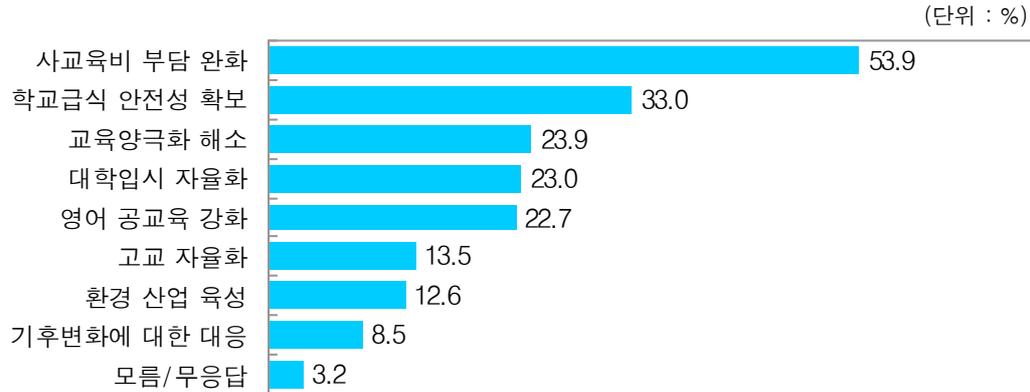
경제/노동분야 TV토론 과제를 살펴보면, 경제/노동분야의 중요한 TV토론 과제[그림 2]로는 '고유가대책 등 물가 안정'이라는 응답이 60.9%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한미 쇠고기 협상(37.5%)', '일자리 창출(31.3%)' 등의 순이었으며, '중소기업 육성'(10.9%)과 '환율 안정'(7.6%)이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그림 2] 경제/노동분야 TV토론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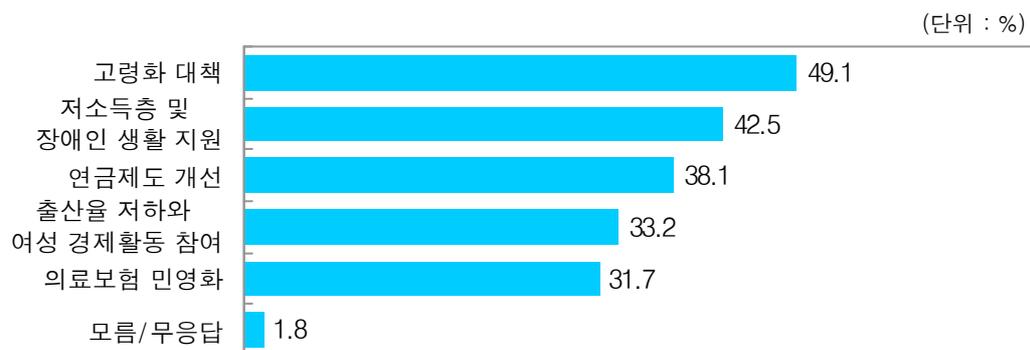
교육/환경분야의 중요한 TV토론 과제[그림 3]로는 '사교육비 부담 완화'라는 응답이 53.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33.0%), '교육 양극화 해소'(23.9%) 등의 순이었다. '환경 산업 육성'(12.6%)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8.5%)이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그림 3] 교육/환경분야 TV토론 과제



사회/여성/복지분야의 중요한 TV토론 과제[그림 4]로는 '고령화 대책'이라는 응답이 49.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저소득층 및 장애인 생활 지원'(42.5%), '연금제도 개선'(38.1%), '출산율저하와 여성 경제활동 참여'(33.2%), '의료보험 민영화'(31.7%) 등의 순이었다.

[그림 4] 사회/여성/복지분야 TV토론 과제



그밖에 다루어야 할 의제로는 '쇠고기 수입 협상' 관련 사항이 4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물가 안정'(31명), '정치문화 개선'(16명), '경제 살리기'(16명), '국민 의견 수렴'(13명), '사교육비 부담 경감'(9명), '대운하 사업'(9명), '서민생활 안정'(9명), '고유가 대책 마련'(8명) 등의 순이었다.

②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의제선정을 위한 여론조사는 정치/외교/안보, 경제분야 등에 대한 전문가 의제 추천을 통하여 일반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하여 [표 2-21]과 같이 실시하였다.

전문가 의제 추천 조사 내용은 정치·외교/안보·경제 분야에서 다루어야 할 추천 주제 및 질문사항이며, 일반국민 여론조사의 조사 내용은 경제분야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 경제 각 분야에서 궁금한 점, 그 외 경제분야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 및 기타 과제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표 2-21]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의제선정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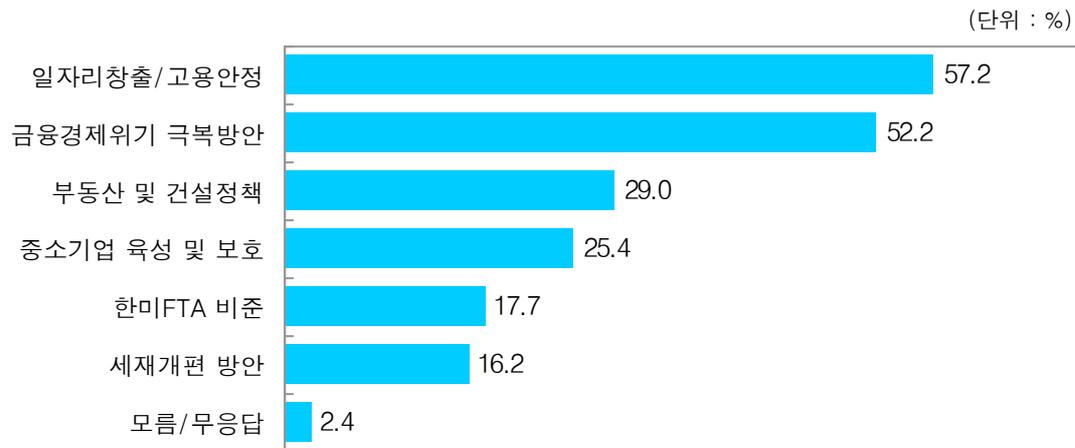
구분	전문가 의제 추천	일반국민 여론조사
조사대상	정치/외교/안보, 경제 전문가	전국의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표본크기	33명	500명
표집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4.4%
조사방법	사전 E-mail 발송 후, 전화 접촉 조사	전화면접조사
응답률	-	13.4%
조사기간	2008년 10월 31일 ~ 11월 7일	2008년 11월 10일

전문가 의제 추천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경제분야 주제는 부동산 및 건설 정책, '세계개편 방향', '금융·경제 위기 극복 방안', '한미 FTA 비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중소기업 육성 및 보호'등을 경제분야 주제로 추천하였다. 다음으로 정치분야 주제는 '수도권 규제완화 및 균형발전', 지방행정체제 개편, '개헌문제', '지방정부 개혁문제', '공공기관 민영화',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 등을 정치분야 주제로 추천하였다. 외교/안보 주제는 '대북문제', '대미관계', '동북아문제', '대일관계' 등을 추천하였다.

일반국민 여론조사는 전국의 만19세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4.4%이다.

경제 분야의 중요한 TV토론 과제[그림 5]로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이라는 응답이 57.2%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금융·경제 위기 극복방안'(52.2%), '부동산 및 건설정책'(29.0%), '중소기업 육성 및 보호'(25.4%) 등의 순이었다. '세계개편 방안'(16.2%)과 '한미FTA 비준'(17.7%)이 중요한 토론 과제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그림 5] 경제분야 TV토론 과제



정당정책토론회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경제 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나 궁금한 내용을 물어본 결과, 부동산 및 건설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건설 시장 상황'(22명), '주택문제'(17명), '부동산 세제 문제'(9명), '정책 및 규제'(3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세제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세제개편 내용'(20명), '구체적인 방안'(5명), '세금 부과 대상 및 내역'(4명) 등으로 나타났다.

금융·경제위기 극복방안에 대해서는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18명), '금융시장 현황'(16명), '금융정책'(7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 육성 및 보호에 대해서는 '지원 정책'(9명), '금융지원'(7명), '제한 정책'(2명)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 대책'(42명), '고용복지 및 안정화'(29명), '실업문제'(14명) 등으로 나타났다. 한미FTA 비준에 대해서는 '재협상'(11명), '협상 주제에 대한 조건 및 대안'(9명),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7명) 등으로 나타났다.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의 주제인 '한미 쇠고기 협상 문제'는 2개월 가까이 촛불집회가 계속되고 미국과의 추가 협상이 토론회 개최일전 5일에 이루어 졌음에도 야당이 수용하지 않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았으며, 정당별로 국회 등원 문제, 재협상 및 국민 투표 실시가 제안되는 등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기여한 성과가 있었다.

또 다른 주제인 '고유가 등 물가안정 대책'은 원유 등 원자재 가격 폭등이 서민 생활에까지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물가안정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고 활발하게 논의되는 등 토론회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85개 단체에 주제와 질문사항을 요청하였으나 3개 단체만 추천하였고, '한미 쇠고기 협상 문제'는 여당과 6개 정당 간에 대립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의 주제로는 국민이 피부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물경제와 실업분야에 대한 의제를 선정함으로써 정치권이 그에 대한 대책을 국민에게 직접 알리는 정치토론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여권은 감세와 규제완화, 야권은 부가세 인하,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SOC 투자자원 직접지원, 중소기업 휴직수당 정부 지원 등 주제별로 다양한 대책을 국민에게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단체의 의제추천은 90개 중 5개에 그치고 관심사항에 대해서만 추천하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바, 현행 추천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6) 진행방식 결정

진행방식은 토론의 성격과 참석 토론자 수를 고려하여 진행방식의 공정성·적합성 등을 진행방식분과 전문위원회의 및 준비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의에서 결정하였다. 정당정책토론회의 진행방식은 앞서 개최한 공직선거정책토론회 방식인 시간총량제 토론방식(자유토론형)을 재도입·활용함으로써 토론회의 유연성과 역동성을 높일 수 있었다.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진행방식은 2개의 토론주제를 가지고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토론자의 답변을 듣고 자유토론형을 활용하였다. 사회자의 공통질문에 모든 토론자가 1분30초씩 답변한 후 토론순서에 의한 토론자부터 주제에 대한 발언을 시작하였으며, 첫 토론자의 발언 종료 즈음 발언하고자 하는 토론자는 사회자에게 발언권을 요청하게 하였다. 또한, 토론자당 1분의 맺음말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토론 시간이 남는 경우 예비질문을 활용하지 않고 맺음말 시간을 조정하여 사용토록 하였다.

세부적인 규칙으로는 제1주제는 모든 토론자에게 매 라운드당 1분씩 6회의 발언권을 부여하되, 각 토론자는 연속하여 2회(2분)까지만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2주제는 모든 토론자에게 매 라운드당 1분씩 4회의 발언권을 부여하되, 제1주제와 마찬가지로 각 토론자는 연속하여 2회(2분)까지만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모든 토론자는 다른 토론자의 발언중에는 발언할 수 없으며 토론자가 본인의 발언횟수를 확인할 수 있는 계측판을 세트 앞면에 설치하고, 계측요원이 발언횟수를 계측하였다.

[표 2-22]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

토론주제	고유가 등 물가안정 대책
진행방식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엄호성/류근찬/윤영상/임태희/이정희/강재규 /최인기 토론자 답변 (각 1분30초)
	류근찬 토론자부터 자유토론식으로 발언 ※ 토론자당 총 6분 내(1회 발언시간은 1분)에서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
	※ 자유토론시 발언권은 2회 연속 사용(2분) 가능하다, 3회 이상 연속 사용 불가능 ※ 미리 사회자에게 신호를 보내 발언권을 얻으며, 발언 신청자가 없을 경우 사회자가 발언시간을 많이 가진 토론자 중에서 적절히 지명
소요시간	53분
토론주제	한미 쇠고기 협상 문제
진행방식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윤영상/임태희/이정희/강재규/최인기/엄호성 /류근찬 토론자 답변 (각 1분30초)
	임태희 토론자부터 자유토론식으로 발언 ※ 토론자당 총 4분 내(1회 발언시간은 1분)에서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
	※ 자유토론시 발언권은 2회 연속 사용(2분) 가능하다, 3회 이상 연속 사용 불가능 ※ 미리 사회자에게 신호를 보내 발언권을 얻으며, 발언 신청자가 없을 경우 사회자가 발언시간을 많이 가진 토론자 중에서 적절히 지명
소요시간	39분
맺음말	• 이정희/강재규/최인기/엄호성/류근찬/윤영상/임태희 토론자(각 1분)
소요시간	7분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진행방식은 2개의 토론주제를 가지고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토론자의 답변을 듣고 자유토론형을 활용하였다. 사회자의 공통질문에 모든 토론자가 1분씩 답변한 후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된 토론순서에 의한 토론자부터 주제에 대한 발언을 시작하였으며, 첫 토론자의 발언 종료 즈음 발언하고자 하는 토론자는 사회자에게 발언권을 요청하게 하였다. 또한, 토론자당 1분의 맺음말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토론 시간이 남는 경우 예비질문을 활용하지 않고 맺음말 시간을 조정하여 사용토록 하였다.

[표 2-23]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토론 주제 및 진행방식

토론주제	실물경제 활성화 방안	
진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질문(30초) ➔ 엄호성/이정희/박병석/임영호/이용경/노중기/최경환 토론자 답변(각 1분) • 이정희 토론자부터 자유토론식으로 발언 ※ 토론자당 총 6분 내에서 자유토론식으로 진행 ※ 자유토론시 1회 발언은 가급적 2분을 넘지 않도록 하고, 미리 사회자에게 신호를 보내 발언권을 얻으며, 발언 신청자가 없을 경우 사회자가 발언시간을 많이 가진 토론자 중에서 적절히 지명 	
	소요시간	49분30초
	토론주제	고용안정과 실업 대책
진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질문(30초) ➔ 박병석/임영호/이용경/노중기/최경환/엄호성/이정희 토론자 답변(각 1분) • 임영호 토론자부터 자유토론식으로 발언 ※ 토론자당 총 5분 내에서 자유토론식으로 진행 ※ 자유토론시 1회 발언은 가급적 2분을 넘지 않도록 하고, 미리 사회자에게 신호를 보내 발언권을 얻으며, 발언 신청자가 없을 경우 사회자가 발언시간을 많이 가진 토론자 중에서 적절히 지명 	
	소요시간	42분30초
	맺음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경/노중기/최경환/엄호성/이정희/박병석/임영호 토론자(각 1분) ※ 시간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 맺음말 시간 조정 가능
소요시간	7분	

토론자별 시간총량제를 생방송에 실질적으로 도입·운영하고 발언시간을 초 단위까지 관리함으로써 진행방식을 다양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토론진행 상황을 토론진행표와 면밀하게 대조하여 맺음말 시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등 PD와 협력체제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7개 정당의 참석으로 역동적이며 깊이 있는 토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토론자 발언시간 관리에 있어 보완사항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7) 설명회 개최

운영규정 제10조(대담·토론회의 공표 등)에 의거 토론회 공표후 지체없이 토론회에 참석할 토론자를 대상으로 토론회 개최 및 중계방송 일정,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 토론자의 준수사항 안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에는 토론자 대리인 등이 참석하여 토론 주제·진행방법, 토론회 진행시 유의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하고 토론자의 좌석 및 발언 순서를 추천하였으며, 추천은 소속 정당의 국회 다수 의석 순에 따라 추천순서를 추천하고 그 추천순서에 따라 토론자별 좌석과 발언 순서를 동시에 추천하여 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2-24] 정당정책토론회 설명회 개최현황

구 분	일 시	장 소
제 1 차	2008. 6. 19(목) 11:30	국회 귀빈식당
제 2 차	2008.11. 21(목) 16:30	국회 귀빈식당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의 설명회는 정당 관계자 등이 국회와 그 인근 지역에 근무하는 사정을 고려, 2008. 6. 19(목)에 각 토론자의 대리인 7인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하여 참석에 편의를 제공하였다.



설명회에서는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참석 토론자의 좌석 및 발언순서를 추천하여 A: 친박연대 엄호성, B: 자유선진당 류근찬, C: 진보신당 유영상, D: 한나라당 임태희, E: 민주노동당 이정희, F: 창조한국당 강제규, G: 통합민주당 최인기로 결정하였다. 발언순서 결정에 따라 토론진행방식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토론회 당일 일정과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였으며, 설명회 개최후 정당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토론회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의 설명회는 2008. 11. 21(목)에 각 토론자의 대리인 7인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하였다. 설명회에서는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참석 토론자의 좌석 및 발언순서를 추첨하여 A: 친박연대 엄호성, B: 민주노동당 이정희, C: 민주당 김진표, D: 자유선진당 임영호, E: 창조한국당 강재규, F: 진보신당 노중기, G: 한나라당 최경환으로 결정하였다. 발언순서 결정에 따라 토론진행방식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토론회 당일 일정과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였다. 특히, 시간총량제 운용에 따른 타이머 작동을 직접 시연함으로써 진행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간을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8) 토론회 개최 홍보

위원회, 중앙선관위, 각 시·도선관위 및 참석정당의 홈페이지에 팝업 파일을 게시하여 네티즌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여론주도층에 대한 이메일 발송 등 다양한 방법과 계기를 이용하였다. 또한, 토론회 개최를 공표한 즉시 중앙선관위 공보담당관실을 통하여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중계방송사에 토론회 개최일시·장소 등을 광고 또는 자막방송 협조를 요청하였다.

9) 질문사항 선정

토론회의 질문사항은 여론조사 등 자료를 근거로 질문사항의 객관성·공정성·형평성 등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질문사항을 검토하고 소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으며, 사회자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작성된 질문사항은 토론회 개최일 전일에 전체 위원회의에서 의결로 결정하였다.

10) 토론회 장소 설비

토론회 개최장소는 주관방송사 스튜디오를 활용함에 따라 방송사측과 수시로 의견

을 교환하는 등 개최 장소가 품격 있게 설비될 수 있도록 협의하였다.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의 장소 설비는 세트 배경을 푸른색 계통으로 처리하여 안정감을 주었고 토론자 앞쪽에 토론회명과 위원회명을 표기하는 돌출형 타이틀 구조물을 세워 카메라 샷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반원 형태로 좌

석을 배치하고 사회자는 A 토론자 옆에 배치함으로써 사회자가 전체 토론자를 한 눈에 보면서 발언권 신청 및 지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설비하였다.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의 장소 설비는 다수의 토론자가 참석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토론자 좌석을 반원 형태로 중앙에 설비하고 사회자 좌석은 "A" 토론자 끝에 별도로 배치함으로써 발언권 지명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11) 토론회 진행

토론회 개최시각 40분까지 토론자의 토론회장 도착을 안내하였으며, 중계주관방송사 제작프로듀서 주관 하에 개최시각 20분전에 최종 예행연습을 실시하였다. 토론회 진행은 토론진행표 및 대본에 의하여 진행하되 발언시간은 표시하는 기기 등을 적절히 설치하여 활용하고 방송화면은 중계방송사가 모든 토론자에게 공평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토론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토론회에 참석하는 정당관계자에게 출입증을 발급하였고 중계주관방송사 안전관리팀에 출입자 관리 등 질서유지에 관한 협조를 구하였다.

제1·2차 정당정책토론회의 경우, 토론자에게도 리허설 시간을 이용하여 타이머 표시, 상호토론 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위원회가 의도한 쟁점사항 위주로 토론진행표와 큰 차이가 없이 진행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의 경우, 개최일 전일에 제1·2주제의 토론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일부 정당으로부터 답변 자료 작성 등에 시간이 촉박하여 어려움이 많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상호토론회 첫 발언자 지정에 대한 토론자의 이의제기와 제1주제 토론시 발언시간을 남긴 2명의 토론자에게 사회자가 30초씩 추가 발언권을 부여하는 등의 사례 발생은 아쉬웠다. 또한, 일부 정당의 토론자는 준비 자료를 들고 읽는 방법으로 토론에 참여하여 그 모습이 방송되는 등 설명회에서 안내된 유의사항이 토론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었다.

12) 토론회 시청률

정당정책토론회 개최 직후 공영방송사(KBS, MBC)의 협조로 시청률 조사기관인 AGB닐슨미디어리서치와 TNS미디어코리아의 정책토론회 시청률을 파악하였다.

[표 2-25] 정당정책토론회 시청률

조사기관	1차 토론회		2차 토론회	
	KBS 1	MBC	KBS 1	MBC
AGB닐슨미디어리서치	2.6 %	1.3 %	2.5%	1.8%
TNS미디어코리아	2.1 %	1.4 %	1.8%	0.7%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의 시청률이 2007년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의 시청률(AGB : 3.1%, TNS : 2.1%)보다 높게 나타난 점은 시기적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제에 대한 정책토론회로서 성공적인 개최였다고 판단되었다.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의 시청률은 정책위의장 등이 경제분야에 대하여 토론하였으나 토론자에 대한 낮은 인지도, 토론의 역동성 저하, 낮 시간 개최 등으로 제1차 시청률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이에, 방송사 편성부서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인식

을 공유하는 한편, 시의 적절한 의제선정 및 다양한 진행방식 도입 등의 노력도 같이 요구되었다.

다. 정당관계자 및 방송관계자 업무협의회 개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책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 및 개최에 대한 위원회와 정당간의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2008. 5. 27 (수) 국회 인근에서 정당관계자 업무협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에 대한 평가 및 정당정책토론회 개최 관련 정당 상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정책토론회 등의 방송시간대 편성 및 장소, 준비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해 공영방송사 중계방송관계자와의 실무제작 회의를 개최하였다. 특히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준비시에는 SBS 방송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향후 정책토론회 등의 중계방송 방법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제 2 절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관리

1. 개 요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규정에 의거 선거운동기간중(2008. 3. 27 ~ 4. 8)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등을 개최하였고, 대담·토론회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에게도 별도의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총 3회의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참여대상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과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의 지지를 얻은 정당이며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후보자를 토론자로 하였다.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총 383회의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참여대상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과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당해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를 토론자로 하였다.

또한, 선거이후에는 위원 워크숍 및 시·도 사무국장 워크숍을 개최하여 각종 선거방송토론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선거방송토론의 관리·운영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표 2-26] 선거별 개최횟수 및 초청대상자

선 거 별	주 관	개 최 기 간	법정개최횟수	초청대상자
비례대표국회의원	중 앙	선 거 운 동 기 간 중 (2008. 3. 27 ~ 4. 8)	2회 이상	후보자
지역구국회의원	구 · 시 · 군		1회 이상	후보자

※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토론회 개최

2. 주요 추진실적

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관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토론회를 완벽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고 방송토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여 정책선거에 기여하고자 토론회 준비와 기획을 철저히 하고, 적극적인 사회자 및 의미있는 의제 선정은 물론, 효율적인 진행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공정한 토론 진행을 추진하였다.

또한,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선거방송토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토론회에 대한 평가 및 그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여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였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는 총 3회를 개최하여 정당에게는 책임있는 정책을 주장하고 유권자에게는 정책을 비교·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정당투표에 도움을 주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다만, 공영방송사와 중계방송시간대와 관련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였음에도 오전 10시(2회)와 오후 2시(1회)에 토론회가 개최되어 많은 유권자가 시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던 바, 방송사와의 다양한 채널을 구축하여 토론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협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표 2-27] 법 제82조의2제4항의 규정(초청요건 해당)에 따른 토론회 개최현황

구 분		제 1 차	제 2 차
개최일시		2008. 3. 31(월) 10:00~12:00(120분)	2008. 4. 4(금) 10:00~12:00(120분)
개최장소		MBC D 스튜디오	KBS TS-4 스튜디오
토론분야		정치·교육 등	경제·복지 등
토 론 자		후보자	
후보자	통합민주당	송 민 순	최 영 희
	한나라당	정 옥 임	나 성 린
	자유선진당	박 선 영	김 용 구
	민주노동당	지 금 중	이 정 희
	창조한국당	김 석 수	이 용 경
사 회 자		송지현(방송인)	
중계방송		KBS, MBC 동시생중계	

[표 2-28] 법 제82조의2제5항의 규정(초청요건 비해당)에 따른 토론회 개최현황

개최일시		2008. 4. 1(화) 14:00~16:00(120분)
개최장소		MBC D 스튜디오
토론분야		주요 국정 현안
후보자	친박연대 송영선, 국민실향안보당 이애란, 기독교사랑실천당 김명규, 시민당 류승구, 신미래당 김호일, 직능소상공인연합 박형방, 진보신당 김석준, 평화통일가정당 손대오, 한국사회당 오준호	
사 회 자		송지현(방송인)
중계방송		KBS, MBC 동시생중계

※ 문화예술당 불참

토론회 준비를 위해 관리단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동시에 구축하여 토론회 진행을 기획하였으며, 공영방송사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개최일시 등을 조기 결정하고 초청대상 정당의 선정 등 위원회의의 의결사항 등을 흠없이 처리하는 등 토론회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완벽하게 준비하도록 추진하였다.

1) 개최일시·장소 등 선정

토론회의 개최일시·장소 등 결정은 공영방송사(KBS, MBC) 편성부서 및 토론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조기에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자 및 시간대 등을 접수받아 위원회의에서 결정하였다.

토론회의 개최일정 등은 공영방송사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초청 요건 비충족 정당의 토론회도 1회 개최하였고, 부재자 투표기간(4. 3 ~ 4. 4)전에 초청 요건 충족(이하 “초청대상”이라 한다)정당과 요건 비충족(이하 “비초청대상”이라 한다) 정당의 토론회를 각 1회씩 개최함으로써 유권자의 정당 투표에 도움을 주었다. 토론회 개최 장소로는 외부 시설을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후보자토론회임을 감안, 공영방송사의 협조를 얻어 각 중계주관방송사의 스튜디오를 이용하였다.

초청대상 정당을 대상으로 제1차 토론회는 3. 31(월) 10:00 ~ 12:00 MBC D 스튜디오에서 개최하였으며, 제2차 토론회는 4. 4(금) 10:00 ~ 12:00 KBS TS-4 스튜디오에서 개최하였다. 비초청대상 정당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는 4. 1(화) 14:00 ~ 16:00 MBC D 스튜디오에서 개최하였으며, 3차례의 토론회는 모두 공영방송사(KBS, MBC)가 동시에 생중계하였다. 다만, 토론회의 개최일정이 방송사 봄철 프로그램 개편과 겹치는 관계로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개최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2) 소위원회 구성·운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규칙 제17조(소위원회)의 규정에 의거 토론회의 주제 및 진행방식의 작성과 검토를 위하여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을 포함한 방송사 추천 위원 등 총 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준비소위원회 구성 현황은 [표 2-29]와 같다.

운영기간은 의결한 날로부터 토론회가 종료되는 날까지였으며 후보자토론회의 진행방식 및 주제의 결정, 질문사항 선정에 이르기까지 안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지는 등 활발하게 운영되었다.

[표 2-29] 후보자토론회 준비소위원회 구성 현황

명 칭	구 성 위 원	운 영 기 간	직 무
제18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준비소위원회	상임위원, 김찬태, 성경섭, 최항순, 정영환	의결후 ~ 토론회 종료시까지	· 진행방식(안) 작성 · 토론주제(안) 작성 · 질문사항(안) 작성

3) 토론회 초청대상 정당(후보자) 선정

토론회에 초청하는 정당을 선정하기 위해 법 제82조의2제4항의 근거하여 중앙선관위로부터 정당별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득표율과 국회로부터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수를 통보받는 등 현황을 확인하고 대상 언론기관 등을 통하여 여론조사 공표자료를 수집한 뒤 위원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선정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수 현황을 바탕으로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통합민주당(136), 한나라당(113), 자유선진당(9), 민주노동당(6)이었다.

[표 2-30]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수 현황

(기준일 : 2008.3.26현재)

구 분	지역구	비례대표	계
통 합 민 주 당	109	27	136
한 나 라 당	95	18	113
자 유 선 진 당	9	-	9
민 주 노 동 당	1	5	6
친 박 연 대	3	-	3
창 조 한 국 당	1	-	1

정당별 직전 선거의 득표율 현황 [표 2-31], [표 2-32]을 바탕으로 정당별 직전 대통령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은 대통합민주신당(26.1), 한나라당(48.7), 민주노동당(3.0), 창조한국당(5.8)이었다.

[표 2-31] 정당별 직전 대통령선거 득표율 현황

구분	대통합 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 노동당	민주당	창조 한국당	참주인 연합	경제 공화당	새시대 참사람 연합	한국 사회당
제 17 대 대 선	26.1	48.7	3.0	0.7	5.8	0.1	0.4	0.03	0.1

정당별 직전 선거(대통령선거 제외)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은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이었다.

[표 2-32] 정당별 직전 선거의 득표율 현황

(정당등록 : 2007. 12. 24 현재)

직전선거별	대통합 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시민당	
	선거 명	득표율 (%)	선거 명	득표 율 (%)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17대	열린 우리당 38.3	17대	35.8	17대	13.0	17대	7.1	-	-	-	-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4회	열린 우리당 21.6	4회	53.8	4회	12.1	4회	9.9	4회	2.3	4회	0.04
비례대표자치 구·시·군 의원 선거	4회	열린 우리당 24.1	4회	54.0	4회	9.5	4회	10.3	4회	2.2	-	-

※ 직전선거 참여않음 : 국민선택, 국민실향안보당, 국제녹색당, 기독교복합당, 바른한국당, 선진한국당, 시스템미래당, 신미래당, 자유평화당, 중도통합신당, 직능소상공인연합, 통일한국당, 평화통일당, 평화통일가정당, 화합과도약을위한국민연대

언론기관이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정당의 경우에는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을 선정하였다.

토론회 초청대상 정당 선정에 관한 의결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계방송사, 정당 등에게 통지하고 참석하는 후보자를 지정할 정당에게는 선거기간개시일의 다음 날까지 토론자의 참석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의석수, 득표율 및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초청요건에 해당하는 정당을 엄정하게 선정하고, 참석승낙서를 제출한 후보자가 모두 참석하도록 추진함으로써 토론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다만, '문화예술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등록하였으나 자당의 정책과 관련된 토론주제가 없음을 사유로 토론회에 불참하여 아쉬웠다.

4) 사회자 선정

전국의 신문방송학과 교수 및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사회자 경험이 있는 인물을 대상으로 인터넷 검색 및 동영상 등을 확보하여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고 확대하는 등의 사회자 풀(POOL)을 구성하였으며, 토론회 사회자는 위원으로부터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자를 위원회의에서 결정하였다.



이에 사회자는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를 무난하게 진행한 경험이 있고 방송 현장에서 활동중인 방송인 송지현이 선정되어 모든 토론회를 맡아 안정감 있게 진행하였다. 선정된 사회자에게는 '사회자 매뉴얼'을 작성하여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였다.

5) 주제 선정

토론회의 주제는 먼저, 국내 유명 리서치 회사에 토론분야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의뢰하여 정치, 교육, 경제, 복지 등과 관련한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의 41개 기관 및 단체에 의제 추천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제 선정을 위한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제분과 전문위원과 준비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하였다.

[표 2-33] 제18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의제선정 조사 개요

구분	전문가 의제 추천	일반국민 여론조사
조사대상	정치, 교육, 경제, 복지 등과 관련한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 단체	전국의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표본크기	41개 기관	1,000명
표집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
조사방법	사전 전화 접촉후 E-mail, FAX 등을 이용하여 조사	전화면접조사
응답률	-	13.7%
조사기간	2008년 2월 28일 ~ 3월 7일	2008년 3월 11일 ~ 12일

전문가 의제 추천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정치분야 주제는 '남북관계', '외교 동맹 문제', '국가보안법', '한국군의 해외 파병', '공직사회 개혁', 이 밖에 '통일재정', '타국의 역사왜곡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정치분야 주제로 추천하였다.

교육분야 주제는 '영어 공교육 강화', '자율형 고등학교 확대', '대학입시 자율화', 대학 등록금 인상, '교육양극화 해소 방안', '외국 유학',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 이 밖에 '대안학교의 활성화 문제', '학교 급식', '사립대 기부입학', '공교육 정상화 방안' 등을 주제로 추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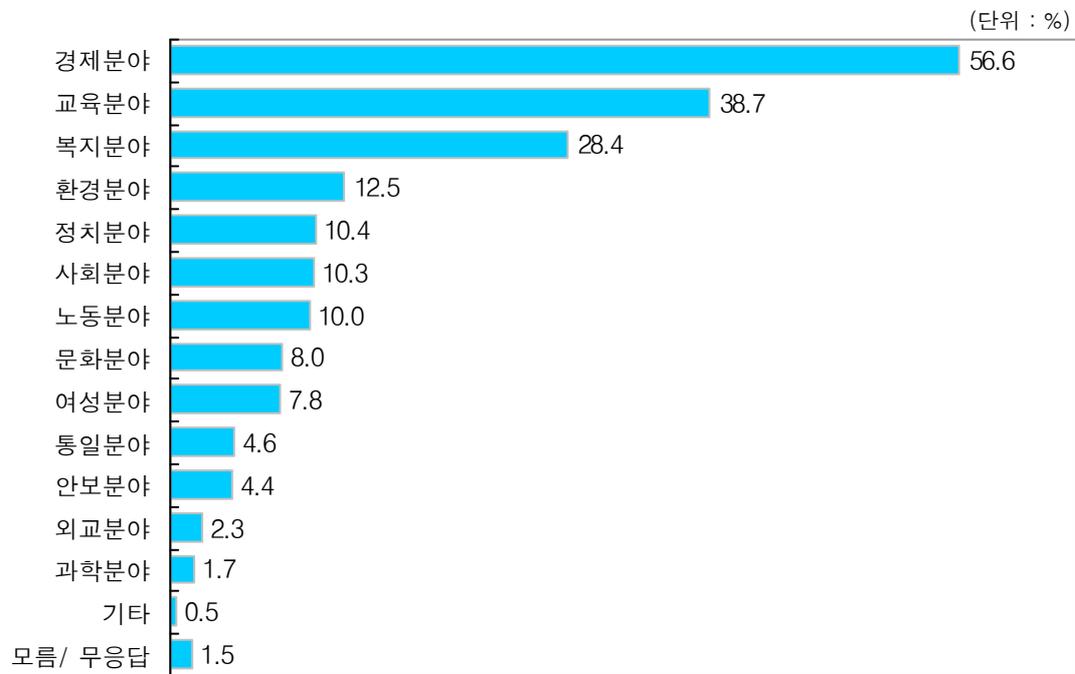
경제분야 주제로는 '대운하 사업', '중소기업 정책', '물가 대책', '부동산 세제와 부동산 정책', 'FTA 체결 문제', '출생제 등 재벌정책', '비정규직 문제', '일자리 창출', '경기활성화를 위한 경기 부양 정책', 이 밖에 '해외 에너지·자원개발', '농업, 농촌의 활력 증진', '신용불량자 지원 대책',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을 추천하였다.

복지분야 추천 주제는 '사회양극화 현상에 대한 대응 방안', '노인복지', '건강보험 개선', '청년 실업', '저출산 대책', '복지단체 관리', '공무원 연금개혁', '복지예산의 효율적 활용', '보건의료의 산업화' 이 밖에 '의료비 부담청구', '여성 육아보육', '농어촌

의료인력 부족 대책' 등을 주제로 추천하였다. 그 외 분야 추천 주제는 '대체복무제' 등이었다. 일반국민 여론조사는 전국의 만19세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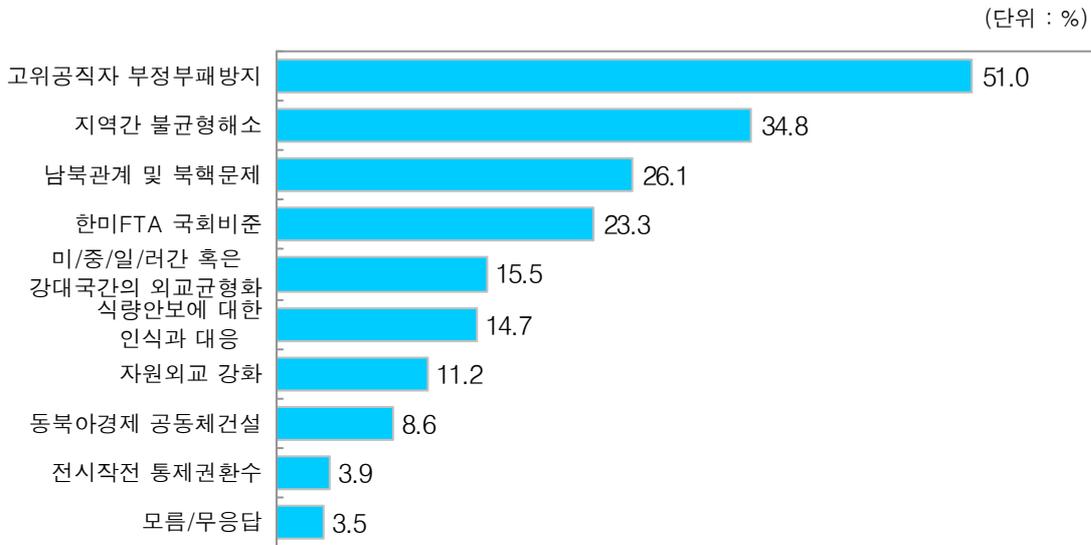
유권자들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 '경제분야'라는 응답이 56.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육분야(38.7%)', '복지분야(28.4%)'순이었다. 그 밖에 환경(12.5%), 정치(10.4%), 사회(10.3%), 노동(10.0%), 문화(8.0%), 여성(7.8%), 통일(4.6%), 안보(4.4%), 외교(2.3%), 과학(1.7%) 등의 순이었다.

[그림 6] 유권자들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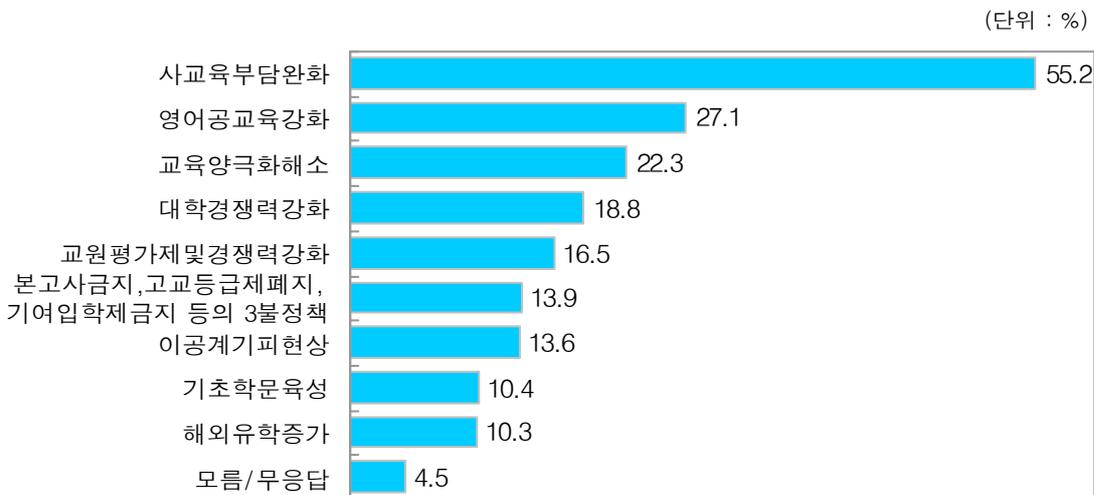
정치 분야의 중요한 TV토론 과제로는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방지'라는 응답이 51.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역간 불균형 해소'(34.8%), '남북관계 및 북핵문제'(26.1%), '한미 FTA 국회 비준'(23.3%) 등의 순이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3.9%)와 '동북아 경제공동체 건설'(8.6%)이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림 7] 정치 분야



교육 분야의 중요한 TV토론 과제로는 '사교육 부담 완화'라는 응답이 55.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영어 공교육 강화'(27.1%), '교육 양극화 해소'(22.3%) 등의 순이었다. '해외유학 증가'(10.3%)와 '기초학문 육성'(10.4%)이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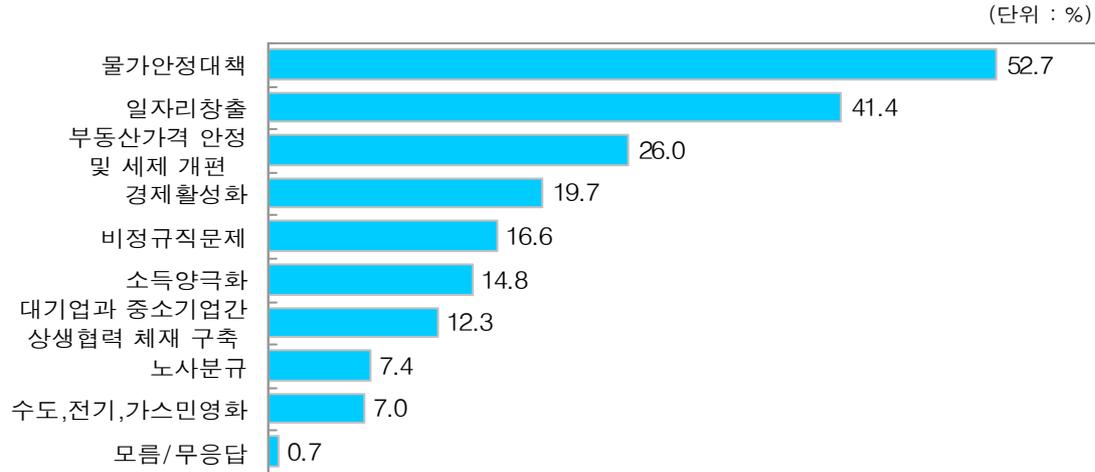
[그림 8] 교육 분야



경제 분야의 중요한 TV토론 과제로는 '물가 안정 대책'이라는 응답이 52.7%로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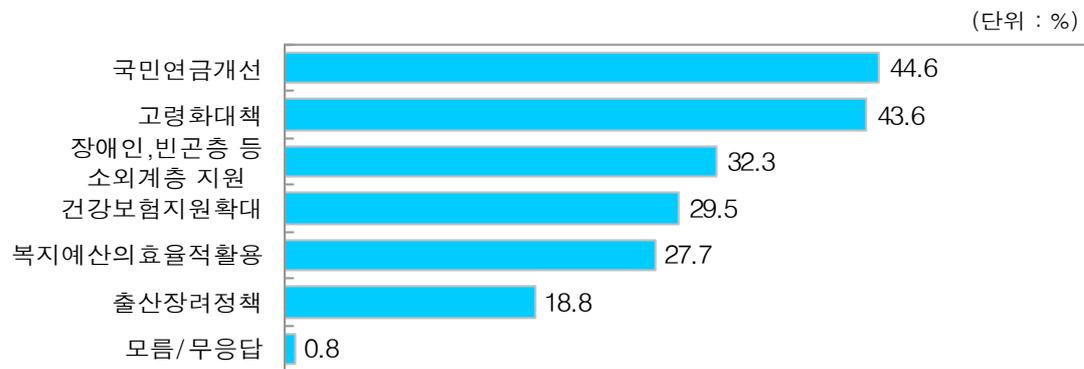
장 높으며,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41.4%), '부동산 가격안정 및 세제 개편'(26.0%) 등의 순이었다. '수도, 전기, 가스 민영화'(7.0%)와 '노사분규'(7.4%)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그림 9] 경제 분야



복지 분야의 중요한 TV토론 과제로는 '국민연금 개선'과 '고령화 대책'이라는 응답이 각각 44.6%, 43.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장애인, 빈곤층 등 소외계층 지원'(32.3%), '건강보험지원 확대'(29.5%) 등의 순이었다. '출산 장려 정책'이라는 응답은 18.8%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그림 10] 복지 분야



그 외 분야의 중요한 TV토론 과제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응답이 38.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군복무자의 가산점 제도'(35.7%),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문제'(32.7%) 등의 순이었다. '이중국적 허용'(11.0%)과 '신문방송의 겸영 허용'(11.3%)이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그밖에 다루어야 할 의제로는 '정치인의 행태' 관련 사항이 5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제살리기'(32명), '교육정책'(24명), '공직자 윤리문제'(21명),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19명), '물가안정'(18명), '서민경제 활성화'(17명), '사회적 양극화 및 빈부격차 해소'(15명), '부동산 정책'(14명) 등의 순이었다. 그 밖에, '영어교육 문제'(11명), '보육 및 육아문제'(11명), '복지문제'(8명), '지역균형발전'(8명), '한반도대운하'(7명), '장애인 복지'(7명), '노인복지'(7명), '농촌 및 농업문제'(7명), '대북관계'(7명) 등에 대한 응답도 있었다.

6) 진행방식 결정

진행방식은 토론의 성격과 참석 토론자 수를 고려하여 진행방식의 공정성·적합성 등을 진행방식분과 전문위원회의 및 준비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의에서 결정하였다.

초청 요건 충족 정당의 후보자 5명은 자유토론, 요건 비충족 정당의 후보자 9명은 공통질문·답변으로 진행하여 후보자 수를 고려하고 정책을 차별화 시킬 수 있는 진행방식을 활용하였다.

초청대상 토론회의 진행방식은 기초연설 각 1분, 1~3 주제별 자유토론 각 6분, 맺음말 각 1분의 발언시간을 부여하였다. 세부적인 규칙으로는 모든 토론자에게 매 라운드당 1분씩 6회의 발언권을 부여하되, 각 토론자는 연속하여 2회(2분)까지만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모든 토론자는 다른 토론자의 발언중에는 발언할 수 없으며 토론자가 본인의 발언횟수를 확인할 수 있는 계측판을 세트 앞면에 설치하고, 위원회 직원이 발언횟수를 계측하였다.

[표2-34]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주제 및 진행방식(초청대상)

기조연설	진행방식	• A/B/C/D/E 후보자(각1분)
	소요시간	5분
제1주제	토론주제	• 1차 : 바람직한 남북관계 정립 방안 • 2차 : 물가안정 대책
	진행방식	• B 후보자부터 자유토론식으로 발언 ※ 토론자당 총 6분내(1회 발언시간은 1분)에서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
	소요시간	30분
제2주제	토론주제	• 1차 : 한미FTA 국회 비준 • 2차 : 비정규직 문제
	진행방식	• C 후보자부터 자유토론식으로 발언 ※ 토론자당 총 6분내(1회 발언시간은 1분)에서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
	소요시간	30분
제3주제	토론주제	• 1차 : 교육의 자율화와 기회균등 문제 • 2차 : 국민연금 개선 방안
	진행방식	• D 후보자부터 자유토론식으로 발언 ※ 토론자당 총 6분내(1회 발언시간은 1분)에서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
	소요시간	30분
맺음말	진행방식	• E/A/B/C/D 후보자(각1분)
	소요시간	5분
※ 자유토론시 발언이 1분 10초를 넘기면 2회 연속 사용으로 간주하고, 발언권은 2회 연속 사용(2분) 가능하나, 3회 이상 연속 사용 불가능 ※ 미리 사회자에게 신호를 보내 발언권을 얻으며, 발언 신청자가 없을 경우 사회자가 발언시간을 많이 가진 토론자 중에서 적절히 지명		

비초청대상 토론회의 진행방식은 기조연설 각 2분, 주제별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각 1분, 맺음말 각 2분의 발언시간을 부여하였다.

[표2-35]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주제 및 진행방식(비초청대상)

기조연설	진행방식	• A/B/C/D/E/F/G/H/I 후보자(각1분)
	소요시간	9분
제1주제	토론주제	• 바람직한 남북관계 정립 방안
	진행방식	• 사회자 질문(30초) → B/C/D/E/F/G/H/I/A 후보자 답변(각1분30초)
	소요시간	14분
제2주제	토론주제	• 한미FTA 국회 비준
	진행방식	• 사회자 질문(30초) → C/D/E/F/G/H/I/A/B 후보자 답변(각1분30초)
	소요시간	14분
제3주제	토론주제	• 교육의 자율화와 기회균등 문제
	진행방식	• 사회자 질문(30초) → D/E/F/G/H/I/A/B/C 후보자 답변(각1분30초)
	소요시간	14분
제4주제	토론주제	• 물가안정 대책
	진행방식	• 사회자 질문(30초) → E/F/G/H/I/A/B/C/D 후보자 답변(각1분30초)
	소요시간	14분
제5주제	토론주제	• 비정규직 문제
	진행방식	• 사회자 질문(30초) → F/G/H/I/A/B/C/D/E 후보자 답변(각1분30초)
	소요시간	14분
제6주제	토론주제	• 국민연금 개선 방안
	진행방식	• 사회자 질문(30초) → G/H/I/A/B/C/D/E/F 후보자 답변(각1분30초)
	소요시간	14분
맺음말	진행방식	• H/I/A/B/C/D/E/F/G 후보자(각1분)
	소요시간	9분
총 토론시간		102분

7) 설명회 개최

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순서를 결정하고 당일 준수사항 등을 공지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3. 29(토) 오전에 초청대상 후보자의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의실에서 토론회별 후보자 좌석 및 발언순서를 추첨한 결과 제1차 토론회는 A : 자유선진당 박선영, B : 창조한국당 김석수, C : 통합민주당 송민순, D : 한나라당 정옥임, E : 민주노동당 지금중으로 결정되었고, 제2차 토론회는 A : 통합민주당 최영희, B : 한나라당 나성린, C : 자유선진당 김용구, D : 민주노동당 이정희, E : 창조한국당 이용경으로 결정되었다.



3. 29(토) 오후에는 비초청 대상 후보자의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후보자 좌석 및 발언순서 추첨 결과 A : 국민실향안보당 이애란, B : 한국사회당 오준호, C : 시민당 류승구, D : 진보신당 김석준, E : 기독교사랑실천당 김명규, F : 친박연대 송영선, G : 직능소상공인연합 박형방, H : 신미래당 김호일, I : 평화통일가정당 손대오 후보자로 결정되었다.

모든 설명회에는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빠짐없이 참석하여 좌석과 발언순서를 추첨하였다. 발언순서 결정에 따라 토론진행방식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토론회 당일 일정과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였다.

8) 토론회 개최 공표·홍보

토론회 개최 공표는 사회자 선정 후 게시판에 공고하였다. 공표사항은 토론회 개최일시·장소, 중계방송사명, 중계방송일시, 참석후보자 성명,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이었으며, 중앙선관위, 시·도토론회, 중계방송사 및 후보자에게 통지·안내하였다.

토론회 개최 홍보는 이벤트 쿼즈, 소감문 적기, 옥외전광판 광고, 포털사이트(다음,

네이트, 엠파스) 배너광고, KBS 2TV 자막광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정보를 제공하였다. 특히, 이벤트 퀴즈에는 총 32,793명이, 소감문 적기 이벤트에는 총 2,429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시청하지 못한 유권자를 위하여 위원회 홈페이지 '다시보기' 영상을 토론회 개최 직후 게시하고, 이벤트 배너에서 바로가기를 제공하여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쉽게 토론회 관련 영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다.

9) 질문사항 선정

토론주제가 선정된 후에 사무국 질문사항안을 바탕으로 전문위원회의, 준비소위원회회의의 검토·작성후 위원회의에서 선정하였는데 준비소위원회회의에는 사회자도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작성된 질문사항은 토론회 개최일 전일에 전체 위원회의에서 의결로 결정하였다. 단,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의 질문사항은 진행방식상 질문사항이 없어 제외하였다. 질문사항은 선정후 보안유지를 고려하여 모두 봉인하여 책임 관리하였다.

10) 토론회 장소 설비

사전에 위원회의 토론회장 설비안을 중계주관방송 사측에 제시하고 토론회 장소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설비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협의하였다.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의 경우 '양끝 MC 구조', 비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의 경우 '좌우 대칭 구조'로 배치하여 참석 후보자 수에 따라 최적의 배치가 되도록 하였다.



11) 토론회 진행

참석후보자 등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사회자로 하여금 이를 중지하거나 중지하도록 하고, 당해 후보자의 발언이 종료된 후 사회자가 그 사실을 공지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또한 위법발언 유형별 카드를 작성하여 사무국장, 중앙선

관위 법규해석담당 사무관이 사회자 옆에 배석하여 위법내용이 발생될 때마다 약속된 카드내용을 사회자에게 고지하여 후보자의 위법발언에 철저히 대비하였다.



원만한 토론회 진행을 위하여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한 화면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계주관방송사에 토론회 방송화면구성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엔딩 자막은 위원회가 제공하는 자료에 따라 위원 등의 직·성명 등과 의제 추천단체 및 협조기관 등도 표출되도록 하였다. 토론 중간에 토론위원회가 주관·개최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자막처리하여 위원회의 기관 홍보 및 위상을 제고하였다.

12) 시청률

후보자토론회 개최 직후 공영방송사(KBS, MBC)의 협조로 시청률 조사기관인 AGB닐슨미디어리서치와 TNS미디어코리아의 토론회 관련 시청률을 파악하였다.

[표 2-36]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률

구분	조사기관	KBS1	MBC
초청 1차	AGB	2.8	1.2
	TNS	2.1	1.1
비초청	AGB	0.9	0.9
	TNS	0.8	0.5
초청 2차	AGB	1.8	1.2
	TNS	1.1	1.1

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등 관리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전국 245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 192회, 합동방송연설회 191회로 총 383회 개최되었다. 제17대 국선에서 243개의 지역구 총 250회(대담·토론회 161회, 합동방송연설회 89회)가 개최된 것과 비교하면, 이번 제18대 국선에서는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당시에 초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후보자의 참석 규정이 없었으나 2005년에 관계 조항이 신설되어 비초청 대상 후보자의 토론회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가 토론회에 불참하여 토론회가 파행되거나 합동방송연설회로 대체되기도 하였다. 또한 시청하기 어려운 이른 아침시간이나 심야시간에 중계방송이 편성되는 등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되었다.

1) 소위원회 운영

토론의제·진행방식의 결정(선정)을 위한 소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합 구성하였다. 또한, 소위원회의 회의내용·결과 등은 명확하게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그 운영결과를 차기 위원회의에 보고하였다.



소위원회는 후보자토론회의 진행방식 및 주제의 결정, 질문사항 선정에 이르기까지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지는 등 활발하게 운영되었다.

2) 토론회 등 개최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규정에 의하여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되, 대담·토론회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공직선거법」의 규정 취지에 맞게 대담·토론회 초청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후보자라 할지라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합동방송연설회보다는 토론회가 우선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총 선거방송 토론회 중에서 토론회가 차지하는 비율이 50.1%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시 토

론회 개최비율 59.1%에 비해 9.0% 감소한 것이다.

[표 2-37] 선거방송토론 개최 현황

(단위 : 회)

구 분	합 계	개 최 내 역						미개최내역	
		초청대상		비초청대상		합 동		초청	비초청
		대담·토론회	방송연설회	대담·토론회	방송연설회	대담·토론회	방송연설회		
계	383	142	0	1	140	49	51	3	4
서울	76	31	0	0	29	2	14	1	3
부산	30	12	0	0	12	1	5	-	-
대구	16	4	0	0	4	6	2	-	-
인천	21	9	0	0	9	0	3	-	-
광주	13	5	0	0	5	3	0	-	-
대전	12	6	0	0	6	0	0	-	-
울산	11	5	0	0	5	1	0	-	-
경기	75	24	0	1	24	4	22	1	-
강원	13	5	0	0	5	3	0	-	-
충북	10	2	0	0	2	6	0	-	-
충남	18	8	0	0	8	1	1	-	-
전북	12	2	0	0	2	7	1	1	1
전남	20	8	0	0	8	2	2	-	-
경북	21	6	0	0	6	9	0	-	-
경남	29	12	0	0	12	4	1	-	-
제주	6	3	0	0	3	0	0	-	-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전국 245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대담·토론회 및 연설회를 383회 개최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선거구 수가 많은 서울이 76회, 경기도가 75회의 선거방송토론을 개최하였다. 개최방법은 대담·토론회가 총 192회, 합동방송연설회가 191회였으며 대상별로는 초청대상 후보자의 대담·토론회는 142회, 비초청 대상은 1회, 초청과 비초청 합동으로 실시한 토론회는 49회였다.

이번 선거에서 총 191회의 합동방송연설회가 개최되었는데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140회,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51회의 합동방송연설회가 개최되었다. 연설회 개최 사유를 살펴보면 [표 2-38]과 같다.

[표 2-38] 합동방송연설회 개최 사유별 현황

(단위 : 회)

지역별	계	합동방송연설회(초청·비초청 대상 포함)				방송연설회(비초청 대상)	
		초청대상 후보자 1인	후보자수 5인 이상	참석승낙서를 제출한 후보자 수 미달 과반수	중계방송사 정	후보자 1인	후보자 모두 동의
계	191	2	2	42	5	77	63
서울	43	-	-	14	-	13	16
부산	17	-	-	5	-	8	4
대구	6	1	-	1	-	1	3
인천	12	-	1	2	-	6	3
광주	5	-	-	-	-	3	2
대전	6	-	-	-	-	4	2
울산	5	-	-	-	-	5	-
경기	46	-	1	16	5	11	13
강원	5	-	-	-	-	3	2
충북	2	-	-	-	-	1	1
충남	9	-	-	1	-	5	3
전북	3	-	-	1	-	1	1
전남	10	-	-	2	-	4	4
경북	6	-	-	-	-	6	-
경남	13	1	-	-	-	4	8
제주	3	-	-	-	-	2	1

규칙 제24조(합동방송연설회) 규정에 따르면 초청대상 후보자의 수가 1인뿐이거나 5인 이상인 경우, 참석승낙서를 제출한 후보자 수가 초청대상 후보자 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기타 대담·토론회의 개최·진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기타 대담·토론회의 개최·진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시설·장비의 불비 등을 이유로 연설회만을 중계방송할 수 있다고 통보하여 온 경우, 초청대상 후보자의 수가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의 수보다 적은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등이다.

3) 개최일시·장소 등 결정



대부분 선거운동기간 중반에 개최되었으나 선거운동기간 개시후나 선거일이 임박하여 개최된 경우도 있었다. 개최일자가 선거운동기간개시일 직후일 경우 후보자의 토론 준비시간이 부족하고, 또한 선거일 1~2일전에 개최하는 경우 후보자로서는 제기된 의혹·쟁점에 대해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점을 좀 더 고려하여 개최일시 등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표 2-39] 일자별 개최 현황

(단위 : 회)

구 분	계	3/27	3/28	3/29	3/30	3/31	4/1	4/2	4/3	4/4	4/5	4/6	4/7	4/8
계	383	1	13	4	8	37	50	72	59	45	33	32	24	5
서울	76	-	-	-	3	6	10	17	17	6	8	5	2	2
부산	30	-	4	3	1	-	4	2	4	4	1	1	6	-
대구	16	-	-	-	-	1	1	3	4	2	-	-	3	2
인천	21	-	-	-	-	-	1	5	3	4	4	4	-	-
광주	13	-	-	-	2	2	-	-	3	2	1	-	3	-
대전	12	-	-	-	-	-	2	-	2	2	-	6	-	-
울산	11	-	-	-	2	1	1	2	2	1	-	2	-	-
경기	75	-	-	-	-	6	9	10	10	7	17	14	2	-
강원	13	-	-	-	-	1	5	7	-	-	-	-	-	-
충북	10	-	1	1	-	3	1	-	1	1	1	-	1	-
충남	18	-	-	-	-	5	5	4	4	-	-	-	-	-
전북	12	-	2	-	-	1	2	2	1	2	-	-	1	1
전남	20	-	-	-	-	4	1	12	1	2	-	-	-	-
경북	21	-	2	-	-	2	3	2	2	5	1	-	4	-
경남	29	1	4	-	-	4	4	4	4	6	-	-	2	-
제주	6	-	-	-	-	1	1	2	1	1	-	-	-	-

※ 합동방송연설회 191회 중 105회는 토론회에 연이어서 개최, 86회는 별도 개최

또한, 현재의 방송여건상 많은 유권자가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의 확보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제18대 국선 후보자토론회의 중계방송 시간대별 현황을 살펴보면, 오후 2-3시 사이에 49회로 가장 많이 개최되었고, 오전 10-11시 사이가 46회, 오후 10-11시 35회로 나타났다.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인 오후 8-9시 사이 개최된 토론회는 총 26회에 그쳐, 좋은 시간대 편성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표 2-40] 중계방송시간대별 개최 현황

(단위 : 회)

구분	합계	8시 ~ 9시	9시 ~ 10시	10시 ~ 11시	11시 ~ 12시	12시 ~ 13시	13시 ~ 14시	14시 ~ 15시	15시 ~ 16시	16시 ~ 17시	17시 ~ 18시	18시 ~ 19시	19시 ~ 20시	20시 ~ 21시	21시 ~ 22시	22시 ~ 23시	23시 ~ 24시	24시 ~ 25시	25시 ~ 26시
		계	383	7	9	44	29	21	13	48	24	16	21	19	23	26	15	35	24
서울	76	-	-	1	9	6	2	4	6	7	2	2	16	9	6	4	2	-	-
부산	30	4	6	5	-	6	-	3	1	-	-	-	3	1	-	1	-	-	-
대구	16	-	-	2	5	1	1	3	2	-	-	-	-	-	2	-	-	-	-
인천	21	-	-	11	2	2	-	1	1	-	-	-	-	2	2	-	-	-	-
광주	13	-	-	2	2	-	2	3	1	1	-	-	-	-	-	-	1	1	-
대전	12	-	-	2	2	1	1	-	-	-	3	2	1	-	-	-	-	-	-
울산	11	2	2	-	-	-	-	-	-	-	-	1	2	-	-	-	3	2	1
경기	75	-	1	4	-	-	2	2	-	7	2	7	-	13	5	23	4	3	-
강원	13	-	-	6	2	-	-	4	1	-	-	-	-	-	-	-	-	-	-
충북	10	-	-	-	-	-	1	1	-	-	-	-	1	-	-	2	6	-	-
충남	18	-	-	2	2	2	1	2	1	1	3	1	-	1	-	1	-	-	-
전북	12	-	-	5	1	-	2	4	-	-	-	-	-	-	-	-	-	-	-
전남	20	-	-	2	2	2	-	8	5	-	-	-	-	-	-	-	1	-	-
경북	21	-	-	1	1	1	-	5	1	-	1	-	-	-	2	1	6	-	2
경남	29	1	-	1	1	-	1	5	4	-	9	6	-	-	-	1	-	-	-
제주	6	-	-	-	-	-	-	3	1	-	1	-	-	-	-	-	1	-	-

방송사별 중계현황을 살펴보면 공영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공영방송사를 통해 중계방송되었지만, 공영방송사가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계방송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 결과 공영방송사의 중계방송 외에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통하여 중계방송되었다.



이번 제18대 국선 선거방송토론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모든 중계방송이 케이블방송사에서 진행되었고, 충남을 제외한 그 외 시·도의 경우는 주로 KBS와 MBC에서 중계되었다.

[표 2-41] 방송사별 중계현황

(단위 : 회)

구분	합계	중계주관방송사			
		KBS	MBC	민영	케이블
계	448	91 (16)	107 (18)	8	177 (32)
서울	90	-	-	-	76 (14)
부산	30	14	16	-	-
대구	16	7	9	-	-
인천	30	-	-	-	21 (9)
광주	13	6	7	-	-
대전	12	4	8	-	-
울산	11	6	5	-	-
경기	84	-	-	-	75 (9)
강원	32	7 (9)	6 (10)	-	-
충북	12	4 (1)	6 (1)	-	-
충남	18	6	-	8	4
전북	12	6	6	-	-
전남	27	10 (3)	10 (4)	-	-
경북	21	6	15	-	-
경남	29	12	17	-	-
제주	12	3 (3)	3 (3)	-	-

※() : 주관방송사 외 중계방송사 수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공영방송사를 중계방송사로 하여 토론회의 일정을 정하면 공영방송사는 양사 모두 동시에 이를 중계방송 하여야 하는데, 이는 토론회를 2회 이상 개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토론회마다 양사 모두가 동시에 중계방송하여야 함을 말한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전국을 방송권역으

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계방송하지 아니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법정기한내에 문서로 통보받도록 하고 있다.

[표 2-42] 중계방법 현황

(단위 : 회)

구 분	합 계	대담·토론회		합동방송연설회	
		생방송	녹화방송	생방송	녹화방송
계	383	123	69	35	156
서울	76	4	29	2	41
부산	30	11	2	8	9
대구	16	10	-	6	-
인천	21	-	9	-	12
광주	13	8	-	-	5
대전	12	6	-	-	6
울산	11	6	-	2	3
경기	75	1	28	3	43
강원	13	8	-	2	3
충북	10	8	-	2	-
충남	18	9	-	1	8
전북	12	9	-	2	1
전남	20	9	1	1	9
경북	21	15	-	4	2
경남	29	16	-	-	13
제주	6	3	-	2	1

4) 토론회 초청대상 선정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와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

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그리고 직전선거에서 당해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이다. 이중 하나의 요건만 갖추게

되면 초청대상에 포함되었다. 다만,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에게도 선거방송토론 기회를 부여하였다.

[표 2-43] 선거방송토론 참석지역 후보자수 현황

(단위 : 회)

구분	계	참석자 수	불참자수
대담·토론회	668	618	50
합동방송연설회	433	417	16
미개최	15		
계	1,116	1,035	66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수는 중도 사퇴한 3명을 제외하고 1,113명이었다. 대담·토론회에 참석한 후보자는 618명, 불참한 후보자는 50명이고, 합동방송연설회에 참석한 후보자는 417명, 불참한 후보자는 16명이 있으며, 15명 후보자가 불참으로 토론회 및 연설회가 개최되지 못한 경우도 있다.

토론자가 2인(41회, 21%)인 토론회는 대부분 후보자의 불참으로 발생한 경우였고, 토론자가 5인 이상인 경우는 초청대상 후보자와 비초청대상 후보자가 함께하는 합동토론회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이렇게 참석 후보자가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후보자가 참석하지 않는다면 선거방송토론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일부 당선이 유력한 후보자를

중심으로 토론 경험 부족 또는 타 후보자의 집중 공격을 우려해 토론회 참석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는바, 앞으로 후보자의 토론회 참석 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표 2-44] 참석 후보자수별 대담·토론회 개최현황

(단위 : 회)

구 분	합 계	대담토론회 참석 후보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계	192	8	41	69	53	18	2	1
서울	76	3	11	10	8	1	-	-
부산	30	1	3	8	1	-	-	-
대구	16	1	2	5	1	1	-	-
인천	21	-	2	4	3	-	-	-
광주	13	-	1	3	3	1	-	-
대전	12	-	-	2	3	1	-	-
울산	11	-	2	3	1	-	-	-
경기	75	1	7	13	7	-	1	-
강원	13	-	-	2	3	3	-	-
충북	10	-	-	-	3	5	-	-
충남	18	-	3	2	3	1	-	-
전북	12	-	-	2	4	1	1	1
전남	20	-	4	3	2	1	-	-
경북	21	2	2	5	5	1	-	-
경남	29	-	4	6	4	2	-	-
제주	6	-	-	1	2	-	-	-

선거에서 대체적으로 열세에 있는 후보자들은 토론회를 강력히 원하지만, 우세에 있거나 현직에 있는 후보자들은 토론회 참석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었다. 토론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벌칙규정은 없으며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토론회 등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불참 사유에 대한 고지 여부는 당해 후보자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당해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참 고지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사회자 안내멘트 또는 자막방송을 이용할 수 있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대담·토론회 192회 중 41회, 합동방송연설회는 191회 중 16회의 선거방송토론에서 일부 후보자가 불참하였다.

[표 2-45] 불참후보자가 있었던 토론회 등 개최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 계	개 최 내 역		미개최
		대담·토론회	합동방송연설회	
계	57 / 386	41 / 195	16 / 191	7
불참 후보자수	81명	50명	16명	15명

(일부 후보자가 불참한 토론회 등 / 전체 토론회 등)

후보자수로는 총 66명의 후보자가 대담·토론회, 연설회에서 불참하였고, 이로 인해 미개최된 선거구까지 포함하면 불참한 총 후보자수는 81명으로 집계되었다. 각 정당별 불참자수 내역과 불참사유는 [표 2-46], [표 2-47]과 같다.

[표 2-46] 각 정당별 불참자 현황

구 분	계	통 합 민주당	한나라 당	자 유 선진당	민 주 노동당	친박 연대	진보 신당	평화통일 가정당	무소속
계	81	8	32	9	2	8	1	11	10
대담·토론회	50	4	25	8	2	1	-	5	5
연설회	16	1	4	-	-	5	-	2	4
미개최	15	3	3	1	-	2	1	4	1

[표 2-47] 토론회 불참 사유 현황

(단위 : 명)

계	개인사정	다후보 불참	사고 및 질병	선거운동 일정	정당행사 참석
81	56	8	7	7	3

5) 사회자 선정

사회자는 정당의 당원이 아닌 학계·방송계 등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 중에서 위원 또는 중계방송사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다. 사회자는 토론회마다 1인을 선정하고 필요에 따라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예비사회자를 확보하였다.

이번 제18대 국선 후보자토론회에서는 학계가 214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방송·언론계에서 126명, 법조계 9명 등이었다.

[표 2-48] 사회자 선정 현황

(단위 : 명)

구분	총계	학계	방송언론 계	시민단체	법조계	기타
계	383	214	125	4	12	28
대담·토론회	192	127	60	1	3	1
합동방송연설	191	87	65	3	9	27

사회자를 선정함에 있어 방송국에 전적으로 맡기는 경우도 있으나, 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평상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사회자 후보군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선거방송토론에 있어서 사회자는 어느 특정 정당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지 혹은, 비당원이지만 편향된 생각을 갖고 활동을 하지 않았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다방면의 여론을 수렴하여 선정해야 한다.

사회자가 토론진행방식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가운데 진행상의 실수를 범하거나 후보자의 위법 발언 등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를 막기 위하여 선정된 사회

자를 설명회, 토론진행표·시나리오 작성 등에 참여시켜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치도록 배려하였다. 이는 토론회 진행중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의 대부분이 사회자에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6) 토론진행방식 결정

토론진행방식은 초청대상 후보자 모두를 초청하는 합동토론을 원칙으로 하였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전문)위원의 심의 및 소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과정을 거쳤으며 후보자수, 토론시간 등을 감안하여 시간총량제에 의한 후보자 주도권형, 찬스 발언, 패널제 활용 등 다양한 토론 포맷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개발·적용하였다.

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주제로 다루는 진행방식은 사회자가 각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질문하는 유형(21회)과 후보자 모두발언 후 개별질문하는 유형(15회), 사회자가 개별질문 후 후보자가 보충질문을 하는 혼합형(14회)이 주로 사용되었다.



일부지역의 토론 개최 사례를 보면 모든 토론회에서 후보자주도 개별질문형과 개별보충질문형의 방식으로 공약사항을 토론주제로 다루었다. 이런 진행방식들은 각 후보자들의 내세운 공약에 대해 심층적인 토론이 가능하기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유력후보자에게만 질문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정책중심의 토론회 진행을 위해 토론주제를 후보자 공약으로 선정한 후 각 후보자에게 상대후보자의 공약을 검토 후, 질문하도록 함으로써 토론의 충실도와 함께 후보자별 균형성을 유지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

선거방송토론에서 토론의 전체적인 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진행방식으로, 이를 작성하고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토론회의 진행방식 등을 구상할 때에 후보자의 수, 토론시간, 질문과 답변시간 등을 토론형식과 토론규칙 모두를 고려해서 결정하여야 한다.

[표 2-49] 토론회 진행방식 사용 내역

구 분	개최 횟수	기조 연설	사회자주도형		후보자주도형					혼합 형	맺음 말	
			공동 질문	개별 질문	공동 질문	개별질문		주도 권형	자유 형			
						사전 지정	자유 지정					
지역구	토론회	184	181	171	77	1	15	62	63	6	84	183
	대담회	8	8		8							7

선거방송토론에서는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한 발언기회 및 시간을 배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짧은 발언시간 내에서 질문·답변하는 형식을 통해 정책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질문 및 보충질문을 비롯한 토론자의 총 발언시간을 융통성 있게 제한하는 시간총량제나 추가질문 및 반론 시간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7) 주제 선정

토론주제는 정치·외교·경제·사회·복지·교육과 함께 대부분의 지역에서 후보자들의 공약을 토론주제로 다루었다. 중앙의 비례대표 후보자토론회를 제외한 지역구 총 184회의 토론회 중에서 93회 토론회(50.5%)가 후보자들의 공약을 주제로 다루었다.

[표 2-50] 공약을 포함한 토론회 수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총 토론회	30	12	9	9	8	6	6	28	8	8	9	9	10	13	16	3	184
공약토론	9	0	9	1	5	0	5	17	4	4	7	7	8	11	4	2	93
공약토론 비율(%)	30	0	100	11.1	62.5	0	83.3	60.7	50	50	77.8	77.8	80	84.6	25	66.7	50.5

다. 위원 워크숍 개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08. 4. 17(목)부터 18(금)까지 이틀에 걸쳐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선거방송토론 개최결과를 바탕으로 선거방송토론의 관리 및 업무 개선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선거방송토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위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특히, 오창우(계명대) 교수를 초청하여 선거



방송토론의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한 특강을 듣고 토론을 하는 등 전반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워크숍에서는 제18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의 개선사항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를 통하여 토론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지금까지의 토론회를 통하여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공직선거법,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및 운영규정의 개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다만,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대안은 추후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주요 토의내용으로 토론회의 중계방송과 관련하여 중앙토론위원회가 확보한 제3의 장소에서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방송을 원하는 모든 방송사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의견에 제3의 장소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경우 스튜디오 이외에 토론회 제작과 관련한 기술진도 갖추고 있는 장소를 섭외해야 하고 현재보다 제작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 외부장소를 사용한 토론회 제작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사회자 선정과 관련하여는 사회자승낙서와 함께 중립성을 서약하는 서약서를 병행해 징구하여, 토론위원회의 토론회 사회를 맡은 후 특정 정당의 후보자로 출마하는 사례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각계 각층의 우수한 사회자 자원의 확보를 위해 공모제 도입 및 다양한 사회자 풀을 구성하여 각 주제별로 전문가를 사회자로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정당(후보자) 초청기준의 조정과 관련하여 토론회의 활성화를 위해 초청대상 정당(후보자)의 선정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언론기관에서 여론조사를 미 실시하거나, 여론조사 대상자 명단에서 누락되어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초청 대상 정당(후보자)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질문사항 작성 및 선정방법에 있어 1개의 주제에 대해 3배수 질문사항을 선정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토론회 개최 전일까지 선정하게 되어있는 현행 규정을 개최 전까지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위원 자격 기준의 강화로 위원 자격조건에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 당해 토론위원회 관할 구역내 거주하는 자, 입후보제한(사직기한)을 선거일전 60일까지 사직하도록 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동일하게 규정을 정비도록 하고 토론위원회 위원의 유동정원제를 도입하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정원 관리방법을 준용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라. 시·도 사무국장 워크숍 개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08. 4. 23(수)~24(목)까지 이틀에 걸쳐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결과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와 더불어 선거방송토론 업무 개선사항에 대한 연구·검토를 통한 관리역량 강화를 위하여 16개 시·도 사무국장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은 토론진행 방법 설명, 토론 I,II,III, 강평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토론방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모의 선거방송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각 조별로 주어진 토론유형과 주제에 따라 큐시트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토론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토론을 진행함에 있어 자유토론, 완전 시간총량제, 제한적 시간총량제 등의 토론진행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각 진행방식별 장단점에 대하여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주요 토론내용으로는 지역 공영방송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방

송시간이 너무 적어 토론회 개최시간 협의에 너무 제약이 많아 중앙 공영방송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방송 시간 이외의 시간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시·도비례대표선거 등을 제외한 지역구 선거 후보자토론회에 있어 공영방송사의 동시 생중계 규정은 양 방송사에 동일한 시간대 편성이 어려워 중계방송 편성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공영방송사가 중계방송을 하였더라도, 지역 케이블이나 인터넷 방송사를 통한 재방송을 실시하는 등의 재방송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초청대상 선정에 있어 여론조사에 의한 선정 부분은 미 실시 되는 곳도 많으며, 전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등 일률적인 적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료의 수집도 어려워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초청대상 후보자의 토론회 불참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초청대상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 실시에 있어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직접 시행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등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회자 공모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자 풀의 확대가 필요하며, 토론회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공정성, 형성평 등의 지나친 강조보다는 흥미를 끌 수 있는 주제와 진행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의제선정에 있어 각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받아 질문으로 활용하여 각 후보자가 강조하는 공약에 대해 유권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등의 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토론회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질문사항을 사전에 공개하는 방법도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제 3 절 선거방송토론의 원활한 주관·진행

1. 개 요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토론에 대비하여 위원 정비 등 조직 정비와 더불어 선거방송토론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위원들을 보강하고 각종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 분야별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이슈 중심으로 토론의제를 발굴·조사하였다. 또한 선거방송토론의 공정관리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 정당 및 공영방송사,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협의 등의 업무 조정 및 의견 수렴을 하였다.

특히, 각종 선거에서의 대담·토론회 등의 원활한 주관·진행을 위하여 법 제8조 7(선거방송토론위원회) 등에 근거하여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후 67개의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신설하였다.

2. 주요 추진실적

가. 각급토론위원회 조직 정비

1) 위원 정비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토론의 차질없는 주관·진행을 위하여 위원이 결원되어 있거나 결원이 예상된 토론위원회는 선거방송토론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정비하였고, 필요한 경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임시고용원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토론

회 준비 및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다.

2) 전문위원 활용 등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자체 실정에 따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토론 준비와 관련하여 자문(전문)위원을 정비토록 하였다. 이에 방송계·학계 등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을 적극 활용하였으며, 특히 종합유선방송사의 중계방송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담당 프로듀서 등 제작관계자를 전문위원으로 위촉 가능토록 하였다.

전문위원들은 △ 토론회의 개최 및 진행에 관한 사항 △ 토론회의 사회자·질문자 선정 및 토론주제·진행방식에 관한 사항 △ 토론회의 개최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 토론회의 기법 및 모델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토론문화 육성을 위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수시 자문하고 있다.



나. 여론조사 공표 자료 수집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 초청할 후보자의 선정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언론기관의 범위)의 규정에 따른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2008. 2. 26 ~ 3. 26)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정당, 후보자)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위원회에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공영방송사와 서울특별시의 안에 있는 지역방송사업자에 한한다) 및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현황(법인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을 요청하고, 문화관광부에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현황(법인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을 요청하였다.

통보된 언론기관 현황에 따라 '여론조사 공표자료 수집계획'을 수립하여 중앙 및

시·도위원회 별로 여론조사 수집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수집대상은 여론조사·공표기간중 여론조사의 실시와 공표가 모두 이루어진 여론조사만 해당되며, 공표시기는 간행물에 표시된 발행일자에도 불구하고 실제 발행·배부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조사·공표내용은 정당의 지지율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후보자(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의 지지율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포함하였다.

[표 2-51] 위원회별 전국단위 언론기관 배정내역

위원회	방송사명	구	분
중앙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주), (주)SBS	지상파TV	방송사업자 (5개사)
	(주)매일경제티브이, (주)와이티엔	보도전문 PP	
서울 (40)	한겨레, 경향신문, 중앙일보, 조선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 동아일보, 한국일보, 아시아투데이신문, 시사일보, 선경신문, 선경일보, 내외일보, 서울일보, 연합매일, 통일일보, 매일노동뉴스, 아시아일보, 전국일보, 한국국정일보, 환경일보, 환경시사일보, 시사법률일보, 한국매일, 민주일보, The City, 법률일보, 시사환경일보, 내외대한뉴스, 일간스포츠, 서울경제, 에이엠세븐, 메트로, 무궁화일보, 더데일리포커스, 해동일보, 한반도일보, 굿모닝서울, e환경일보, 글로벌타임즈	일반일간신문 (61개사)	
인천(3)	헤럴드경제, 한국경제, 한민일보		
광주(1)	일간아침신문		
경기(14)	내일신문, 문화일보, 국민일보, 매일경제, 현대일보, 시대일보, 전국매일, 수도권신문, 매일신문, 산아일보, 경기도민일보, 수도권일보, 투데이뉴스, 한민족일보		
강원(1)	국민복지일보		
전남(1)	목포일보		
제주(1)	제주타임스		

또한, 대상 언론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관련 공문을 전달하고 협의하는 등 사전 안내 및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대상 언론기관 보도사항(방송·신문)의 지속적인 모니

터링을 실시하여 여론조사를 실시·공표하고도 통보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였다.

특히, 수집 자료는 조사대상의 전체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를 선정하고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조사한 경우는 수집대상에 포함하되,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의 규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제외하고 조사대상 언론기관이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다른 언론기관에서 인용 보도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였다.

다. 여론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주제 수집 및 지원

현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토론주제의 수집을 위하여 각종 시민·사회단체에 주제 추천을 의뢰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추천되어지는 실적은 상당히 저조하여 그 실효를 충분히 거둘 수 없었다. 따라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지역·성별·연령·직업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한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하여 토론주제를 수집함으로써 토론주제 수집 경로를 다원화하고 토론주제 선정의 공정성을 도모하였다. 즉, 시·도별로 지역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지역 주민의 관심사와 이슈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함으로써 토론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시·도 및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제 선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매 토론회 종료후 시달하였다. 시·도별 여론조사 현황은 [표 2-52]와 같다.

[표 2-52] 시·도별 여론조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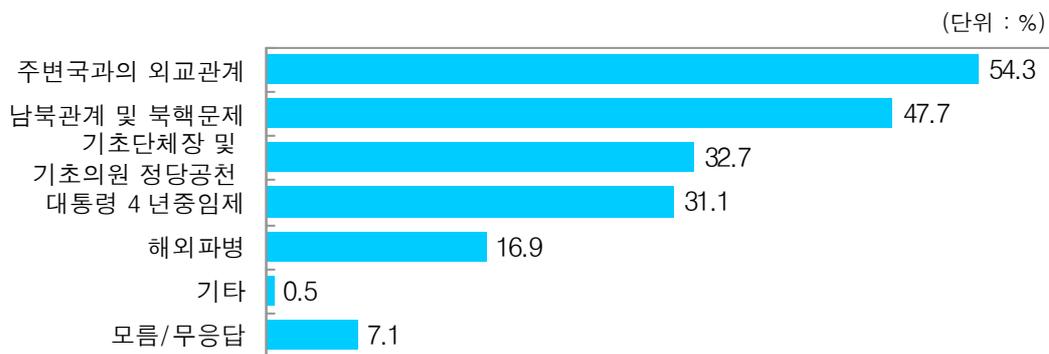
지역별	조사대상	표본수	조사방법	조사기관
서울	유권자	1,000명	전화조사	한국리서치
부산	전문가	100명	전화조사	정음리서치
	유권자	1,400명		
대구	유권자	1,200명	전화조사	리서치21
대전	유권자	1,200명	전화조사	한국리서치
강원	유권자	1,200명	전화조사	강원사회조사연구소
경남	유권자	1,680명	전화조사	한국리서치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주변국과의 외교관계, 부정부패 척결, 부동산정책, 물가안정, 공교육강화 및 사교육해소, 고령화대책이 중요하다라는 응답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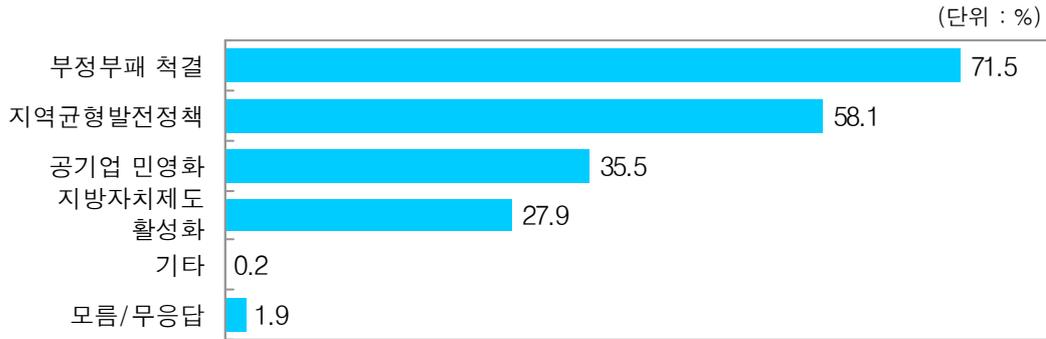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치 분야 현안[그림 11]으로 '주변국과의 외교관계'가 중요하다라는 응답이 54.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남북관계 및 북핵문제(47.7%)',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32.7%)', '대통령 4년 중임제(31.1%)', '해외파병(16.9%)' 등의 순이었다.

[그림 11] 정치분야 현안(서울특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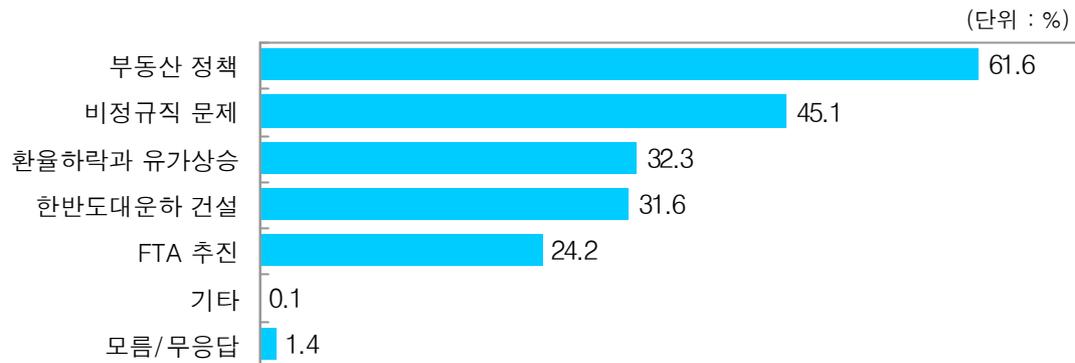
행정 분야 현안[그림 12]으로 '부정부패 척결'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71.5%로 가장 높은 가운데, '지역균형발전정책(58.1%)', '공기업 민영화'(35.5%), '지방자치제도 활성화'(27.9%) 등의 순이었다.

[그림 12] 행정분야 현안(서울특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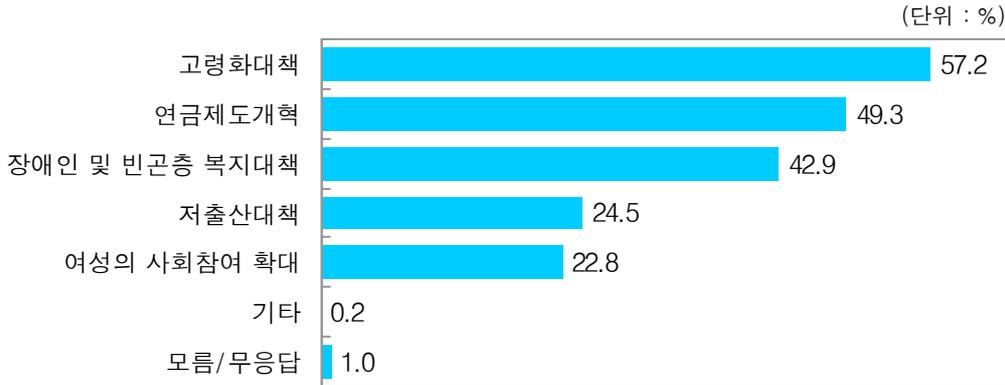
경제 분야 현안[그림 13]에서는 '부동산 정책'(61.6%)을 가장 중요하다고 했으며 '비정규직 문제(45.1%)', '환율하락과 유가상승(32.3%)', '한반도 대운하 건설(31.6%)', 'FTA 추진(24.2%)' 등의 순이었고, 교육 분야 현안으로는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 해소'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55.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육환경 개선(41.9%)', '대입 자율화(34.8%)', '지역 간 격차해소(33.3%)'의 순이었다.

[그림 13] 경제분야 현안(서울특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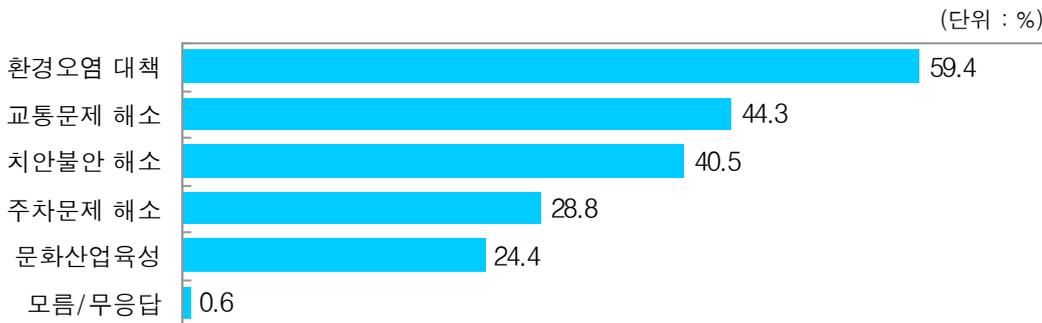
복지 분야 현안[그림 14]으로 '고령화 대책'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57.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연금제도 개혁'(49.3%), '장애인 및 빈곤층 복지대책'(42.9%), '저출산 대책'(24.5%),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22.8%) 등의 순이었다.

[그림 14] 복지분야 현안(서울특별시)



일반사회 분야[그림 15]에서는 '환경오염 대책'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59.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통문제 해소(44.3%)', '치안불안 해소(40.5%)' 등의 순이었으며, 지역 현안으로는 '재개발 및 재건축 확대'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54.3%로 가장 높은 가운데, '재산세 공동과세 문제(37.1%)', '용산 미군기지 활용(36.1%)', '승례문 복원 문제(30.2%)' 등이 뒤를 이었다.

[그림 15] 일반사회분야(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음리서치에 의뢰하여 각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전문가 100명과 16개 구·군 일반시민 1400명을 대상으로 한 토론주제수집 여론조사 결과, 후보자에게 가장 질문하고 싶은 내용[표 2-53]은 물가 및 유가 안정 방안(빈도 367)이었다.

[표 2-53] 후보자에게 가장 질문하고 싶은 내용(부산광역시)

순위	분야	내용	빈도
1	경제민생	물가 및 유가 안정 방안	367
2	경제민생	경기 활성화 방안	350
3	보건/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복지분야 개선방안	229
4	여성교육	사교육비 감소방안	206
5	경제민생	취업문제, 실직자 문제	170
6	정치외교	권력형 비리 & 부정부패	122
7	여성교육	공교육 현실화 방안	102

정치·외교 분야에서는 대북지원정책 및 통일관련 정책을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응답한데 비해 일반 유권자들은 권력형비리 & 부정부패, 정부조직개편, 대북지원정책 및 통일관련정책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물가 및 유가안정방안이 가장 높았다.

여성·교육 분야에서는 유권자 전문가 모두 사교육비 감소방안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했고, 공교육현실화 방안이 그 뒤를 이었고,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모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복지 분야 개선방안을 최우선으로 답하였다. 사회·환경 분야에서는 유권자와 전문가가 약간 차이를 보여 유권자는 환경보전·녹지공간조성 등 환경분야 개선방안을 전문가는 고령화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가장 많이 답하였다.

우리나라가 안고있는 가장 큰 현안문제[표 2-54]로는 경기활성화 방안(빈도 494)이 가장 높았고 물가 및 유가 안정 방안(빈도 247), 취업·실직자 문제(빈도 211), 사교

육비 감소방안(빈도 133), 빈부격차 해소(빈도 13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표 2-54]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현안문제(부산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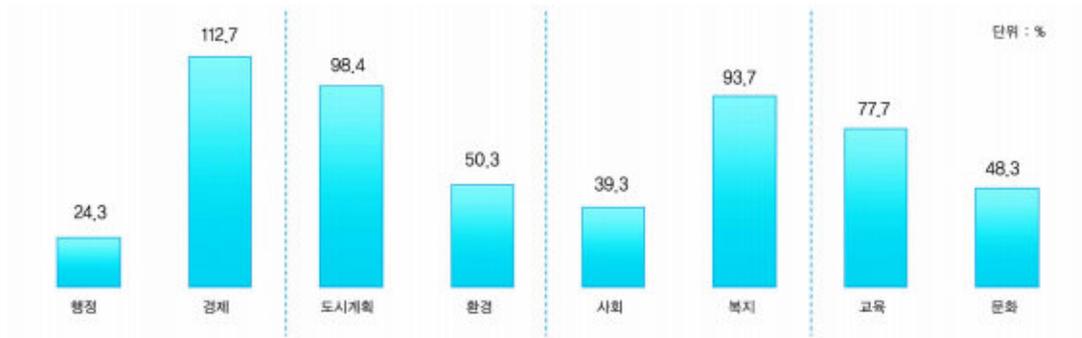
순위	분야	내용	빈도
1	경제민생	경기 활성화 방안	494
2	경제민생	물가 및 유가 안정 방안	247
3	경제민생	취업문제, 실직자 문제	211
4	여성교육	사교육비 감소 방안	133
5	경제민생	빈부격차 해소	132
6	정치외교	권력형 비리 & 부정부패	129

부산의 현안문제로는 기업 이전으로 인구 감소 대처방안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실업 및 취업활성화, 경기 활성화 방안, 교통 불편, 물가 및 유가 안정방안 순이었다. 후보자에게 묻고 싶은 부산의 현안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경기활성화 방안이 가장 높은 가운데, 실업 및 취업 활성화, 침체된 제조업 활성화, 도시재개발 등 건설분야 발전, 부산시 인구감소에 대한 대처방안 등이 뒤를 이었다.

3)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리서치21에 의뢰하여 대구지역 각 선거구별 여론 주도층 각 100명씩 총 1,200명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정책의제로 '일자리 창출', '지역개발' 등 경제 분야(112.7%)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도로여건', '주거환경 개선', '대중교통', '주차문제' 등 도시계획 분야(98.4%), '소외계층지원 정책/제도 개선', '노인', '저소득층' 등 복지 분야(93.7%), '청소년 관련 시설', '교육시설 확충/개선' 등 교육 분야(77.7%), '쓰레기 처리' 등 환경(50.3%), '문화시설 인프라 확충', '문화예술행사/프로그램' 등 문화 분야(48.3%) 순이었으며, 사회 분야(39.3%), 행정 분야(24.3%)에 대해서는 정책의제로서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16] 국회의원선거 정책의제 현황(대구광역시)



경제 분야에 대한 중요도가 112.7%로 매우 높았는데 그중에서도 '일자리 창출'(42.4%), '지역개발'(20.6%) 관심도가 높았으며, '경기 활성화'(6.8%), '지역산업육성/산업 활성화'(6.3%), '물가 안정'(5.2%), '기업유치/공단조성'(4.7%)이 5대 의제로 나타났다. 이밖에, '규제 완화'(3.8%), '지역 균형개발'(3.7%), '자금지원'(3.3%), '부동산경기 활성화'(2.7%), '신성장 산업 활성화'(2.1%), '재래시장 활성화', '인력 양성'(각 1.8%), '세금 감면'(1.1%), '비정규직 문제', '인구문제'(각 0.8%) 등이 있었다.

중요도 98.4%로 두 번째로 높았던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도로여건'(32.8%), '주거환경 개선'(17.2%), '대중교통'(12.3%), '주차문제'(10.9%), '공원/휴식시설'(5.6%)이 대구시의 주된 의제로 나타났으며, 이밖에 '도시미관 개선'(3.9%), '도시 인프라 구축'(3.5%), '난개발 해소', '생활체육시설'(각 3.2%), '상/하수도'(3.1%), '공항 확충'(1.1%), '시장/마트 등 생필품 구입 편리성'(0.6%), '은행 등 편의시설'(0.5%), '의료 시설/여건'(0.4%) 등이 있었다.

4) 대전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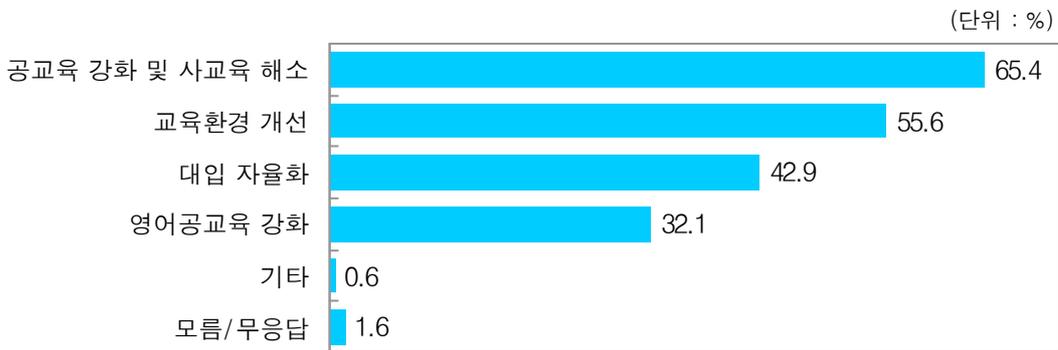
대전광역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대전 동구·중구·대덕구 지역 유권자 600명을 대상으로 TV토론을 위한 의제선정조사를 하였다. 유권자들은 지지후보 결정에 중요한 정치 분야 현안으로 '주변국과의 외교관계(51.7%)'를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남북관계 및 북핵문제(44.8%)',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 공천(37.0%)' 등이 뒤를 이었다.

행정 분야 현안으로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68.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정부패 척결(67.5%)', '지방자치제도 활성화(37.7%)' 등의 순이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58.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비정규직 문제(47.8%)', '환율하락과 유가상승(39.6%)', '한반도대운하 건설(29.0%)' 등의 순이었고, 중장기적 경제과제로는 '물가안정(71.2%)', '일자리 창출(58.3%)', '경제적 양극화 해소(33.1%)' 등이다.

교육 분야 현안[그림 17]으로 '공교육강화 및 사교육해소(65.4%)', '교육환경 개선(55.6%)', '대입 자율화(42.9%)' 를 주요 의제로 생각했고, 복지 분야 현안으로는 '고령화 대책'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54.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제도(50.6%)', '연금제도 개혁(49.9%)' 등의 순이었다.

[그림 17] 교육분야 현안(대전광역시)



일반사회 분야에서는 '환경오염 대책'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54.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통문제 해소(43.8%)', '치안불안 해소(41.2%)' 등의 순이었으며, 지역 현안으로는 '신도심과 구도심간 교육격차 해소(57.0%)'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49.6%로 가장 높은 가운데,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39.3%)', '경전철 등 대중교통체계 개편(35.1%)' 등이 뒤를 이었다.

대전광역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대전 서구·유성구 지역 유권자 600명을 대상으로 TV토론을 위한 의제선정조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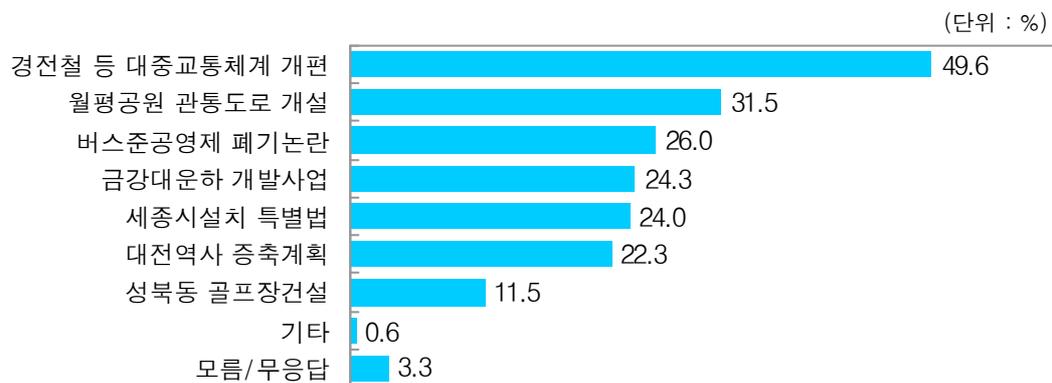
유권자들은 지지후보 결정에 중요한 정치 분야 현안으로 '주변국과의 외교관계(55.1%)'를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남북관계 및 북핵문제(48.8%)',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33.9%)', '대통령 4년 중임제(33.5%)' 등이 뒤를 이었다.

행정 분야 현안으로는 '부정부패 척결'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69.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지역균형발전정책(66.4%)', '지방자치제도 활성화(35.2%)' 등의 순이었다. 경제분야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58.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비정규직 문제(48.4%)', '환율하락과 유가상승(35.2%)', '한반도 대운하 건설(30.7%)' 등의 순이었고, 중장기적 경제과제로는 '물가안정(71.9%)', '일자리 창출(60.5%)', '경제적 양극화 해소(30.1%)' 등이었다.

교육 분야 현안으로는 '공교육강화 및 사교육해소(68.1%)', '교육환경 개선(57.3%)', '대입 자율화(38.6%)'를 주요 의제로 생각했고, 복지 분야 현안으로는 '고령화 대책'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59.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연금제도 개혁(46.8%)',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제도(45.8%)' 등의 순이었다.

일반사회 분야에서는 '환경오염 대책'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59.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통문제 해소(42.0)', '치안불안 해소(40.8%)' 등의 순이었으며, 지역 현안으로는 '경전철 등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49.6%로 가장 높은 가운데, '월평공원 관통도로 개설(31.5%)', '버스 준공영제 폐기 논란(26.0%)', '금강대운하 개발 산업(24.3%)', '세종시 설치 특별법(24.0%)' 등이 뒤를 이었다.

[그림 18] 지역 현안(대전광역시)



5) 강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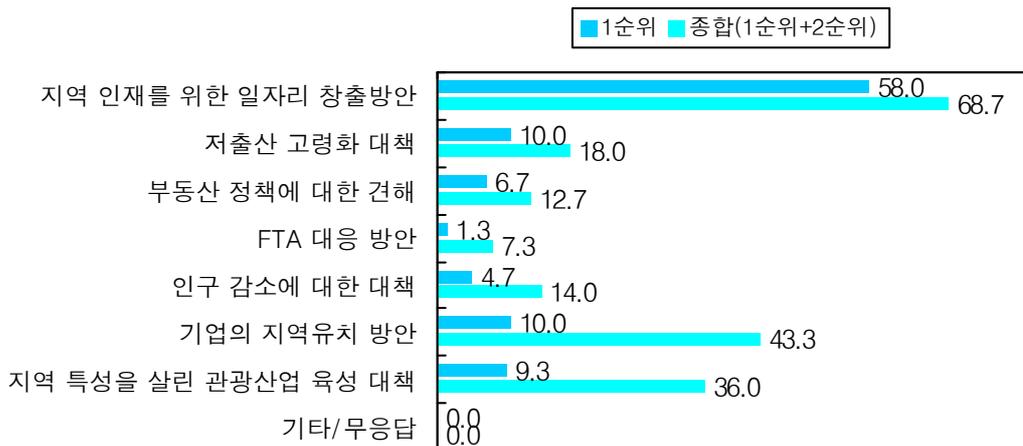
강원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강원사회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선거구별 만 19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주제선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강릉시의 경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의 TV토론 과제로는 '지방분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원의 책무'라는 응답이 1순위와 2순위 합계 53.3%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중앙정치권에서의 강원도 영향력 확대'(50.0%), '지방재정 확대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45.3%), '남북평화시대와 분단도로서의 강원도 역할'(26.7%) 등의 순이었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13.3%) '대통령 임기제 개선 등 정치개혁에 관한 사항'(10.7%)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사회/교육/문화/여성 분야의 TV토론 과제로는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이라는 응답이 55.3%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수도권과 지역간의 교육격차 해소방안'(34.7%), '개발과 환경보전에 대한 견해'(29.3%) '장애인 및 노약자에 대한 복지 대책'(28.0%), '대학 등록금 인상 대책'(2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노동/복지/과학 분야에서는 '지역 인재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68.7%)', '기업의 지역유치 방안'(43.3%),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산업 육성 대책'(36.0%), '저출산 고령화 대책'(18.0%) 등의 순이었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견해'(12.7%)와 'FTA 대응 방안'(7.3%)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19] 경제/노동/복지/과학 분야(강릉시)



지역현안의 TV토론 과제로는 '원주-강릉간 철도 조기건설'이라는 응답이 1순위와 2순위 합계 52.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포 등 해양레포츠 관광단지 조성'(46.6%), '동계올림픽 유치'(39.3%), '강릉과학산업단지 조성'(22.7%)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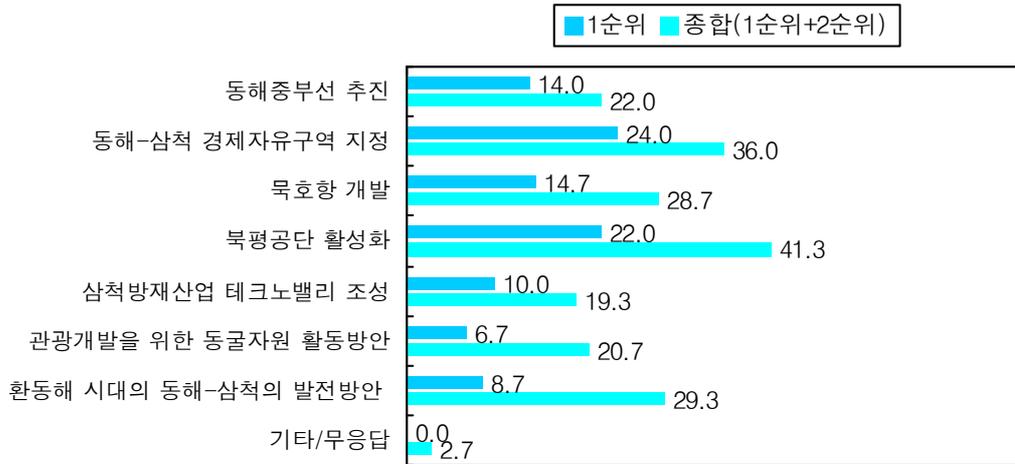
또한, 동해·삼척시의 만 19세 이상 유권자 150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를 살펴보면,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의 TV토론 과제로는 '지방분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채무'라는 응답이 1순위와 2순위 합계 63.3%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중앙정치권에서의 강원도 영향력 확대'(58.7%), '지방재정 확대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 방안'(23.3%),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22.7%) 등의 순이었고 '남북평화시대와 분단도로서의 강원도 역할'(17.3%), '대통령 임기제 개선 등 정치개혁에 관한 사항'(12.0%)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사회/교육/문화/여성 분야의 TV토론 과제로는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이라는 응답이 48.0%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장애인 및 노약자에 대한 복지 대책'(39.3%), '대학 등록금 인상 대책'(36.0%), '수도권과 지역간의 교육격차 해소방안'(32.0%), '개발과 환경보전에 대한 견해'(2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노동/복지/과학 분야에서는 '지역 인재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74.7%)', '기업의 지역유치 방안'(36.0%), '저출산 고령화 대책'(28.7%),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산업 육성 대책'(18.7%) 등의 순이었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견해'(18.0%)와 'FTA 대응 방안'(4.0%)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지역현안의 TV토론 과제[그림 20]로는 '북평공단 활성화'이라는 응답이 1순위와 2순위 합계 41.3%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동해-삼척 경제자유구역 지정'(36.0%), '환동해 시대의 동해-삼척의 발전방안'(29.3%), '묵호항 개발'(28.7%), '동해중부선 추진'(22.0%), '관광개발을 위한 동굴 자원 활용방안'(20.7%)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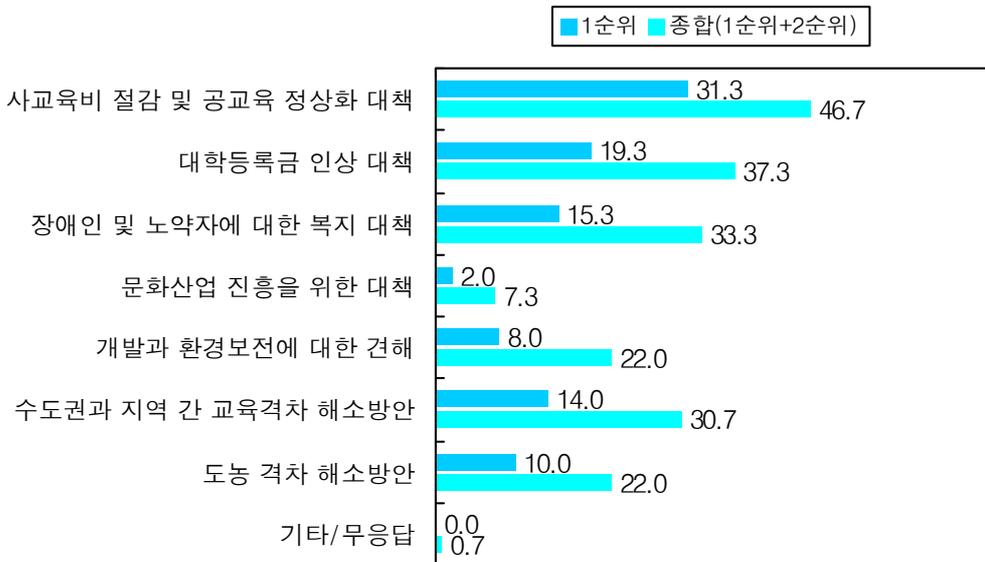
[그림 20] 지역현안의 TV토론 과제(동해·삼척시)



그리고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의 만 19세 이상 유권자 150명을 대상으로 주제선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의 TV토론 과제로는 ‘중앙정치권에서의 강원도 영향력 확대’라는 응답이 1순위와 2순위 합계 52.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방분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원의 책무’(48.0%), ‘지방재정 확대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34.7%),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24.0%) 등의 순이었고 ‘남북평화시대와 분단도로서의 강원도 역할’(22.7%), ‘대통령 임기제 개선 등 정치개혁에 관한 사항’(16.0%)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사회/교육/문화/여성 분야의 TV토론 과제[그림 21]로는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이라는 응답이 46.7%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대학 등록금 인상 대책’(37.3%), ‘장애인 및 노약자에 대한 복지 대책’(33.3%), ‘수도권과 지역간의 교육격차 해소방안’(30.7%), 도·농 격차 해소 방안’(22.0%)과 ‘개발과 환경보전에 대한 견해’(2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사회/교육/문화/여성 분야의 TV토론 과제(속초시·고성군·양양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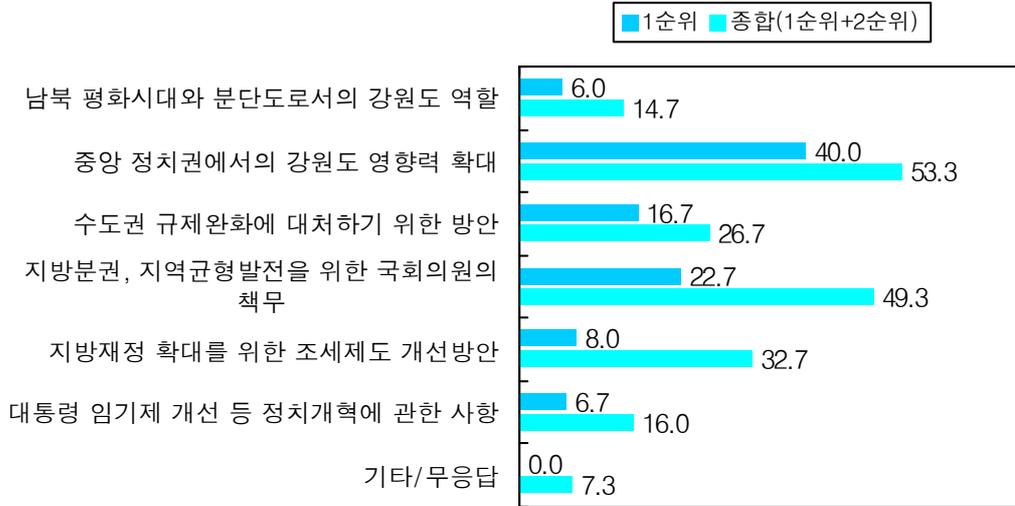


경제/노동/복지/과학 분야에서는 ‘지역 인재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43.3%)’,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산업 육성 대책’(42.5%),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견해’(28.0%), ‘저출산 고령화 대책’(26.0%)과, ‘FTA 대응 방안’(26.0%) 등의 순이었고, ‘기업의 지역 유치 방안’(19.3%)와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12.0%)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지역현안의 TV토론 과제로는 ‘설악-금강 연계 관광단지 조성’이라는 응답이 1순위와 2순위 합계 43.3%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동해북부선 조기 추진’(42.0%), ‘오색 케이블카 사업’(28.0%), ‘설악동 재개발 사업’(26.0%),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방안’(26.0%), ‘설악권 축제 활성화 방안’(19.3%), ‘해양 마리나 시설 추진’(12.0%) 등의 순이었다.

원주시의 만 19세 이상 유권자 150명을 대상으로 주제선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의 TV토론 과제[그림 22]는 ‘중앙 정치권에서의 강원도 영향력 확대’라는 응답이 1순위와 2순위 합계 53.3%로 가장 높았다.

[그림 22]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의 TV토론 과제(원주시)



다음으로 ‘지방분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원의 책무’(49.3%), ‘지방재정 확대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32.7%),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26.7%) 등의 순이었고, ‘대통령 임기제 개선 등 정치개혁에 관한 사항’(16.0%), ‘남북평화시대와 분단도로서의 강원도 역할’(14.7%)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사회/교육/문화/여성 분야의 TV토론 과제로는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이라는 응답이 54.0%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대학등록금 인상 대책’(37.3%), ‘장애인 및 노약자에 대한 복지 대책’(33.3%), ‘수도권과 지역간의 교육격차 해소방안’(28.7%), ‘개발과 환경보전에 대한 견해’(2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노동/복지/과학 분야에서는 ‘지역 인재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63.3%), ‘저출산 고령화 대책’(35.3%),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견해’(33.3%), ‘기업의 지역유치 방안’(26.0%),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산업 육성 대책’(20.7%) 등의 순이었고,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10.7%)과 ‘FTA 대응 방안’(8.7%)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지역현안의 TV토론 과제로는 ‘혁신도시 조기완공 방안’이라는 응답이 1순위와 2순위 합계 40.7%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50만 원주 대비계획’(36.7%), ‘기업도시와 지역발전 연계방안’(32.0%), ‘제2영동고속도로 조기 추진’(30.0%), ‘원주·강릉간 철도 조기건설’(28.7%)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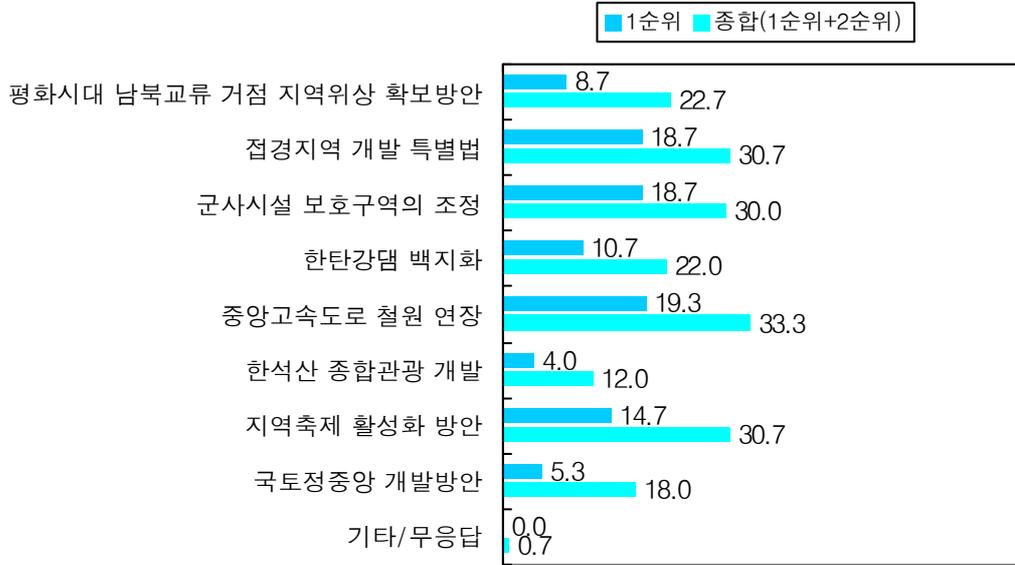
철원·화천·양구·인제의 만 19세 이상 유권자 150명을 대상으로 주제선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의 TV토론 과제로는 '중앙정치권에서의 강원도 영향력 확대'라는 응답이 1순위와 2순위 합계 56.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방분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원의 책무'(50.0%), '남북 평화시대와 분단도로서의 강원도 역할(28.7%)과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28.7%), '지방재정 확대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22.7%) 등의 순이었고, '대통령 임기제 개선 등 정치개혁에 관한 사항(12.7%)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사회/교육/문화/여성 분야의 TV토론 과제로는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이라는 응답이 56.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장애인 및 노약자에 대한 복지 대책'(36.7%), '대학 등록금 인상 대책'(32.0%), '수도권과 지역간의 교육격차 해소 방안(22.0%), 도·농 격차 해소 방안(2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노동/복지/과학 분야에서는 '지역 인재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69.1%)', '저출산 고령화 대책'(34.2%), FTA 대응 방안(26.2%),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산업 육성 대책'(22.8%), '기업의 지역유치 방안(20.8%) 등의 순이었고,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15.4%)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견해(11.4%)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지역현안의 TV토론 과제[그림 23]로는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이라는 응답이 1순위와 2순위 합계 33.3%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접경지역 개발 특별법(30.7%)과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30.7%),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조정(18.7%), '평화시대 남북교유거점 지역위상 확보방안(22.7%), '한탄강댐 백지화(22.0%), '국토 정중앙 개발방안(18.0%) 등의 순이었다.

[그림 23] 지역현안의 TV토론 과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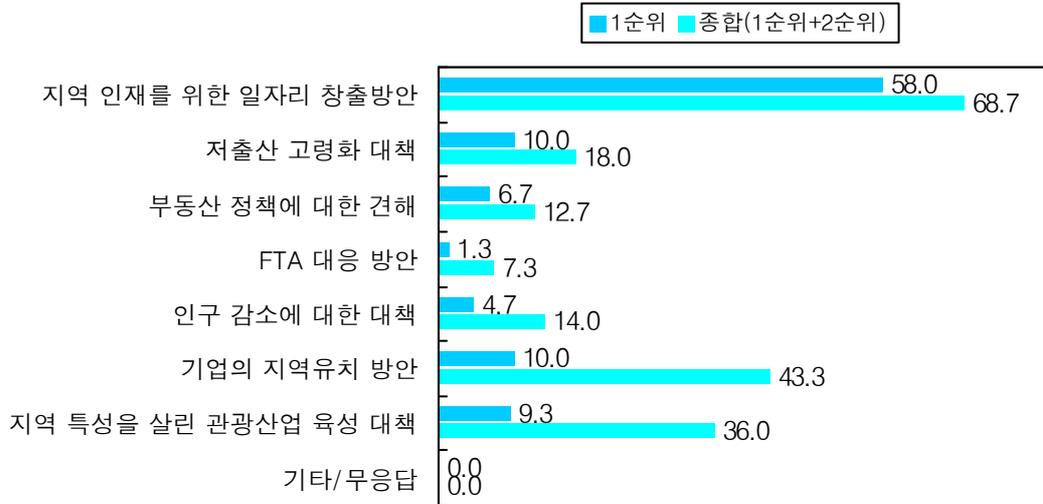


강원도 춘천시의 만 19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의 TV토론 과제로는 ‘중앙정치권에서의 강원도 영향력 확대’라는 응답이 1순위와 2순위 합계 54.0%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지방분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원의 책무’(48.0%),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31.3%), ‘지방재정 확대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29.3%) ‘남북평화시대와 분단도로서의 강원도 역할’(2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교육/문화/여성 분야의 TV토론 과제로는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이라는 응답이 58.7%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대학등록금 인상 대책’(34.0%), ‘장애인 및 노약자에 대한 복지 대책’(31.3%), ‘수도권과 지역간의 교육격차 해소방안’(27.3%), ‘개발과 환경 보전에 대한 견해’(1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노동/복지/과학 분야[그림 24]에서는 ‘지역 인재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68.0%), ‘기업의 지역유치 방안’(40.0%),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견해’(28.7%), ‘저출산 고령화 대책’(22.7%),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산업 육성 대책’(22.0%) 등의 순이었고,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10.7%)과 ‘FTA 대응 방안’(7.3%)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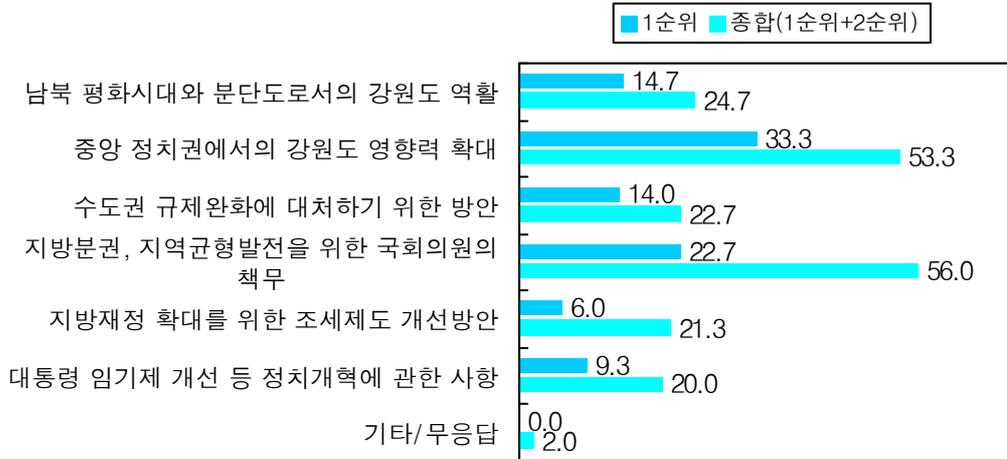
[그림 24] 경제/노동/복지/과학 분야(춘천시)



지역현안의 TV토론 과제로는 ‘경원선 복선전철의 조기 완공’이라는 응답이 1순위와 2순위 합계 77.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동서 고속도로 조기 완공’(37.3%), ‘대형 유통점 입점제한 및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21.3%), ‘도시발전 미래상’(18.7%) 등의 순이었다.

태백·영월·평창·정선의 만 19세이상 유권자 15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의 TV토론 과제[그림 25]로는 ‘지방분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원의 책무’라는 응답이 1순위와 2순위 합계 56.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중앙정치권에서의 강원도 영향력 확대’(53.3%), ‘남북평화시대와 분단도로서의 강원도 역할’(24.7%),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22.7%) ‘지방재정 확대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21.3%), ‘대통령 임기제 개선 등 정치개혁에 관한 사항’(2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5]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의 TV토론 과제(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사회/교육/문화/여성 분야의 TV토론 과제로는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이라는 응답이 46.7%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대학등록금 인상 대책’(34.0%)과 ‘수도권과 지역간의 교육격차 해소방안’(34.0%), ‘장애인 및 노약자에 대한 복지 대책’(31.3%), ‘도·농 격차 해소 방안’(2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노동/복지/과학 분야에서는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산업 육성 대책’(34.7%), ‘기업의 지역유치 방안’(28.7%), ‘저출산 고령화 대책’(26.7%) 등의 순이었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견해’(14.0%)와 ‘FTA 대응 방안’(11.3%)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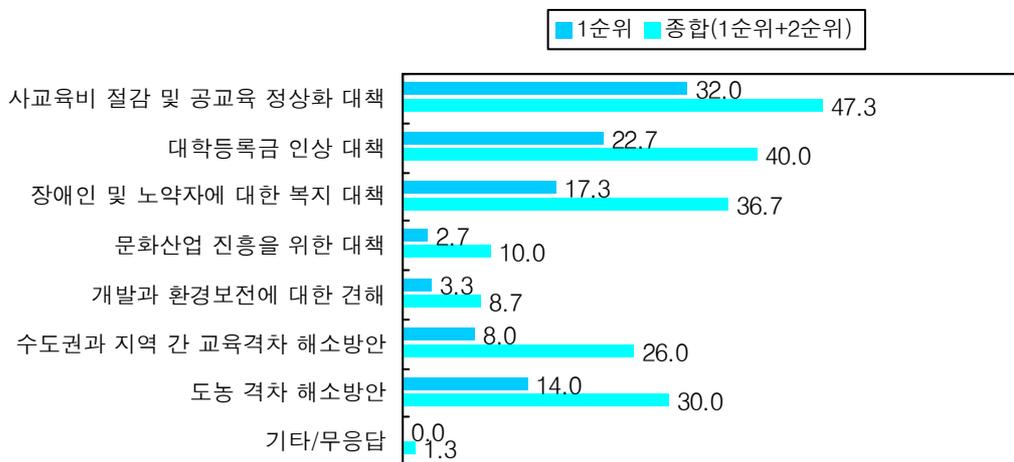
지역현안의 TV토론 과제로는 ‘2018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응답이 1순위와 2순위 합계 41.3%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인구감소 대책’(37.3%), ‘폐광지역 활성화 대책’(35.3%), ‘원주-강릉 철도 추진’(22.7%) 등의 순이었고, ‘지역 축제 활성화 방안’(10.0%), ‘평창남부지역 개발 방안’(9.3%), ‘내국인 출입 카지노 추가설치 반대’(9.3%)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강원도 홍천·횡성의 만 19세 이상 유권자 150명을 대상으로 주제선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결과를 살펴보면,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의 TV토론 과제로는 ‘지방분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원의 책무’라는 응답이 1순위와 2순위 합계 51.3%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중앙정치권에서의 강원도 영향력 확대’(48.0%), ‘지방재정 확대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33.3%),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26.7%), '대통령 임기제 개선 등 정치개혁에 관한 사항'(21.3%), '남북 평화시대와 분단도로서의 강원도 역할(16.7%) 등의 순이었다.

사회/교육/문화/여성 분야의 TV토론 과제[그림 26]로는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이라는 응답이 47.3%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대학 등록금 인상 대책'(40.0%), '장애인 및 노약자에 대한 복지 대책'(36.7%), 도·농 격차 해소 방안(30.0%), '수도권과 지역간의 교육격차 해소방안'(26.0%) 등의 순이었고,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대책'(10.0%)과 '개발과 환경보전에 대한 견해'(8.7%)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26] 사회/교육/문화/여성 분야의 TV토론 과제(홍천군·횡성군)



경제/노동/복지/과학 분야에서는 '지역 인재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68.7%)', '저출산 고령화 대책'(26.7%)과 '기업의 지역유치 방안'(26.7%),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견해'(23.3%),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산업 육성 대책'(22.7%) 등의 순이었고, 'FTA 대응 방안'(16.7%)과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13.3%)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지역 현안의 TV토론 과제로는 '농가지원 대책' 이라는 응답이 1순위와 2순위 합계 44.0%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원주-강릉간 철도건설 조기 추진'(32.0%), '농축산물 유통망 확충'(30.0%), '특성화 및 유명대학 캠퍼스 유치'(26.0%), '친환경 기업 유치 방안'(24.7%) 등의 순이었고, '포 사격장 이동'(14.7%), '군사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

방안'(12.0%), '한우촌 조성'(12.0)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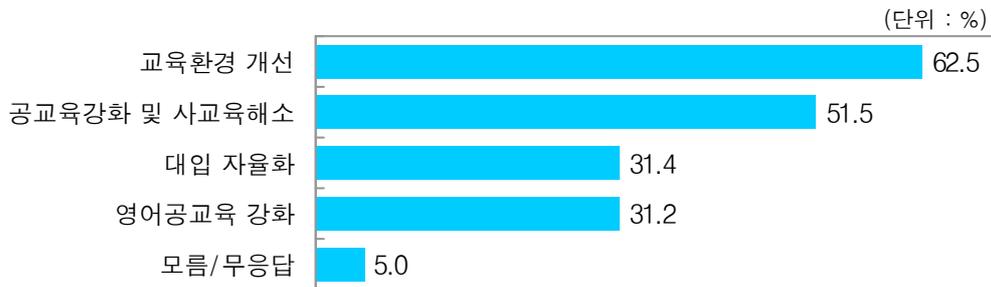
6) 충청남도

충청남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충청남도 지역 유권자 1,200명을 대상으로 지지후보 결정에 중요한 분야별 현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지후보 결정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치 분야 현안에서 유권자들은 '남북관계 및 북핵문제'라는 응답이 41.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주변국과의 외교관계(41.3%)', '대통령 4년 중임제(35.6%)' 등을 중요시했다. 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지역 균형발전정책'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67.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정부패 척결(60.5%)'이라는 응답이 높은 반면에 '공기업 민영화(18.9%)'라는 응답은 낮은 수준에 그쳤다.

경제 분야 현안으로는 '부동산 정책'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51.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비정규직 문제(43.9%)', '환율하락과 유가상승(39.7%)'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고, 중장기적 경제과제로는 '물가안정'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74.6%로 가장 높은 가운데, '일자리 창출(59.8%)' 을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다.

교육 분야[그림 27]에서는 '교육환경 개선(62.5%)'이 가장 높았고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 해소(51.5%)' 가 뒤를 이었으며, 복지 분야에서는 '고령화 대책'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59.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제도(47.0%)', '연금제도 개혁(43.2%)' 등의 순이었다.

[그림 27] 교육분야(충청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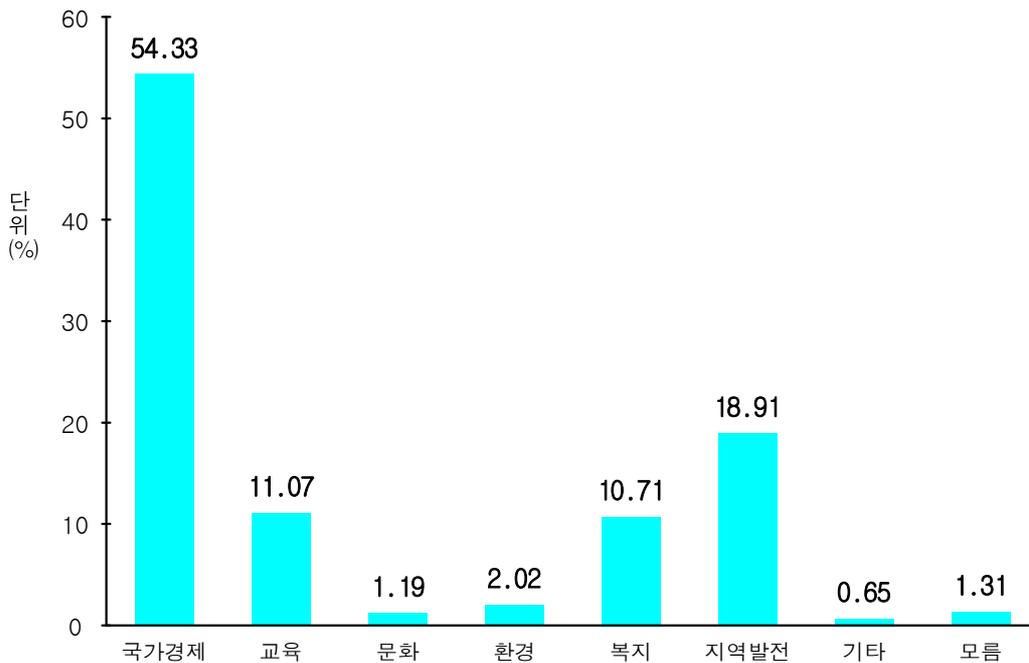
일반사회 분야 현안에 있어서는 '환경오염 대책(58.3%)', '치안불안 해소(37.9%)' 등이 지역 현안에 있어서는 '기름유출사고 대책(52.7%)', '지역 낙후성 탈피와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44.0%)' 등이었다.

한편, 정치권의 가장 큰 문제로는 '정치인들의 부정부패가 심하다'는 응답이 58.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국익보다는 소속정당이나 지역의 이익만 추구한다(33.4%)', '정당을 바꾸는 철세정치인들이 많다(30.1%)' 등의 순이었다.

7) 경상남도

경상남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경남도내 일반유권자 1680명을 대상으로 한 토론의제 여론조사 결과, 방송토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영역[그림 28]으로는 국가경제(54.33%)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지역발전(18.91%), 교육(11.07%), 복지(10.71%)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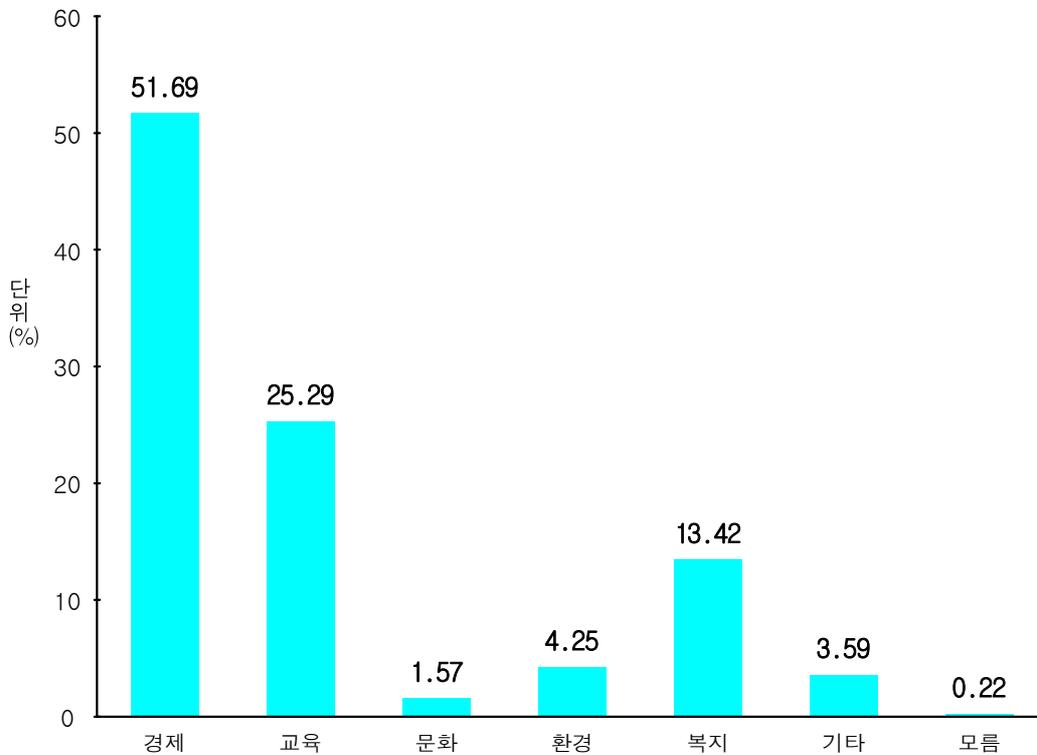
[그림 28] 방송토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영역(경상남도)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으로는 중소기업 육성(37.4%), 의료·생명 산업단지 육성(16.8%), 수출 농·어업 집중육성(14.0%), 문화·관광산업육성(13.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의 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하는 문제로는 경제 활성화(37.3%)가 가장 많았고 균형있는 지역개발(22.4%), 공교육 정상화(15.8%), 복지시설 마련(11.5%)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경남도내 전문가 44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방송토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영역으로 일반유권자와 마찬가지로 경제(51.69%)를 최우선으로 하였고, 그 뒤로 교육(25.29%), 복지(13.4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9] 방송토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영역(경상남도)



반면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으로는 중소기업 육성(44.1%), 문화·관광산업육성(21.3%), 의료·생명 산업단지 육성(14.1%)의 순으로 일반유권자들과 다소 차이를 보였으며, 지역의 현안 가운데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

으로는 경제 활성화(34%), 균형있는 지역개발(29.3%), 공교육정상화(18.8%)의 순으로 나타나 일반 유권자와 같은 양상을 보였다.

라. 진행방식 개발 및 지역별 토론의제 발굴·조사

토론자간 공정한 발언기회 부여 및 효율적 시간운영에 관한 방식 및 토론의 역동성을 높이고 심층토론이 가능한 진행방식을 개발하기 위하여 각종 후보자토론회 및 정책토론회의 진행방식 작성시 전문위원의 충분한 자문을 구하였다. 또한, 미국 대통령선거의 TV토론 형식 등을 조사하여 향후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은 토론 진행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토론회의 주제는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집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다양한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이번 제18대 국선 후보자토론회에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단체의 추천(149회)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각종 여론조사(112회),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의제 수집(107회), 후보자들의 공약사항 등 자료수집(107회)의 순이었다. 기타방법으로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들의 의견 수렴, 제18대 비례대표 국선 후보자 토론회 의제 참조, 구청홈페이지 또는 시위원회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 등 다양했다.

[표 2-55] 토론의제 수집 방법

구 분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대담·토론회 개최횟수	3	33	13	10	9	8	6	6	29	8	8	9	9	10	15	16	3	195
여론 조사	1	9	5	9	9	8	4	6	1	8	8	4	3	5	13	16	3	112
전문가단체 추천	1	24	8	9	9	4	5	6	24	8	8	5	9	10	-	16	3	149
신문·방송 언론매체	1	15	4	4	9	3	4	6	13	8	8	4	6	6	-	16	-	107
후보자 공약사항	-	24	5	6	-	7	4	6	11	5	2	6	6	9	-	16	-	107

의제수집방법으로 ‘여론조사’ 한 가지 방법만을 사용한 지역이 있는 반면, 위의 4가지 방법(여론조사, 전문가단체 추천, 언론매체, 후보자 공약사항)외에도 인터넷을 활용하여 유권자들의 의견을 수집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지역도 있었다.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역현안 414회, 사회 390회, 정치 169회 순이었고, 비례대표 토론회의 경우 정치·경제·사회를 고루 사용하였다.

[표 2-56] 토론의제 분야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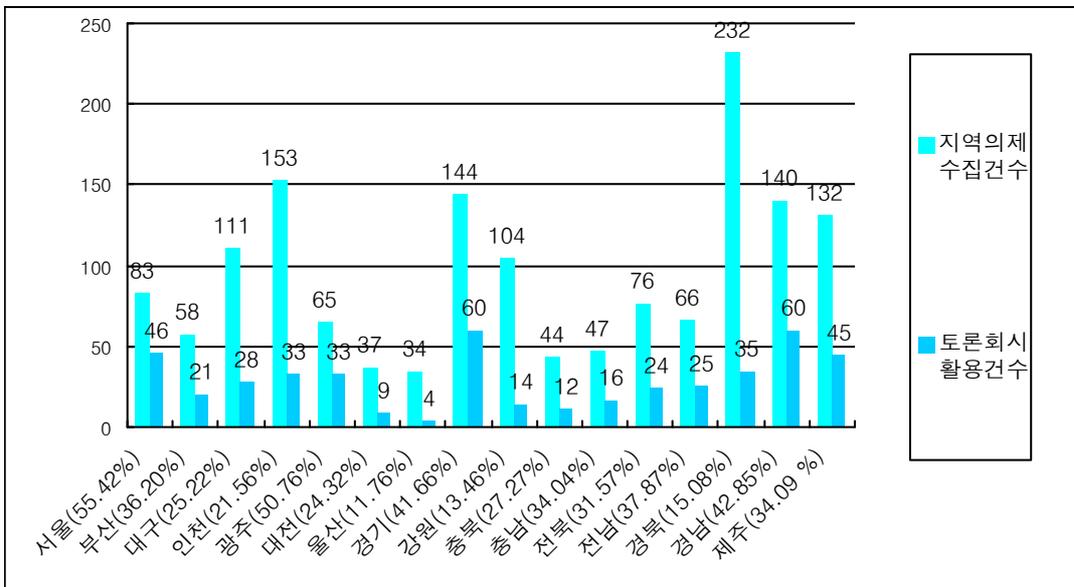
구 분	정 치	경 제	사 회	지역현안	공 약	개 인	합 계
비례대표	4	4	4	-	-	-	12
서울	43	46	88	44	26	8	255
부산	2	6	18	9	-	-	35
대구	1	3	16	12	1	24	57
인천	4	9	22	25	-	1	61
광주	3	9	14	19	19	5	69
대전	4	5	11	5	-	-	25
울산	4	2	11	5	9	1	32
경기	26	29	84	55	39	19	252
강원	8	3	15	25	17	16	84
충북	6	4	16	14	12	-	52
충남	5	10	19	17	5	4	60
전북	31	2	14	55	14	43	159
전남	8	7	17	26	18	4	80
경북	14	9	20	31	2	27	103
경남	6	7	16	59	-	1	89
제주	-	1	5	13	4	1	24
계	169	156	390	414	166	154	1449

각 분야별 의제를 선정함에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인 경우는 지역현안과 관련된 지역의제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지역현안에 관한 질문사항을 작성할 때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핵심적인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지역현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예리하게 다룰 수 있도록 주의하여 작성해야 한다. 제18

대 국선 선거방송토론의 서울·경기지역은 공통질문형을 통해 사회적인 이슈나 문제들을 토론의제로 많이 사용했다. 이 외에도 후보자주도권형과 자유형에서는 대부분 후보자 공약사항과 개인에 관한 부분들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처럼 각 시·도가 지역현안을 의제로 수집한 건수는 1,526건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토론회에서 지역의제를 토론의제로 활용한 건수는 전체의 27.1%정도(465건)였으며 특히, 서울·광주지역이 수집건수의 절반이상을 활용하였다.

[그림 30] 지역의제 수집현황



마.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신설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각종 선거에서의 후보자 토론회의 원활한 주관·진행을 위하여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단위로 설치되어 있던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단위로 65개[표 2-57]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공직선거법」 제8조의7·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변경에 따라 1개(기흥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천안시 구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2008.3.21, 제860호)의 제정으로 천안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1개를 폐지하고 천안시서북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천안시동남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2개를 설치하였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신설되는 해당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7제1항 및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였다.

특히, 위원회 증설이 완료된 후 실시되는 선거방송토론은 대항소위원회를 구성치 않고 당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운영하도록 하였다.

[표 2-57] 신설위원회 현황

시 도 명	신설위원회명	시 도 명	신설위원회명
부산(1)	중구	강원(10)	평창군, 양구군, 철원군
대구(1)	중구	충북(6)	단양군, 보은군, 옥천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인천(2)	중구, 옹진군	충남(7)	태안군, 금산군, 연기군, 계룡시,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경기(5)	동두천시, 이천시, 가평군, 의왕시, 연천군		
강원(10)	삼척시, 태백시, 정선군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 횡성군	경북(10)	울릉군, 예천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
전북(6)	완주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전남(10)	장성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화순군, 완도군, 진도군, 영암군, 함평군, 신안군	경남(7)	고성군,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함양군, 산청군, 합천군

제 4 절 선거방송토론의 실무연수·연구·평가

1. 개 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 실무직원들의 방송제작관련 전문지식의 함양으로 선거방송토론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선거방송토론 주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수 기회를 마련하였다. 특히, 선거방송토론 주관·진행에 필요한 실무능력 배양과 상·하위원회간 의견 교류를 통해 위원회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선거방송토론 전문인 토론타운회를 개최하였으며, 연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토론의 효과분석을 통한 효용성 연구와 제18대 국선 후보자토론회 주제·진행방식을 발간하였다.

또한, 제18대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토론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 세미나와 관련 학회의 선거방송토론 전문가 등의 발전적 대안 의견을 수렴하는 세미나를 후원하는 등 선거방송토론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 주요 추진실적

가. 토론 실무관계자 위탁 연수

선거방송토론 실무담당자들의 방송제작관련 전문지식 함양으로 선거방송토론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공정하고 유익한 선거방송토론 제작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집합연수를 실시하였다.



방송 제작 메카니즘과 프로그램의 제작 등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함과 동시에 제1, 2기에서 나타난 보완사항을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큐시트 제작을 직접 수행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등 토론타운회를 준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 실시한 위탁연수는 그 교육대상을 구·시·군위원회에까지 확대 실시함으로써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위탁연수기관은 (재)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으로 선정하여 집합연수는 9. 1 ~ 9. 5 (1차), 9. 22 ~ 9. 26 (2차), 10. 6 ~ 10. 10 (3차)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연수인원은 중앙, 시·도 및 구·시·군토론회위원회 담당자로 총 34명이었다.

[표 2-58] 집합연수 교육기간

구 분	교육기간	교육일수	연수인원	비고
집합연수	2008. 9. 1 ~ 9. 5	5일	12명	
	2008. 9. 22 ~ 9. 26	5일	12명	
	2008. 10. 6 ~ 10. 10	5일	10명	



모든 강의가 이론 교육과 실습을 병행하도록 구성됨으로써 강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 할 수 있었으며, 현업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을 활용하여 현장감 있는 강의가 이루어졌다.

교육 프로그램 중 외국 토론회 동영상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제작하는 토론회와의 차이점에 대한 비

교·분석할 수 있는 시간과 기존 우리위원회에서 주관한 토론회 영상을 활용하여 개선사항에 대하여 교육생 전원이 토론 할 수 있는 교육시간의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교육시간에 비해 너무 많은 분야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 심도있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 교육분야를 단순화해서 심화학습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



[표 2-59] 집합연수 교육과정 편성표

	일정	강좌	내용	강사
월	13:10-13:30	오리엔테이션	-과정 안내, 오리엔테이션	황영성(KBI)
	13:30-17:30	방송제작 실무의 이해(선거방송토론)	-선거방송토론 방송제작의 실제 -선거방송토론용 기획서 & 큐시트 강독 -큐시트작성실습 -강평 및 최종수정	선거방송토론 제작PD
화	9:30-11:30	방송제작사례연구	-제작사례연구 -기획서 및 촬영구성안 브레인스토밍	다큐 우수작품 제작자
	13:00-17:00	카메라의 이해	-카메라특성과 매뉴얼(HVR-Z1) -카메라 무빙, 영상문법 -화면구성과 촬영테크닉 -촬영구성안 review	촬영감독
수	9:30-12:30	작품촬영실습	-촬영실습, -촬영클리닉	개별촬영
	13:00-18:00	비선형 영상편집 I	-프리미어 프로를 활용한 비선형 영상편집	편집전문강사
목	13:00-19:00	스튜디오 방송제작 실습	-스튜디오제작 시스템의 이해 -스튜디오 오디오, 조명 -스튜디오스태프의 역할과 직무 -부조 스태프의 역할과 직무 -Role Playing 제작실습 -Q&A	안선주/장진동 /김용철 (한국방송 제작단)
금	9:30-12:30	비선형 영상편집 II	-작품편집, 자체시사회	편집전문강사
	12:30-12:50	교육평가 및 수료식	-교육평가 설문, -수료식	황영성

나. 선거방송토론 전문인 토론대회 개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방송토론 주관·진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 배양과 상·하위원회간 상호 의견 교환과 정보교류를 통해 신뢰 증진 및 일체감 형성을 위하여 선거방송토론 전문인 토론대회를 개최하였다.



전국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참여 프로그램 및 실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이론 및 실무 위주의 강의와 자체 토론대회를 통해 주관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실제 토론자로서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이를 통한 선거방송토론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건의·애로사항 등 업무개선을 위한 각종 의견 수렴도 병행하였다.

[표 2-60] 선거방송토론 전문인 토론대회 개최 개요

차 수	일시	장 소	인 원	대 상 위 원 회	비고
제1차	2008. 9. 18 ~ 9. 19	충무 마리나리조트	114명	부산(17), 대구(9), 광주(6), 울산(6), 전북(16), 전남(23), 경북(25), 경남(21),	
제2차	2008. 10. 1 ~ 10. 2	대명 단양콘도	142명	서울(26), 인천(11), 대전(6), 경기(45), 강원(19), 충북(14), 충남(18), 제주(3)	

기존의 직원 실무연수회 진행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특징을 잘 살린 시·도별 직원간 토론대회를 최초로 개최함으로써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연수회가 되었다. 또한, 토론자와 사회자의 역할을 직접 경험해 봄으로서 이들의 어



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공직선거 후보자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연수내용으로는 바람직한 선거방송토론(사무국장 이은철), 선거TV토론 제작의 실제(KBS 시사보도팀 김찬태PD), 행복한 미래를 위한 준비, 시·도별 토론대회로 진행하였으며 토론대회 결과 제1차 대회에는 우승 대전, 준우승 전북이었으며, 제2차 대회에는 우승 강원, 준우승 서울이었다.

[표 2-61] 대진표 및 주제

차 수	대 진 표	토 론 주 제
8 강	부산 : 광주	교육감 선거 직선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서울 : 경기	
	대구 : 울산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여야 한다.
	충북 : 충남	
	전북 : 전남	지역당을 허용하여야 한다.
	대전 : 제주	
경북 : 경남	인천 : 강원	인터넷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되어야 한다.
4 강	:	대통령 중임제 실시되어야 한다.
	:	
	:	토론회 질문사항은 공개하여야 한다.
	:	
결 승	:	후보자 양자토론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토론 효과분석 연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8대 국선 후보자 TV토론의 유권자의 인식 및 평가 등 관심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후보자 TV토론이 유권자의 투표행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전문위원의 자문을 통하여 조사 설계안 작성한 후, 위원회가 조사업체인 (주)월드리서치에 토론회 개최전·후 또는 토론회 개최전·투표후 유권자의 의식 변화 등의 확인을 위한 조사를 의뢰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학회에 용역을 의뢰하여 효과분석을 연구하였다. 이로써, 지난해 17대 대선 선거방송토론의 효과분석에 이어 제18대 국선 선거방송토론을 통한 바람직하고 내실있는 토론회 관리모델을 모색하고 향후 TV토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효율적인 미디어 선거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였다.

[표 2-62] 선거방송토론 효과분석 조사개요

구 분	실험집단 1차 조사	실험집단 2차 조사	통제집단 조사
조사대상	만 19세 이상 서울시 거주 남녀 유권자		
조사지역	서울시 중구, 동작구(을), 용산구, 도봉구(갑)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 및 숙련된 면접원을 이용한 1대1 개별면접 방법		
표본추출	구별 인구비례 다단계 층화 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Sampling)		
		1차 조사 응답자 대상 전수조사	
응답자 선정	Grid Method를 이용한 응답 대상자 Contact		
		1차 조사 응답자 중 비례대표 TV토론과 지역구 TV토론 시청자	비례대표 TV토론 및 지역구 TV토론 비시청자
유효표본	600명	439명 (1차 유효표본의 73.2%)	400명
조사기간	2008. 3. 31 - 4. 3	2008. 4. 9 - 4. 15	2008. 4. 9 - 4. 18

TV대담, 토론회 및 방송 연설 등의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지지후보를 결정하는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즉, 미디어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영향력이 있는 편’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159명(4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134명(38.3%)으로 뒤를 이

어 80% 이상의 응답자가 선거에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력을 보통 이상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V토론 시청이 18대 총선과 관련한 이슈학습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후보자들의 정책 및 공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정도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사전 실험집단은 평균 3.61(SD= 1.336), 사후 실험집단은 평균 4.24(SD=1.112)를 나타냈으며, 이들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TV토론 시청 후,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을 평균 0.626정도 더 잘 알게 되어 TV토론이 유권자들의 이슈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349)=7.555, p<.001$).

TV토론 시청이 태도변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이다. ‘시청 후, 지지 후보자가 바뀌었다’에 대해 응답자들은 7점 만점에서 3.32(SD=1.412) ‘시청 후, 지지후보자가 생겼다’는 3.94(SD=1.111), ‘시청 후, 지지 후보자에 대한 호감이 증가했다’에 동의하는 정도는 평균 4.28(SD=0.956)을 기록해, TV토론이 지지 후보자에 대한 변경보다는 태도 강화의 기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TV토론이 응답자들의 투표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사전-사후 실험집단의 피험자들에게 ‘시청 후, 투표하기로 마음먹었다’의 진술문에 대한 동의정도를 7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우선 지지 후보자에 대한 투표의사는 사전 실험집단의 경우 평균 4.81(SD=1.306), 사후 집단 평균 4.48(SD=0.971)로 TV토론 시청 후 오히려 지지 후보자에 대한 투표의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에 대한 투표의사는 사전 실험집단의 경우 평균 4.77(SD=1.342), 사후 집단의 경우 평균 4.43(SD=.951)으로, 지지 후보자에 대한 투표의사와 마찬가지로 지지 정당에 대한 투표의사도 TV토론 시청 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TV토론 시청이 지지 후보자나 지지 정당을 선택하는 행위를 좀 더 신중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일부 유권자들은 TV토론 시청 후, 자신이 투표하기로 했던 지지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 좀 더 신중히 생각해보거나 다른 후보 및 정당을 염두에 두기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비교분석은 TV토론자체에 대한 평가, 이미지효과, 학습효과,

태도변용, 투표의사, 지역구 후보자별 효과에 대한 영향력 순으로 살펴보았다.

TV토론을 시청하지 않은 통제집단에게 시청하지 않은 이유를 묻은 결과, ‘시청할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총 163명으로 전체의 40.8%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방영 시간을 알지 못해서’가 20.8%를 차지했으며, ‘토론을 좋아하지 않아서’(16.3%), ‘토론 내용이 구태의연해서’(11.3%) 등이 뒤를 이었다. 따라서 응답자들이 TV토론을 시청하지 않은 것은 시간적 여유 부족과 선거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토론에 대한 불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TV토론 시청이 응답자들의 18대 총선과 관련한 이슈 학습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후보자들의 정책 및 공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TV토론을 시청한 실험집단은 평균 4.24(SD=1.112)을 나타냈고, TV토론을 시청하지 않은 통제집단은 평균 3.67(SD=1.304)이었다. 이와 같은 평균차는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TV토론 시청이 후보자들의 정책 및 공약을 더 잘 알게 해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당의 이슈 학습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정당들의 정책 및 공약을 알고 있다’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묻은 결과, 실험집단은 평균 4.25(SD=0.896) 정도로 동의했으며, 통제집단은 평균 3.74(SD=1.211) 정도 동의했다. 따라서 비례대표 후보자 TV토론 시청한 집단이 시청하지 않은 집단보다 정당의 정책 및 공약을 인지하는 정도가 평균 0.514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태도변용에 있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 분석했다. 통제집단에게 ‘지지 후보가 있다’라는 진술문에 동의하는 정도를 묻은 결과 평균 4.23(SD=1.250)로 실험집단의 ‘호감이 증가했다’는 진술문에 대한 동의 정도가 유사하게 나왔다. 후보자 TV토론을 시청한 실험집단은 ‘시청 후, 지지 후보자가 바뀌었다’에 대해 응답자들은 평균 3.32(SD=1.412) 정도의 동의를 나타냈으며, ‘시청 후, 지지 후보자가 생겼다’에 대해 3.94(SD=1.111) 정도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청 후, 지지 후보자에 대한 호감이 증가했다’에 동의하는 정도는 평균 4.28(SD=0.956)을 기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TV토론이 시청자의 이미지 지각, 이슈 학습, 태도, 투표의사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태도변용보다는 강화와 생성의 효과가 더 컸

으며, 이슈 학습과 투표의사의 경우, 사전-사후조사 비교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비교 모두에서 TV토론 시청이 효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토론 주제·진행방식 발간

제18대 국선 후보자 토론회 등의 주제·질문사항 및 진행방식 등의 체계적인 정리·관리 및 후보자 토론회 등의 종합적인 분석·연구로 방송토론의 효율성 강화하기 위해 선거방송토론 주제·진행방식을 발간하였다.

사례집에는 제18대 국선 후보자 토론회 등의 주제·질문사항 및 진행방식 등의 사례 연구와 향후 일선위원회의 선거방송토론 업무 기초 자료로 활용되도록 상세히 기술하였다.

마. 각종 선거방송토론 관련 세미나 개최 후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2008. 6. 16(월) 서울교육문화회관 해금홀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토론 평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는 위원회가 용역 의뢰한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토론 개최결과 평가」 사업의 중간평가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및 직원,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장을 비롯한 참여 연구진 등이 참석하여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토론자의 토론내용 및 위원회의 보완사항 요구를 적극 수용하였으며, 용역수행 연구원이 행정학·언론학·법학 등 다양한 전공분야의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토론에 대한 전반적인 개최결과를 평가함에 있어 특정분야의 시각분야보다는 각기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어 결과 보고서 내용이 충실해 질 것으로 사료되었다.

한편,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장·상임위원·위원 등이 참석하여 종합 토론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발전방향 등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등 어느 때보다 열띤 토론이 이루어져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또한, 위원회는 2008. 11. 15(토) 연세대학교 베어드홀에서 한국방송학회 가을철 정기 학술대회를 활용하여 한국방송학회 방송과 정치 연구회 주관으로 「텔레비전 선거방송토론 발전 방안」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후원하였다.

백선기 성균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박상호(한국방송협회) 연구원, 송종길(경기대) 교수가 “유권자의 TV토론 이용 동기가 정치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관하여 발제하였으며, 이에 이수범(인천대) 교수, 이종희(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또한, 이호은(청운대) 교수가 “미 대선의 TV토론과 한국 대선의 TV토론 비디오스타일에 관한 비교 연구”에 관하여 발제하였으며, 범기수(성균관대) 교수, 김찬태(KBS) PD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제 5 절 바람직한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1. 개 요

올해로 제4회를 맞이한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는 위원회가 대학생들의 올바른 토론 관 확립 및 민주시민 토론교육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으로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이에 앞서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토론대회를 위한 체험학습을 실시함으로써 새롭게 진행되는 토론방식의 이해를 도와 대학생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2. 주요 추진실적

가. 대학생 토론대회를 위한 체험학습

2008. 7. 4(금)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에서 대학생 55명 및 위원회 직원 10명 등을 대상으로 저명인사의 특강, 토론 시연 및 토론대회 안내 등 대학생 토론대회를 위한 체험학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일반적인 아카데미식 토론방식(CEDA)이 아닌 우리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토론 진행방식(자유토론식)을 대학생들의 토론 시연을 보고 체험하는 등 체계적으로 교육하였으며 토론문화에 대한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다.

‘대학생과 정치참여’(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김현대 상임위원) 및 ‘토론의 방법’(단국대학교 김연중 교수)에 관한 특강을 구성, 내·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강의하는 등 대학생들의 토론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였으며, 실제 토론대회에서 활용할 진행방식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과거 토론대회 수상 경력이 있는 대학교 동아리(연세대·경희대 토론 동아리) 소속 학생들로 구성된 시연팀과 KBS 토론프로그램 진행자인 정관용씨의 사회로 시연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학생들은 정치·언론관련 전공 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과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행사 종료후에는 대체로 유익했다는 평가가 많이 있었다.

나. 제4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개최

올해로 제4회를 맞이한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는 위원회가 대학생들의 올바른 토론관 확립 및 민주 시민 토론교육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으로 예선에 참가한 전국 15개 대학교의 72개팀 중 본선에 진출한 전국 12개 대학교의 16개팀이 참가하여 11월 1일(토) 숭실대학교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이성춘)가 주최,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회장 김민기 숭실대 교수)가 주관하고 숭실대학교(총장 이효계)와 MBC(사장 엄기영)가 후원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대회는 “군 모병제를 실시하여야 한다”와 “투표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의 논제로 위원회에서 자체 개발한 토론진행방식(시간총량제를 활용한 자유토론식)을 활용하여 사용하였으며, 대회 심사위원으로 전국 23개 대학교 등의 교수 26명이 심사를 보았으며 20명의 행사진행요원, 8명의 대학생 사회자 등 총 50여명이 행사진행에 참가하였으며 결승전에는 100여명이 참관하였다.

또한, 대회 개최시기가 각 대학교의 중간고사 기간을 벗어나 많은 수의 참가자 접수가 이루어졌으며, 대회 본선을 16강부터 진행하여 심사에 필요한 충분한 심사인력을 확보하여 3인심사제를 도입하는 등 대내·외의 높은 관심속에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다만, 서면심사를 통한 예선 방식은 토론에 있어서 중요한 참가자의 말하는 능력과 자세를 평가하는데 부족한 면이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CEDA 방식이 아닌 위원회 자체 개발 방식인 자유토론형식의 도입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나, 향후 토론대회에 적용시 토론전문가인 관련 교수와의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2-63] 제4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결승전 토론요지

구분	찬 성	반 대
기조연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의민주주의제하에서 투표 참여는 권리인 동시에 의무임. - 투표율 저하로 인해 실효성없는 유인책보다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투표의무제 도입 외국국가의 벌금 부과 등의 불이익 - 공직 참여를 제한하는 식의 불이익을 줘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는 대의민주주의하에서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이므로 개인 권리 불행사장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됨. - 작금의 투표율 저하의 원인은 제도상의 미비가 아니라 정치에 대한 강한 불신의 표시임 - 기권은 정치권에 대한 항의 표시이므로 불이익은 기권할 수 있는 권리의 침해
본 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은 국가에 자기의 요구를 직장해서는 안되며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불이익은 당연함 - 선거는 자유의 영역이지만, 자유의 본질적인 침해가 아닌 한 제한은 가능 - 페널티는 선거권의 제한일 뿐, 침해·박탈이 아니므로 자유권을 근본적 취지를 훼손하지하지 않음. 자유권의 최소한 제한으로 권리 이점을 도모함. - 투표한 자에게 이익을 주는 제도가 유권자를 투표소에 나오게 하는 원인제공의 효과는 없었음. - 투표율 저하는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근본을 해할 우려가 있고 선거참여자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는 강한 규제 방식을 채택하여 투표소로 억지로 가게 함으로 오히려 자유 침해 - 기권에 담긴 정치적 항의를 생각해 봐야함 - 헌법상의 가치관련성이 페널티의 이념적 근거가 될 수 없음 - 인위적 투표율 상승이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궁금 - 민주주의의 자발적 성숙을 저해함 - 국가권력에의 복종에 따른 반발 우려가 있으므로 다른 유형의 인센티브 제공이 효과적 - 투표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헌법 어느 조항에 적용을 받아야 하는가? 헌법 제37조의2에는 해당되지 않음.
맺음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의 불참이 네거티브 의사표시는 아니므로 효력이 없음 - 헌법에 유연한 해석을 통해서 제한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율의 상승이 정치적 수준의 상승을 담보할 수 없음 -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선거(투표)는 국가권력이 개입되서는 안됨



이 대회에서 대상은 연세대학교 조경호, 임지현 학생이 수상하였고, 최우수상은 성균관대학교 차태현, 정현준 학생이 수상하였다. 이 외에 우수상, 장려상을 비롯한 개인별 시상인 스피커상(송실대학교 총장상) 및 사회자상(학회장상) 등 많은 시상이 있었다. 자세한 수상내역은 [표 2-64]와 같다.

[표 2-64] 제4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수상내역

시상내역	시 상 명 칭	수 상 자		상 금		
		소속 학교명	성 명			
대 상	위 원 장 상	연 세 대 학 교	조경호, 임지현	2 0 0 만 원		
최우수상	학 회 장 상	성 균 관 대 학 교	차태현, 정현준	1 5 0 만 원		
우 수 상	위 원 장 상	단 국 대 학 교	김아사, 황효빈	각 100 만 원		
		경 희 대 학 교	김지원, 김태호			
장 려 상	위 원 장 상	한 동 대 학 교	백충렬, 김상하	각 5 0 만 원		
		단 국 대 학 교	박상진, 성신호			
		경 희 대 학 교	안수지, 최용수			
		성 균 관 대 학 교	이애영, 김예진			
Best 스피커상	송실대학교 총 장 상	연 세 대 학 교	조경호	상 장		
2nd 스피커상		성 균 관 대 학 교	차태현			
3rd 스피커상		단 국 대 학 교	황효빈			
		경 희 대 학 교	김태호			
스피커상		서울여자대학교	서연준			
		경 희 대 학 교	안수지			
		청 운 대 학 교	김수지			
		한 동 대 학 교	김상하			
사회자상		학 회 장 상	광 운 대 학 교		김영재	
			부 경 대 학 교		송미경	
	충 남 대 학 교		박기령			
	충 북 대 학 교		김채민			

제 6 절 재·보궐선거 및 교육감선거 토론회 등 관리

1. 개 요

각급토론위원회는 2008년 상·하반기 재·보궐선거 및 교육감선거 토론회 등의 공정하고 완벽한 관리로 정책선거 실현에 기여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정당·후보자의 정책·공약 검증의 토론회로 관리하는 등 시·도토론위원회가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 및 확인·점검하여 관리하였다.

2008년 실시된 상·하반기 재·보궐선거 및 교육감선거에서 총 17회의 선거방송토론이 개최되었다. 기초단체장선거에서는 모두 7회의 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방송연설회는 6회가 개최되었다. 교육감선거에서는 모두 5회의 대담·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표 2-65] 선거방송토론 개최 현황

(단위 : 회)

시기별	선거별	합 계	대 담·토 론 회	방 송 연 설 회
합	계	17		
상반기	구·시·군의장	11	6	5
하반기		2	1	1
교	육	5	5	

2. 주요 추진실적

가. 상·하반기 재·보궐선거 토론회 등 관리

토론회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에게도 방송연설회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가급적 초청대상 후보자의 토론회와 같은 방송시설 및 시간대에 방송이 이루어지도록 협의하였다.

또한, 중계방송사에서 이미 토론회를 위한 중계방송 일정을 통보한 후에 연설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중계방송 일정을 연설회 일정으로 같음하였다. 그리고 연설회의 사회자는 토론회에 이어 연설회가 이어짐에 따라 토론회 사회자가 이어 사회를 진행하였으며 후보자의 연설 순위는 사전에 추첨으로 정하였다.

또한, 합동방송연설회의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였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수화통역 또는 자막방송을 실시하였다. 방송계·학계 등의 외부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을 주제 선정, 질문사항 작성 분야에 적극 활용하고, 종합유선방송사의 중계방송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담당 PD 등 제작 관계자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표 2-66]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방송토론 개최 현황

선거구명	대상	개최구분	장 소	개최일시	중계방송사	사회자(현직)
강동구	초청	토론회	강동구민회관 3층 대강당	5. 31(토) 16:00~18:00	(주)씨엔엠강 동케이블TV	곽은주 (전KBS 아나운서)
	비초청	방송연설				
대구 서구	합동	방송연설	대구MBC 스튜디오	6. 2(월) 15:03~16:20	대구 MBC	김중학 (대구MBC 정경부장)
인천 서구	합동	토론회	(주)ICN 인천방송 스튜디오	5. 30(금) 10:30~12:30	(주)티브로드 새롬방송	성기철 (아나운서)
포천시	초청	토론회	나라방송 스튜디오	6. 1(일) 20:00~21:30	나라방송 우리방송	김환철 (교수)
	비초청	방송연설		6. 1(일) 21:30~21:40		
영광군	합동	방송연설	광주MBC 스튜디오	5. 30(금) 10:30~16:30	광주 MBC	
청도군	합동	토론회	KBS대구 공개홀	5. 30(금) 19:30~20:25	KBS 대구	서태교 (KBS취재기자)
남해군	초청	토론회	진주MBC	6. 2(월) 16:00~18:00	진주 MBC	이영석 (경상대 교수)
거창군	초청	토론회	KBS창원	5. 30(수) 14:10~15:10	KBS 창원	조효래 (창원대 교수)
	비초청	방송연설	KBS창원	5. 29(목) 13:00~17:00	KBS 창원	

[표 2-67]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방송토론 개최 현황

선거구명	대상	개최구분	장 소	개최일시	중계방송사	사회자(현직)
연기군	합동	방송 연설	대전MBC 공개홀	10. 23(목) 13:50~14:50	대전MBC	송인암 (대전대 교수)
울주군	합동	토론	KBS울산 스튜디오	10. 21(화) 23:30~ 10. 22(수) 01:25	KBS울산	이경찬 (영산대 교수)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방송토론은 연기군수보궐선거의 경우,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기회 부여 및 정책·공약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후보자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후보자 토론회 참석대상 후보자 3인중 2인이 네거티브 공세 등을 우려하여 토론회 참석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아 「선거방송토론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연설회는 별 다른 사건·사고 없이 원만하게 진행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울주군수 보궐선거는 울산광역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공영방송관계자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주관방송사, 중계방송일정 및 개최횟수 등에 대한 의견조정 등 중요사안을 처리하여 줌으로써 울주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선거방송토론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였다. 무엇보다 이번 토론회는 모든 후보자가 한데 모여 합동토론회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으며, 외부로부터 지난 제18대 국선에 비해 개인의 신상보다는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중심으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반면, 후보자간의 심도 깊은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후보자주도 토론시간을 다른 토론회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길게 배정하였으나 유력후보자에 치중한 공격적 토론이 되어 밀도 있는 토론이 이뤄지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후보자토론회가 TV토론을 전제로 함으로써 개최일시 등 결정이 위원회의 의지보다 공영방송사의 프로그램 편성결과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고, 위원회의 의견반영은 거의 불가능한 부분이 많아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각종 재·보궐선거에 있어서의 토론회 등의 자세한 개최현황은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나. 교육감선거 토론회 관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가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를 준용하여 개최됨을 시·도토론회위원회에 충분히 안내하였다. 2008년 개최한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등의 자세한 개최현황은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표 2-68] 교육감선거 선거방송토론 개최 현황

선거구명	개최구분	장 소	개최(방송)일시	중계방송사	사회자 (현직)
서울	토론회	KBS 제4스튜디오	7. 25(금) 14:00~15:20	KBS MBC	신 율 (명지대 교수)
전북	토론회	KBS 공개홀	7. 16(수) 10:00~11:50	KBS전주	김승환 (전북대 교수)
		MBC 공개홀	7. 18(금) 14:35~16:00	전주MBC	유기하 (전주MBC 보도국장)
충남	대담회	대전MBC 스튜디오	6.19(목) 10:30~11:30 (15:00~16:00)	대전KBS 대전MBC	라미경 (순천향대 교수)
	대담회	대전KBS 공개홀	6.20(금) 10:30~11:30 (14:10~15:10)	대전KBS 대전MBC	김이경 (충남대 교수)
대전	토론회	MBC 스튜디오	12. 4(목) 10:30~11:50 12. 5(금) 13:50~15:10	대전KBS 대전MBC	라미경 (순천향대 교수)

서울의 경우, 교육감선거가 매니페스토에 의한 정책선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 토론 주제에 후보자의 공약과 실천방안을 포함하여 후보자 상호간 정책이나 공약을 검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유권자들이 짧은 시간에 다수의 후보자를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6인 합동토론 및 후보자 1:1 상호토론 등 다양한 토론방식을 모색하였다.

다만, 주관방송사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토론회 방송시간에 지역방송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는 등 편성에 어려움이 많아 당초 토론회 개최시간

을 60분으로 결정하였다가 재협의하여 80분으로 변경하는 등 충분한 대담·토론회 개최시간과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 확보에 애로가 있었다.

전북교육감선거의 경우, 교육감선거일의 임시공휴일 미지정과 여름 휴가철 그리고 제18대 총선이후 주민직선제에 대한 짧은 홍보기간,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무관심 증대, 후보자의 선거준비기간·경험부족으로 인한 소극적인 선거운동 등으로 좀처럼 선거분위기가 살아나지 않아 후보자 TV토론회를 총 2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또한, 정책으로 경쟁하고 정책으로 선택하는 선진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토론 주제에 후보자의 공약과 실천방안을 포함하여 후보자 상호간 정책이나 공약을 검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다만,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2차 TV 토론회의 경우는 부득이 주관방송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토론회 개최 2일전에 시작시각이 13시 50분에서 14시 35분으로 변경되어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충남교육감선거의 경우, 이번 선거는 후보자가 1인만 등록하고, 일반유권자들의 공직선거에 대한 피로로 비교적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적은 가운데 조용히 치러진 선거로 평가되며, 대담회는 다양한 주제로 2회 개최하여 후보자의 구체적인 공약 사항과 교육 정책 전반에 관한 대담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단조로운 프로그램 진행을 탈피하기 위하여 질문사항 일부를 일반유권자의 현장인터뷰로 제작하여 보다 역동적인 대담회가 되도록 하였으며, 충남 관내의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실시 및 각종 자료를 통한 주제·질문사항 등을 면밀하게 작성하여 관심있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견해나 정책 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였다.